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Basic research for the architecture based on the unification age

엄운진 Um, Woon Jin
여혜진 Yeo, Hae Jin
임현성 Lim, Hyun Sung

(a u r i

AURI-기본-2015-9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Basic research for the architecture based on the unification age

지은이: 엄운진, 여혜진, 임현성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5년 12월 24일, 발행: 2015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9

<http://www.auri.re.kr>

가격: 18,000원, ISBN: 979-11-5659-071-2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Ⅰ 연구책임	엄운진 연구원
Ⅰ 연구진	여혜진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Ⅰ 독일사례조사	유연경 (스튜트가르트대학교 석사)
Ⅰ 연구보조원	장이랑, 이종진, 박설미
Ⅰ 연구자문위원	신동삼 독일건축가 이종석 애드건축사사무소 소장

Ⅰ 연구심의위원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박희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

연구요약

제1장 서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드레스덴선언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발족('14.8.7), 광복절 경축사('14.8.15) 등을 통하여 통일의 기본방향을 강조한바 있다. 건축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 문화유산의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 등 작은 사업부터의 동질성 회복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통일관련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통일대비 건축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단계별 통일준비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축을 3가지 틀로 가정하였다. 첫째,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으로 국토 및 도시분야와 관련한 건축, 건축생산체계와 관련한 건축분야를 포함한다. 둘째,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으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건축, 주민생활서비스와 관련한 건축이다. 셋째,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은 남북한간 동질성회복을 목표로 하는 건축, 미래지향적인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는 건축으로 구분하였다.

제2장 통일대비 건축분야 추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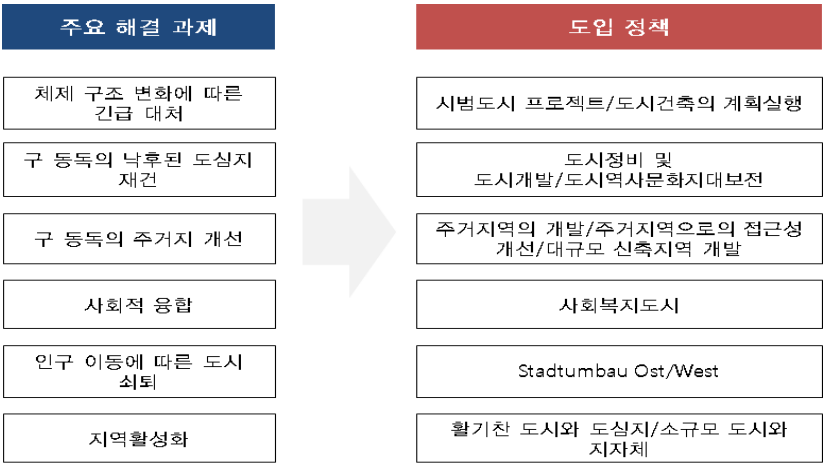
통일대비 건축분야 추진동향은 정책, 사업, 민간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정책분야의 경우, 정부의 정책방향과 통일준비위원회, 중앙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대비 건축분야 사업을 살펴보았다. 사업분야의 경우, 사회적 경제·산업·기술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개발 및 정비사업과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학술교류 및 문화이벤트 등의 사업이 속한다. 정책분야의 경우,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 국토부 등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분야의 경우, 1990년대부터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옛 사

회주의 국가의 몰락에 따라 다양한 북한관련 정보들이 민간에도 제공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사업분야 역시 다양한 금강산관광개발, 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일부 사업이 추진된바 있으나, 본격적인 교류단계로는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3장 북한 건축에 대한 이해

남북간의 건축분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향후 통합,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첫째,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은 북한지역의 건축자재, 전문인력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평양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의 건축도시분야는 남한의 1980년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초산업이 부족하여 건축자재 관련 사업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은 건축법령, 기준 등 건축제도와 주거를 마지막으로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에서는 주체건축, 사회주의 도시를 주제로 살펴보았다. 남한건축과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건축은 국가통제에 따라 건축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한적으로 개별소유 건축물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력 및 관련 자재 등이 건설총계획 등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제4장 독일통일의 건축분야 사례 연구



독일에서는 통일 이전에 도시 및 건축분야의 별도의 정책은 수립하지 않았다. 다만 서독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던 도시 및 건축분야 정책을 탄탄히 구축하고 이를 동독에도 보완, 적용함으로써 동·서독간의 도시건축적인 발전의 간극을 줄여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일 전 서독에서 추진, 진행, 적용 중이었던 도시 및 건축분야 정책인 ‘도시개발지원’ (Städtebauförderung)을 소개하고 통일 후 이 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동독 도시 및 구서독 도시의 활성화 및 균형화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해결과제로 제시되었던 것은 6가지로 ‘체제구조 변화에 따른 긴급 대처’, ‘구 동독지역의 낙후된 도심지 재건’, ‘구 동독의 주거지개선’, ‘사회적 융합’,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쇠퇴’, ‘지역활성화’ 등이다. 각각의 정책 해결을 위하여 시범도시 프로젝트, 도시정빛 도시개발과 역사문화지대를 중심으로 한 보전 정책 등이 진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주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stadtbau로 지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의 복지혜택을 도시전략과 연계한 ‘사회복지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건축분야 과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건축분야 단계별 추진방향

		1단계	2단계	3단계
통일정책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발전 한반도평화정착 통일기반구축		
건축	단계	남북교류 시기	통일준비 시기	통일단계
	정책 목표와 방향	건축분야의 남북분야 협력을 위한 기초원칙 마련 - 호혜적 교류협력 - 경제문화공동체 - 국제사회와의 협력	남북한간 통일준비 법제도 통합을 위한 준비	통합적인 법제도 마련 실행
	분야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건축분야의 실천목표 역시 단계별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1단계로 건축분야의 남북분야 협력을 위한 기초원칙을 마련하는 것이고, 2단계로는 남북한간 통일준비 법제도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 3단계는 통합적인 법제도 마련의 단계이다. 통일방안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오는 통일의 원칙이며 각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적 단계에서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3대 목표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호혜적 교류·협력과 남북간 공동이익의 확대를 통한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추구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통하여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문화공동체를 건설해 ‘작은 통일’을 통하여 제도적·정치적 통합을 통한 ‘큰 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기반 구축은 통일에 대비한 사회역량을 확충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통일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분야의 추진과제 준비와 관련하여서 통일 시나리오 대응한 과제에 대한 검토도 중요할 수 있다. 통일방안과 무관하게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변수 등에 대해서는 통일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건축분야 역시 급변사태 발생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이동 등 단계별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대응도 넓은 범위에서는 준비되어야 할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서 공식적인 통일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관점’에서 단계별 통일에 대응한 필요 과제를 검토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통일의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이며, 아직 건축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응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남북간의 교류가 우선되어야 하며, 추진 가능성에서는 문화 교류 차원이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건축분야 협력사업, 국제협력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재, 건축자산으로서의 건축 -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 활용 과제	1	남북 건축문화 유네스코 등재사업
	2	건축문화재 유지보수 기술자 교류사업
	3	한국건축사에 대한 공동편찬 작업
	4	남북 유적관광지 개발사업
	5	남북한 건축자산 지도 발간
미래 공동의 문화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건축 - 근현대 및 미래 구상을 위한 과제	1	남북한 건축분야 용어사전 발간
	2	북한건축 실태파악을 위한 북한건축동향 발간
	3	통일시대 북한지역 건축공모전 개최
	4	남북한 한옥공모전 개최
	5	통일한국 건축문화 전시관 운영
	6	북한도시건축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법제도적 관점에서 건축 - 기존건축물, 낙후지역 개선	1	노후건축물 감축 및 성능 개선사업
	2	농촌 및 산간지역 건축물 지원사업
	3	농촌지역 축사지원 사업
	4	시범영농단지 조성계획 공동수립
	5	기존 공동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방안
주민생활과 관련한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건축 - 신규건축물 유형별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1	의료시설 확충사업
	2	친환경 결핵요양시설 기술지원 사업
	3	북한 청소년 체육센터건립
	4	학교, 유치원, 보육원 확충사업
	5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적정주거기준 설정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국토 및 도시분야와 연계한 건축 -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	1	도시 주거관련 합작 프로젝트
	2	기초생활권 정주환경 개선 정비사업
	3	경제개발구 사업과 연계한 건축사업
건축생산능력과 관련한 건축 - 건축자재, 인력, 기술 향상	1	건축자재 생산능력 진단 및 향상방안
	2	전문기술인력 공급방안 마련
	3	남북한간 기술격차를 고려한 적정기술 개발 방안 마련
	4	주요 도시별 산업훈련센터 운영

제6장 결론

본 연구의 성과는 기존에 건축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성과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차원에 있다. 기초자료를 통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통일관련 논의를 정리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정보는 북한의 건축실체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향후 연구를 위해서는 그 지점에서 통일대비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통일대비 건축분야의 최근 동향과 정책방향을 통하여 향후 추진가능한 로드맵을 1차적인 초안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초기단계에는 통일대비 건축분야 정책, 연구기관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북한과의 작은 단계에서의 건축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하여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실현가능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향후 각 추진목표, 전략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전문가 그룹 및 타 부처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건축분야 추진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종합적인 전략계획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한반도 통일, 북한건축, 건축교류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1) 연구의 대상	3
2) 연구의 범위	3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4. 주요용어 및 개념	5
5. 본 연구에서의 건축	6
1)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	6
2)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	7
3)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	7
6. 연구의 흐름	8
제2장 통일대비 건축분야 추진동향	9
1. 정책분야 추진동향	9
1)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9
2) 중앙부처별 통일대비 건축분야 추진동향	14
3) 주요기관별 통일대비 추진동향	22
2. 사업분야 추진동향	26

3. 민간분야 추진동향	32
4. 소결	36

제3장 북한 건축에 대한 이해 39

1.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 : 건축자재, 전문인력, 경제특구	40
1) 건축자재 생산능력	40
2) 건축분야 전문인력 및 기관	43
3) 북한권력기구 내 건축관련 기관	47
4)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	48
2.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 : 도시와 건축, 주거	50
1) 도시와 건축 : 도시경영법(2006), 건설법(2011)	50
2) 주거 : 살림집법(2009), 주거현황	53
3.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 : 사회주의 건축, 주체건축	58
1) 시기별 북한건축특성	58
2) 건축문화행사	60

제4장 독일 통일의 건축분야 사례 연구 61

1. 통일 관련 독일의 도시 및 건축 분야	61
1) 통일 이전의 독일	61
2) 전환기 독일	64
3) 통일 이후의 독일	66
2. 도시개발지원 정책 (Städtebauförderung)	77
1) 개요	77
2) 추진 프로그램	77
3) 자금조달 및 투입	78
4) 추진주체별 역할	83
5) 시사점	84
3. 추진 프로그램 적용 사례	86
1) 낙후된 도심지 재건, Berlin Spandauer Vorstadt	86
2) 주거지 개선, Hoyerswerda Neustadt	94
3)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쇠퇴, Wittenberg Jahnschulviertel	102

4) 사회적 융합, Leipziger Osten	106
5) 군부대 반환으로 인한 도시재개발, Osnabrück	110
제5장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건축분야 과제	115
1. 개요	115
2.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116
1)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	117
2) 건축생산능력 제고, 효율적 공급방안	118
3.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119
1) 기존건축물 및 낙후지역 개선	119
2) 신규건축물 유형별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120
4.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121
1)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 활용 과제	122
2) 근현대 및 미래 구상을 위한 과제	123
5. 통일대비 건축분야 단계별 추진방향	124
1) 1단계 남북교류시기	126
2) 2단계 통일준비시기	130
제6장 결 론	133
1. 연구의 성과	133
2. 향후 추진방향 제안	134
참고문헌	135
SUMMARY	138

표차례

[표 1-1] 선행연구 현황	4
[표 2-1] 통일준비위원회 주요보고 안건 중 건축분야 관련 과제(*볼드표시)	13
[표 2-2] 통일부 부서별 정책연구 현황	15
[표 2-3]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핵심과제	17
[표 2-4] 국토계획에서의 통일정책	19
[표 2-5] 국토교통부 부서별 정책연구 현황	21
[표 2-6] 국토연구원 통일대비 주요연구 시기별 현황	22
[표 2-7] 건축분야 관련 사업 현황	26
[표 2-8] DMZ세계평화공원 추진경과(통일연구원 주최 행사)	28
[표 3-1] 북한 건설건재공업부문 기관 현황	41
[표 3-2] 북한지역 건축관련 전문인력 현황	43
[표 3-3] 지방급 경제개발구 현황(계획)	49
[표 3-4] 남북한 건축관련 법 구분	50
[표 3-5] 남북한 설계과정 비교	51
[표 3-6] 건설허가 ‘명시서’ 승인과정	52
[표 3-7] 남북한 건물의 분류 및 등록	52
[표 3-8] 남북한 살림집 비교	53
[표 3-9] 주택의 형태별 가구 수	54
[표 3-10] 화장실 사용 유형	55
[표 3-11] 시도별 화장실 사용 유형	55
[표 3-12] 주된 난방형태	56
[표 3-13] 지역별 난방형태	56

[표 3-14] 주택등급별 규모 및 입주 대상	57
[표 3-15] 북한 도시재건 지원국가 현황	58
[표 5-1]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116
[표 5-2]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119
[표 5-3]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121
[표 5-4] 대북정책 방향과 건축분야 단계별 추진방향	125
[표 5-5] 월간북한동향 및 북한경제리뷰 개요	130

그림차례

[그림 1-1] 북한 및 통일관련 단행본	3
[그림 1-2] 통일연구와 북한연구	6
[그림 1-3] 본 연구에서의 건축의 정의	7
[그림 1-4] 연구의 흐름	8
[그림 2-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개념	10
[그림 2-2] 통일준비위원회의 조직도	11
[그림 2-3] 북한정보포털 내 지도기반서비스 화면	16
[그림 2-4] 제2차건축기본계획 비전, 목표, 추진방향, 실천과제	20
[그림 2-5] 북한건설용어집	21
[그림 2-6]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31
[그림 2-7] 국토지리정보원 북한지도집 표지	31
[그림 2-8] 대한건축학회 건축의 날 행사 북한건축전시	32
[그림 3-1] 구글이미지 검색에 나타난 북한건축	39
[그림 3-2] 구글이미지 검색에 나타난 남한건축	39
[그림 3-3] 실크공동주택(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익명의 건축가, 2011)	46
[그림 3-4] 북한주요기관 및 단체 (정권기관, 외곽기구)	47
[그림 3-5] 북한 지방급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위치	49
[그림 4-1] 통일 이후 주요 해결과제 및 도입정책	66
[그림 4-2] 도시개발지원 프로그램 1990년부터 2010년(통일 후 20년간)	78
[그림 4-3] 구동독, 구서독 지역별 연방정부의 도시개발지원 재정투입 현황 1971~2014	79
[그림 4-4] 동독, 서독 연방정부의 도시개발지원 1991년부터 2009년	80
[그림 4-5] 구 동독 지역 도시개발지원의 공간적 분포 상황 - 1991년부터 2009년	81

[그림 4-6] 지역유형에 따른 도시개발지원수단의 분포 - 1991년부터 2009년까지	82
[그림 4-7]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	86
[그림 4-8] Oranienburger 도로에 있는 예술중정(Kunsthof) 1993년의 모습과 정비 후 모습	88
[그림 4-9] Zwirngraben광장의 도시변화 1930년, 1990년 그리고 2005년	91
[그림 4-10] 중정공간 파사드의 1992년 모습과 새로 개보수된 모습 사진: Klaus Bädicker	92
[그림 4-11] August 도로변 전면건물	93
[그림 4-12] 유리파사드 카페가 있는 중정공간	93
[그림 4-13] 회에스베르다 개요	94
[그림 4-14] Liselotte-herrmann 도로에 있는 조립식 주거건물 철거 후 들어선 도시빌라	94
[그림 4-15] 회에스베르다 오픈 스페이스 계획	95
[그림 4-16] 도시중앙공원	97
[그림 4-17] 조형공원 계획안	98
[그림 4-18] 노이슈타트 현재 모습	99
[그림 4-19] Jahnschulviertel현황	101
[그림 4-20] 1517년 루터의 반박문이 인쇄된 Cranachhof의 1990년과 오늘날	102
[그림 4-21] Johannes-Runge도로에 있는 주택들	103
[그림 4-22] Jahn학교와 주민센터 앞	104
[그림 4-23] 기차역 앞 광장	105
[그림 4-24] 라이프치거 오스텐의 독일제국시기 형성 도시구조	106
[그림 4-25] 표지판 정비사업 표지판	108
[그림 4-26] 오스나브뤼크의 군부대 이전 부지 위치	109
[그림 4-27] Scharnhorst 마스터플랜	111
[그림 4-28] Scharnhorst 내 이노베이션 센터	111
[그림 4-29] Von-Stein 내 대학캠퍼스	112
[그림 4-30] Von-Stein 내 커피자판기 회사 본사 건물	11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주요용어 및 개념
5. 본 연구에서의 건축
6. 연구의 흐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진행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구축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마련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과 관련하여 DMZ 평화공원 구상 등을 발표하였으나 향후 건축 도시분야의 구체적인 실천전략 등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상황이다. 2014년 독일 방문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드레스덴 사례를 통하여 구 동독지역의 성공적인 변화모델을 바탕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모델을 언급하였다. 이후로 대통령소속의 통일준비위원회 발족(14.8.7)과 회의를 통하여 드레스덴선언의 세부실행을 준비하고, 광복절 경축사(14.8.15)에서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 문화유산의 남북이 함께 발굴 보존 등 작은 사업부터의 동질성 회복을 언급하였다.

□ 최근의 통일관련 정책과 관련한 건축분야의 준비방안 마련 필요

통일 관련 대비는 오랫동안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준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주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분야의 통일관련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논의는 통일이전에 개성공단개발사업, 철도·도로연결사업, 금강산관광개발 등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나 SOC공급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좁은 의미의 건축분야와 관련하여서 기존의 건축물 활용방안이나 주거부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및 토목차원에서는 경제협력, 사회기반시설 확충방안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연구 및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북한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기존에 해외에 진출하는 방식이나, 국토개발 관점에서의 사회기반시설 확충방안, 주요 거점도시를 기반으로 한 협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대규모 개발의 관점에서 동질감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방안 필요

건축분야의 통일대비 방안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과 같이 물리적인 연결과 동시에 사회, 문화적인 총체적인 이해와 동질감을 형성하여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 문화재복원과 관련하여 금강산 내 사찰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개성역사유적지구 내 남북 공동 발굴조사 등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전시, 출판 등의 작업은 북한이해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나, 기존의 남북협력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단기적 실행방안과 장기적 추진과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2014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건축교류의 장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은 남한과 북한의 건축 100년을 비교하여 소개하여 최고국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은바 있으며 국내에도 많은 관심이 제고되었다.

따라서,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교류 사업에서부터 사회적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통합방안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일반인 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준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통독의 사례와 관련하여서도 그동안 정치, 사회적 분야에서의 통일분담금, 제도통합방안 등에 대한 검토는 다양하게 소개되어 왔으나, 건축도시분야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였던 상황이다.

2) 연구의 목적

□ 통일관련 기존의 정책방향, 현황자료 파악을 통한 기초자료 구축

- 건축도시분야의 남북협력을 위한 현황파악(자료현황, 추진여건, 주요추진주체)
- 기존연구성과 및 주요연구자료 검토를 통한 건축분야 추진방안 마련 및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참고자료 구축



[그림 1-1] 북한 및 통일관련 단행본

□ 통일대비 건축정책 추진방향, 단계별 통일준비 목표 및 추진과제 설정

- 통일대비 건축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시기별 추진과제 마련
- 통일관련 건축도시분야 각 주체별 역할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역할 정립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 연구의 대상

건축분야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시, 국토분야와의 비교가 필요하므로 도시, 국토분야의 논의과정을 1차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건축분야의 논의로 줄여나가고자 한다. 건축의 범위는 건축 외에도 연관되어 있는 도시설계 및 계획, 주택 분야 등과 도시설계, 공동주택단지재생,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녹색건축 도입방안 등을 대상으로 다룬다.

2) 연구의 범위

시기적으로는 현 박근혜 정부(2013.2~현재)의 주요 정책방향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되, 본 연구가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통일 이전단계에 북한건축에 대한 이해와 기초조사 차원에서 1950년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정책이슈와 현황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통일관련 건축분야의 준비 등에 대하여서는 분단 이후를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축분야에서의 논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통일관련 연구는 국토계획차원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건축도시분야의 구체화하여 장기적 목표, 부문별 추진과제는 마련되지 못하였다. 일부 건축분야의 연구는 북한의 건축, 도시, 주거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검토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준비하여야 할 건축도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차원의 논의에서 좀 더 건축도시분야의 구체적인 논의로 진행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장기적 목표, 방향설정을 통하여 각 세부 부문별 추진과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1-1] 선행연구 현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 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연구자(년도) : 이상준 외(2013) -연구목적 : 북한 국토인프라 분야의 프로젝트 제시 및 실행을 위한 추진과제 제시	-국내외 문헌검토 -비용과 경제적 효과 계량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핵심 프로젝트 발굴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핵심 프로젝트 경제적 효과분석 -핵심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추진체계와 기타 실천과제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연구자(년도) : 이상준 외(2012) -연구목적 : 국토분야의 남북 협력 장기적 목표, 방향 설정과 추진과제 검토	-기존 국토분야 협력사업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을 통한 -국토분야 100대 과제선정 ·학계, 지역연구소(경기, 강원), 통일연구원 전문가 ·동북아 한반도차원의 과제, 분야별 과제로 구분하여 검토	-국토분야 남북협력의 평가 -국토분야 남북협력의 정책방향 ·한반도 여건,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향후 남북경협 추진방향 -국토분야 100대 과제 선정 -국토분야 100대 과제 추진방향
-통일독일의 지역개발 경험과 북한의 지역개발 과제 -연구자(년도) : 이상준 외(2000) -연구목적 : 통일 이전의 교류 협력 실태와 통일 이후 동독 지역개발의 과제를 통하여 북한 지역개발의 시사점 도출	-독일연방건설지역계획청 공동연구 -연구문헌, 통계자료를 토대로 동서독간 교류협력, 지역 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분석 -한국-독일 공동 워크숍진행	-통일이전 동독의 지역개발과 동서독 교류협력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변화 -동독지역에서의 지역개발 성과와 과제 -독일의 교훈과 북한 지역개발의 과제

4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기초연구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남북한 건축 관계 법령 및 제도의 비교 -연구자(년도) : 남효석 외(2000) -연구목적 : 북한 건설관련 법령과 제도를 남한의 건축법과 비교하여 제도적 특성이 건설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파악	-남한의 건축법과 북한의 토지법, 건설법, 도시계획법, 청부건설규정과 북한 건설관련 규정과 제도 비교	-남북한 법령체제 및 건축용어 비교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 -건축위원회/ 건축절차/ 건축주와 계약/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 공사감리 및 사용승인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 구상 연구 -연구자(년도) : 김원배 외(2006) -연구목적:인프라 분야의 개발 우선순위 및 추진과제 제시	-국내외 문헌검토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계량 분석	-북한 인프라개발의 주요 과제 -북한의 인프라개발 소요비용 -단계적인 인프라 개발방향

4. 주요용어 및 개념

□ 통일(Reunification)과 통합(Integration)¹⁾

- 통일의 사전적 의미는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물리적인 단계에서 통합을 의미함
- 통합은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분야별로 합치를 이룬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통합, 사회통합, 문화통합, 법제통합 등 일부 분야의 통합을 의미함

□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 통일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하는 것
 - ‘한민족 공동체형성’, ‘인도적 차원의 접근’ 등의 정책의 기본 방향
-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정치, 군사, 외교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 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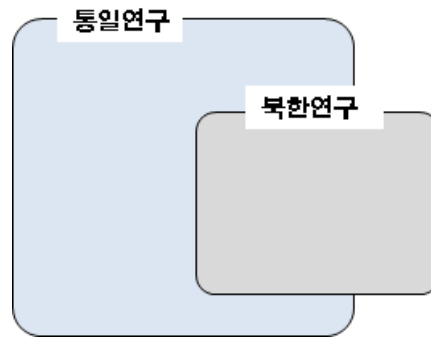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통일과 체제전환

- 남북관계에 있어 사회적 통합으로의 건축이라는 관점 외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건축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통일연구와 북한연구

- 통일연구는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통일방식 등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방법론 까지를 포함한 연구를 의미하며, 북한연구는 연구대상으로서의 북한을 다루는 연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연구를 위해서는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북한건축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림 1-2] 통일연구와 북한연구

5. 본 연구에서의 건축

1) 경제 · 산업 · 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

□ 국토 및 도시분야와 연계한 건축

국토계획과 연계한 지역별 발전전략 등과 연계된 건축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토목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자본, 토지들이 마련된 이후의 작업으로 택지개발이후에 들어서게 되는 건축물 등이 이에 속한다.

□ 건축생산능력과 관련한 건축

건축물의 재료가 되는 건축자재, 건축생산의 주체로서의 인력 및 기술자, 건설도구 기구 등을 의미한다.

2)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

□ 법제도적 관점에서 건축

사회체제의 산물인 법, 제도 등을 통하여 규정되고 있는 건축으로서 법제도적인 시스템과 관련한 건축을 의미한다.

□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인프라기반의 건축으로 공공건축물 및 주택 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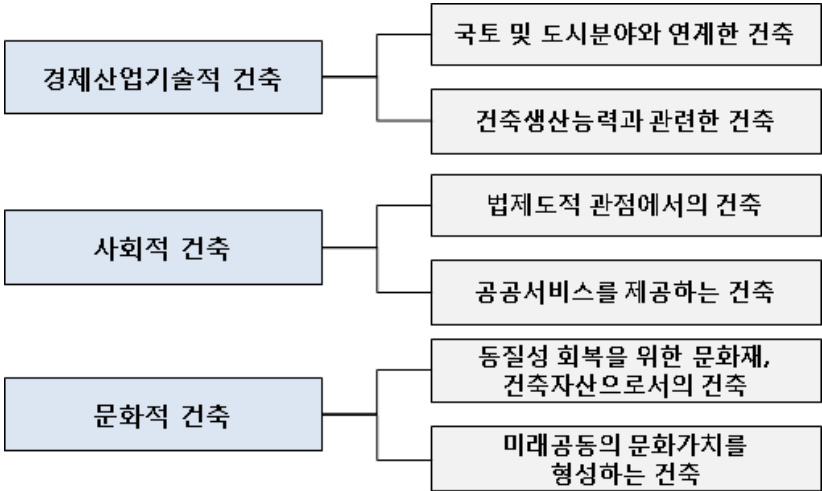
3)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

□ 남북한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재, 건축자산으로서의 건축

남북간의 물리적인 분단이전에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였던 시기의 자산으로서의 상호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이다.

□ 미래 공동의 문화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건축

남북한 분단 이후 문화적 차이를 발생한 건축에 대한 것으로 향후 회복하여야 할 방향과 가치에 대하여 필요한 건축이다.



[그림 1-3] 본 연구에서의 건축의 정의

6. 연구의 흐름

2장에서는 기존에 진행된 통일관련 정책, 사업, 연구를 정리하여 성과 및 한계를 검토하였다. 정책은 각부처, 지자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연구는 부처, 정책연구기관, 민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기초연구의 관점에서 북한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현황정보, 경제,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북한건축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건축분야의 주요이슈와 대응과제들을 통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통일대비 건축분야에 필요한 목표, 전략, 과제를 통일 준비단계별로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성과를 정리하였다.



[그림 1-4] 연구의 흐름

제2장 통일대비 건축분야 추진동향

1. 정책분야 추진동향
2. 사업분야 추진동향
3. 민간분야 추진동향
4. 소결

1. 정책분야 추진동향

중앙부처차원의 통일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기구로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통령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그리고 관련부처인 통일부,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각 주체들의 조직과 주요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직에 대한 파악은 향후 건축관련 통일준비를 위한 조직구상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 2014.3.28)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의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산가족을 위한 상호방문과 북한의 산모와 유아를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사업’이 제안되었다. 둘째,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의 부진, 산림의 황폐화에 대한 대응으로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조성, 한국은 북한주민의 편익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투자,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서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 건설을 구상하였다. 특히, 나진·하산 물류사업, 신의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 추진에 국제기구의 동참을 제안한다. 셋째, 남북한 동질성 회복은 순수 민간 접촉을 확대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를 장려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특구 개발 등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3대 목표는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이다. 세부적으로 제시되었던 추진과제 중 건축도시분야로는 통일인프라 강화 관련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추구’,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관련 북방 3각(남북러 및 남북중)협력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2-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개념

(http://www.unikorea.go.kr/trustprocess/sub/learn_ebook.html(2015.6.20.)

□ 대통령소속 통일준비위원회

- 주요업무2)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기능은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통일 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에 관한 사항, 통일 준비를 위한 정부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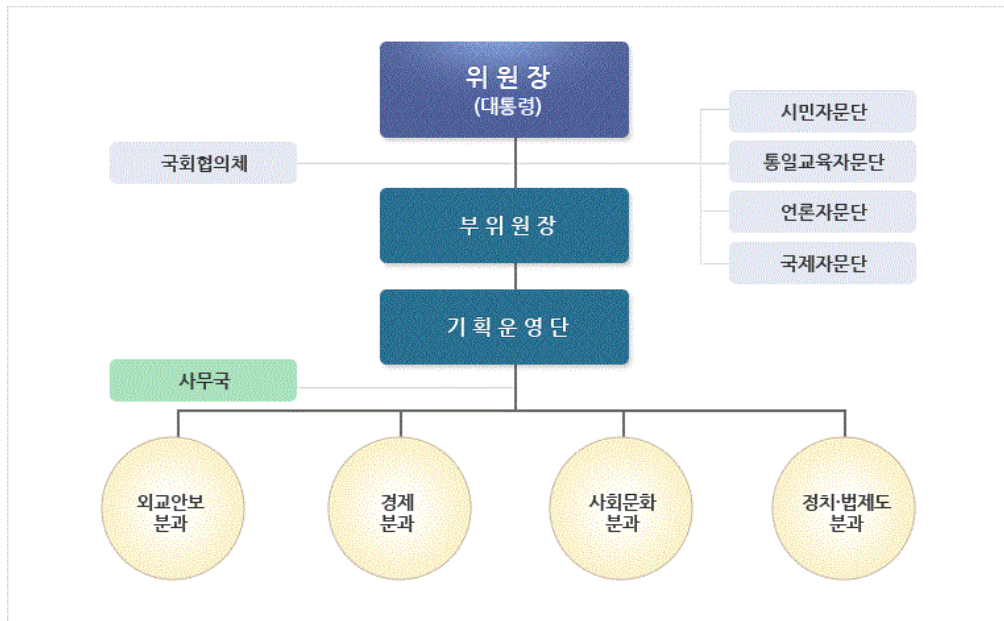
2)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4.3.21.)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 조직

구성은 대통령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지명하고 위원은 50명 이내로 통일준비와 관련된 기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이 대상이 된다. 각 분야별로 민간위원 외에 전문위원으로 총 30여명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통일준비를 위한 각 분과로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의 4개로 구성된다.

- 건축분야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경제·산업·기술, 사회(법제도), 문화적 건축과 유사한 구성을 하고 있다. 각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건축관련 전문가로는 국토연구원장이 경제분과, 사회문화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최이섭 연구원, LH공사 이현주 국책사업본부장은 경제분과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로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부동산, 건축분야의 자산관리를 비롯하여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으로 추진의 관계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2] 통일준비위원회의 조직도
([http://www.pcup.go.kr/main.do\(2015.6.30.\)\)](http://www.pcup.go.kr/main.do(2015.6.30.))))

- 건축분야 추진과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한 주요보고에서 제시된 건축분야의 관련과제를 살펴보면, DMZ세계생태평화공원,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개선, 북한 농촌지역 자립기반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박근혜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은 통일과 관련하여서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도적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는 북한지역 주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농촌개발 및 생활인프라개선 사업, 개성공단 탁아소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표 2-1] 통일준비위원회 주요보고 안건 중 건축분야 관련 과제(*볼드표시)

1차 회의(14.8.7)	
(토론2세션) 평화통일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녹화사업 △ 북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국토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검토 △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 북한 지하자원 협력
2차 회의(14.10.13)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생활인프라 개선과 한반도 중단철도 연결 △ 남·북·중·러 다자 경제협력방안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 개성공단 대상 모자보건 시범사업
정치법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헌장 제정 추진방향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방안
외교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新평화구상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연계 전략
3차 회의(14.12.2)	
-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협력 증진, 기후변화 대응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북한 인권문제 개선, 통일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민간 협력 수준 향상, 통일의 중심 역할	
경제	△북한 농촌지역 자립기반 구축방안
사회문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법외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후보지별 발전구상
외교안보	△통일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위원장단 집중토론회(15.2.16)	
외교안보	국제정세와 통일준비 - 주변 관련국과의 지속적인 설득 및 연계 필요
경제	남북간 실질적 교류협력 추진방안 △북한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협력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경제	통일 이후 사회 복지 및 투자재원 조달
‘남북농업협력으로 여는 북한농촌 발전의 길’ 2차 공개세미나(14.11.24)	
경제	북한농업현황, 남북협력방안, 북한농촌단지 협력방안 등 논의
‘동북아 다자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3차 공개세미나(15.4.9)	
경제	북한을 포함한 3차 협력을 통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 나진하산프로젝트, 북한자원개발사업, 러시아 극동 3각 농업협력
민간위원 집중토론회(15.7.10)	
경제	접경지역 활용과 남북 관광벨트 형성 △ 개성공단 내 근로자기숙사 및 탁아소 신축 △ 동북아개발은행과 중국 AIIB를 연계방안
사회문화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다변화 실현 △인도적 지원방안 모색 : 농업기반 지역개발사업, 한반도 재난, 감염병 긴급구호 대비, 분야별 북한 인력 역량개발 사업 △개성공단 모자보건사업, 탁아소 증축 등
법제도	청소년 대상 통일 관심 제고방안
6차 회의(15.11.5)	
1세션	평화통일외교 종합 추진전략과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
2세션	통일준비를 위한 향후 과제 -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활용방안

* 출처 : 통일준비위원회 홈페이지 내 위원회소식(<http://www.pcup.go.kr/main.do>(2015.11.10.) 재구성)

2) 중앙부처별 통일대비 건축분야 추진동향

① 통일부

□ 통일대비 주요업무

2015년의 주요 추진업무³⁾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파악하였다. 2015년 추진업무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국제사회와 더불어하는 통일 등이 제시되었다. 첫째,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는 광복70주년 민생·환경·문화 통로 개척으로 북한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복합농촌단지’, 영유아 산모 통합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등을 통하여 마을단위의 보건의료, 생활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과제가 제시되었다. 남북주민간 동질성과 관련하여서는 민족문화유산 보전 협력사업과 서울과 평양에 ‘남북겨레문화관’등에 대한 사업이 제시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와 더불어하는 통일에서는 북한 비핵화·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위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국제기구 및 금융과 연계한 북한 민생개선 프로젝트 발굴과 정보자료 통합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 통일관련 조직

통일부의 주요 조직은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정책실은 통일정책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기획, 국제협력, 정책협력, 통일문화, 이산가족, 정착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세분석국은 통일관련 정세와 관련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며 정세분석총괄, 정치군사, 경제사회과로 구성되어 있다. 교류협력국은 남북간의 교류를 담당하며 교류협력기획, 남북경협, 사회문화교류, 인도지원, 인도개발협력 등으로 구성된다. 정세분석국에서는 북한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북한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대비 법령 정비 및 제도는 통일정책실 내 통일기반조성과, 개성공단 등과 관련하여서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등이 담당하고 있다. 남북교류와 관련하여서는 문화분야의 교류관련은 교류협력국 내 사회문화교류과에서 진행하며, 남북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2015년에는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3,306백만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21억7천2백만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산림·환경 분야 협력사업(30억) 등이 지원되었다.⁴⁾

3) 2015 대통령 업무보고(통일부) <http://2015plan.unikorea.go.kr/2015plan/index.html>(2015.7.10.)

□ 정책연구추진동향⁵⁾

통일기반조성과에서는 통일대비한 법제마련을 위하여 남북간 법제정비 대상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다. 2014년에는 노동·교육, 청소년·문화 분야 연구, 2013년에는 경제산업분야, 외교안보국방 분야 등 각 분야별 준비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통일관련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세분석과에서는 북한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실태분석 및 방향성 등에 대한 예측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 통일부 관련기관은 통일교육원 등에서는 통일 준비 관련 교육, 남북협력지원기구단 등에서는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표 2-2] 통일부 부서별 정책연구 현황

관련부서	주요연구(수행기관)
정세분석과	북한 시장의 실태분석 및 변화 방향성 예측에 관한 연구(2013), 김정은 정권의 핵심집단 분석(2012, 세종연구소)
정책기획과	통일한국의 사회갈등 예측 및 해결방안 연구(2015,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독일 통일20년 계기 통일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2010, 베를린자유대)
통일교육원	통일인문학 과목 신규 개발(2013,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디지털통일교과서콘텐츠 시범 개발 연구(2012, 위두커뮤니케이션)
남북협력지원 기구단	개성공업지구 운영 효율화 방안(2011, 연구소2020통일한국) 개성공단 내 집합건물의 구분등기 방안 및 관리준칙 수립(2009,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선영)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 및 건축 관련 개선방안 수립(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덕복)

* 출처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자료, 재구성

건축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생활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서 농촌, 도시의 생활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건축자재분야의 산업현황 조사 및 육성관련 기초연구 추진에 대한 북한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제도화 방안 연구(2014, 현대경제연구원)가 진행되었다. 독일통일의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독일통일통합 총서 제작(2013, 한국세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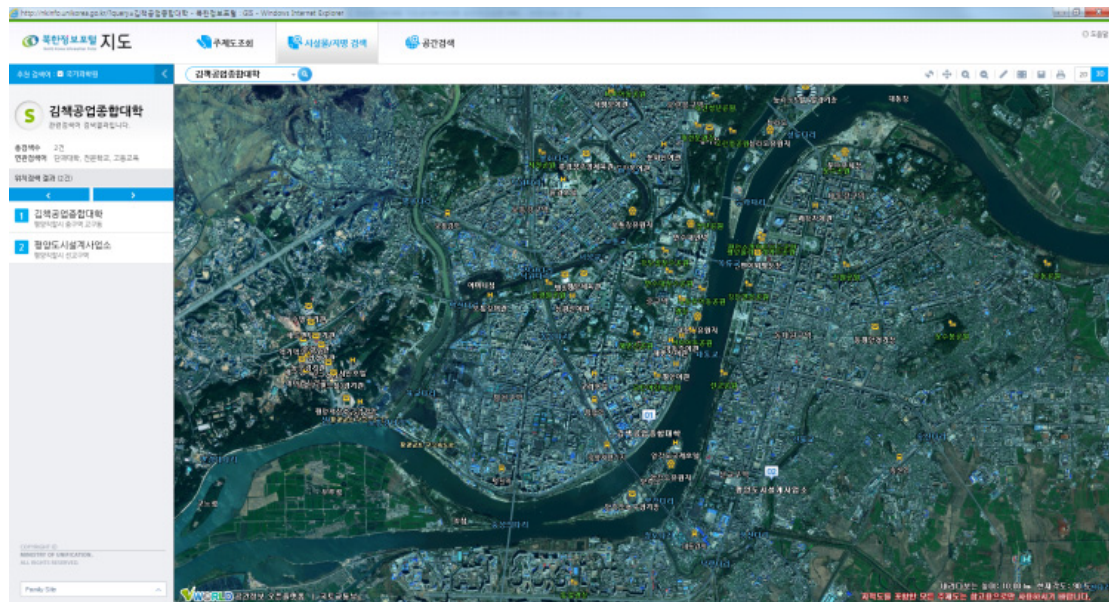
4) 통일부 보도자료, 정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등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마련을 위한 사업에 기금 지원을 결정(2015.6.25)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통일부에서 발주된 정책연구과제 검토결과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역학회). 독일 통일20년 계기 통일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2010, 베를린자유대)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한 사례로는 독일통일 총서4권으로 발간된 ‘구 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관련 정책문서(2013.12, 통일부)’이다. 인프라 재건과 관련하여서 수집된 정책문서를 기초자료로 인프라 재건과 정책적 시사점(이상준, 국토연구원), 구 동독지역 인프라 구축과 동부 재건 프로젝트(베르너 페니히, 이은정, 독일 베를린자유대)연구가 진행되었다.

□ 주요사업

통일부에서는 기존에 제공하여 오던 정보들을 종합하여 지리정보에 기반한 북한정보를 제공하는 ‘북한정보포털 지도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동향정보 등에서 언급되는 주요지역 정보를 지도상에서 검색가능하게 하고 일부 북한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최근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지는 못하고 기존에 텍스트 정보를 위치기반정보로 1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3] 북한정보포털 내 지도기반서비스 화면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② 국토부

□ 통일대비 주요업무

국토부 2015년 주요업무계획⁶⁾을 살펴보면 5대 과제 중 하나로 ‘미래준비(통일)’이 제시되었다. 통일준비단계에 SOC기반시설 구축, 향후 예상되는 개발계획을 위한 계획수립과 기초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과 교류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성격으로 구분하여 보면 종합계획마련, 현황자료구축, 사업추진, 교류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통일부, 환경부 등 개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도시, 주택, 환경 등 분야별로 북한국토실태 DB구축 중에 있다. 건축분야과제는 북한 건축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단계로 건축물 유형, 총량,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표 2-3]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핵심과제

핵심과제명	담당부서	과제성격	건축분야 연계성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 플랜 마련	국토정책과	종합계획마련	○
남북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토지정책과	현황자료구축	○
북한 건축현황 조사	건축정책과	현황자료구축	○
북한 주거현황 조사	주택정책과	현황자료구축	○
북한 국토실태 DB 구축	국토정보정책과	현황자료구축	○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안 마련	지역정책과	사업추진	
통일 화합의 숲(가칭) 조성	용산공원조성 추진기획단	사업추진	
유라시아 북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교통정책조정과	종합계획	
세계물포럼 남북 공유하천 특별세션 운영 추진	수자원정책과	교류사업	
세계도로대회 특별세션 운영 추진	도로정책과	교류사업	

* 출처 :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재구성

□ 통일관련 조직

2015년 3월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에는 통일과 관련하여서 별도의 통일준비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통일부와 공동으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미래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권역별, 단계별 과제를 제시하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입지, 도시·농촌, 주택, 철도, 도로, 항만, 항공, 수자원 등의 분야별 계획을 지역별 공간별로 종합하여 제시하며, 남한 우선 추진사업,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협력 사업 등의 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⁷⁾

6)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http://www.molit.go.kr/2015plan/> (2015.2.5.) 및 보도자료(15.1.23)

7)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연구’ 과업지시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국토계획과 통일

국토계획은 1972년부터 국토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위한 기본계획이다. 제3차 국토계획(1992-2001)에서 통일관련 정책이 기본목표 중 하나로 처음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지역에 대한 개발 관리방안이 중점으로 다루어졌고 남북공동개발사업 추진이 제시된바 있다.

최근의 계획인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통일국토가 기본목표로 설정되었다. 남북간의 계획에서 동북아시대를 고려한 새로운 국토경영이 대두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공동개발, 남북간의 교통망 등 구체화된 계획들이 제시되고 있다. 2011년의 재수정계획에서는 DMZ일원의 평화생태관광벨트 조성, 접경지역 평화지대 구축과 더불어 북한생활기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상하수도, 노후 주택 등에 대한 건설 물자 및 기술지원 등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제4차 국토계획(2000~2020) : 기본목표로 통일국토 제시
 - (기본목표)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 (개발전략 및 정책) 남북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조화로운 통합을 지향
 - 남북한 접경지역을 생태계를 보전하는 보전지역, 휴양시설 이이 들어서는 준보전지역,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맡게 될 정비지역으로 구분해 관리
 - 접경지역관리에 특별법을 제정
-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2006~2020) : 동북아협력사업차원에서 전략 강화
 - (기본목표)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복지국토
 - (개발전략 및 정책)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조성
 - (교통) TCR, TST등 남북한-동북아 연결교통망 구축
 - 1) 접경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를 개발
 - 2) 접경지역의 주요생태계 및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3) 북한에서 지경학적 잠재력이 높고 기반시설이 확보된 거점지역을 경제특구로 남북이 공동 개발하도록 추진
 - 4) 개성공단을 호혜적 남북경협의 모델사업으로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도 산업·교역·물류 거점을 조성하며, 북한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 및 인프라 확충을 지원
 - 5) 남북 간의 철도, 도로, 공항, 항만이 연계된 한반도 통합 물류망을 구축

- 6)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 7)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양수산자원의 공동조사 및 개발
 - 8) 백두대간 및 산림의 보전
 - 9) 북한의 하천 및 연안역 보전에 남북한과 국제환경기구의 협력을 추진
- 제4차 국토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에서는 초국경적 관점에서의 전략제시
 - (기본목표)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 (개발전략 및 정책)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자연친화적, 안전한 국토 조성,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녹색교통국토 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세계로 열린 신 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1) DMZ 일원의 평화·생태·관광자원을 결합하여 평화생태관광벨트를 조성
 - 2)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접경지역 평화지대 구축
 - 3) 북한의 전력·교통·물류시설 등 산업 인프라시설 개발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의 경제성 있는 지하광물의 남북한 공동개발을 통해 저렴한 산업자원을 확보
 - 4) 북한의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과 노후 주택 등을 정비하기 위한 건설 물자 및 기술 지원 등

[표 2-4] 국토계획에서의 통일정책

구분	1차 국토계획 (1972~1981)	2차 국토계획 (1982~1991)	3차 국토계획 (1992~2001)	4차 국토계획 (2000~2020)
기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국토자원개발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확대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형성 · 생산적·자원절약 국토이용체계 · 국토 환경보전 · 남북통일대비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국토 · 녹색국토 · 개방국토 · 통일국토
주요 개발 전략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 교통통신, 수자원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의 지역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 · 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 · 후진 지역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억제 · 신산업지대 조성 · 산업구조 고도화 · 종합적 고속교류망 구축 · 남북교류지역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출처 ; 1-4차 국토계획보고서, 재구성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 통일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15-2019까지 국가에서 추진할 건축분야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주요계획이다.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9개 추진방향 중 건축문화융성 차원에서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가 추진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민족동질성 회복 및 통일이후 건축자산관리를 위한 ‘북한 건축문화 공동 연구’와 DMZ를 대상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 미래 도시건축 모색’의 실천과제가 제시되었다. 실행방안에 대한 세부단위과제로 각각 ‘북한 건축자산 공동 실태조사’,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DMZ공동개발사업 추진’, ‘남북 맞춤형 미래 주택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비전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 구현,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목표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 문화 융성
추진 방향	1.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1. 공공건축 효율화	1. 지역 고유의 건축 문화 창달
실천 과제	1-1-1. 안전한 생활공간 환경 조성 1-1-2. 건축안전 제도 기반 구축 1-1-3. 건축안전 인식 향상 및 역할 강화	2-1-1. 공공건축 프로세스 체계화 2-1-2.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	3-1-1.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 3-1-2. 한옥문화의 브랜드화 3-1-3.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확산
추진 방향	2. 생활밀착형 공간복지 체계 구축	2.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2. 국토경관 향상
실천 과제	1-2-1.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1-2-2.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 복지공간 조성 확대 1-2-3. 근린생활권 단위의 공간 복지시설 통합 연계	2-2-1. 건축서비스업무 조달시장 신진화 2-2-2. 민간 건축시장 거래환경 개선 2-2-3. 창조적 인력양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3-2-1. 경관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 형성 3-2-2. 경관형상·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추진 방향	3.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3. 녹색건축 실현	3. 통일한국 건축 비전 제시
실천 과제	1-3-1. 건축 리뉴얼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축 역량 강화 1-3-2. 도시내 기존 건축물 유휴 공간 재생 활성화 1-3-2.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 재금	2.3.1. 녹색건축물 기준 신진화 2.3.2.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2.3.3. 녹색건축 산업 육성	3-3-1. 북한 건축문화 공동연구 3-3-2. 남북 공동 미래 도시 건축 모색

[그림 2-4] 제2차건축기본계획 비전, 목표, 추진방향, 실천과제
(국토교통부(2015),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자료,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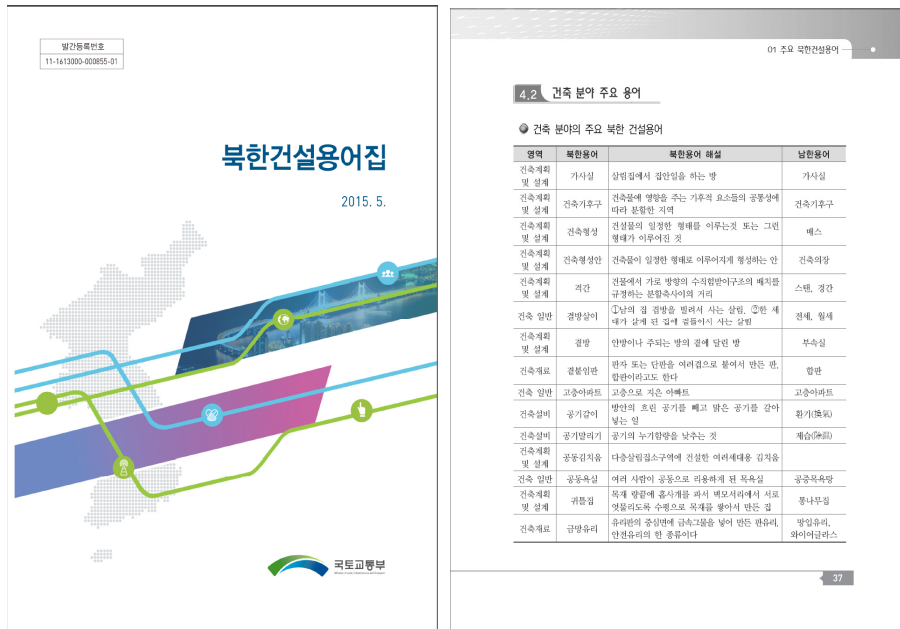
□ 정책연구 추진동향

2014년부터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과에서는 북한 건설과 개발사업 제도에 관한 현황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연구내용은 북한지역 건설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영상자료 기초연구, 탈북자 증언, 북한 보도자료, 중국 내 관련 전문가 등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제도분야 연구, 건설용어 등이다. 최근에는 한반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표 2-5] 국토교통부 부서별 정책연구 현황

관련부서	주요연구(수행기관)
기획조정실	통일대비 남북한 국토인프라분야 제도 통합에 관한 기초연구(2012, 국토연구원)
국토정책과	북한 건설·개발 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2014, 토지주택연구소) 북한지역 도시 및 산업입지 개발 연구(2015) 통일대비 북한지역 주택현황 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2015)
국토지리정보원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지도 공동활용 기반 구축(2014) 통일시대 대비 북한지역 근대 측량자료 보존 사업 (2015)

* 출처 : PRISM자료 재구성



[그림 2-5] 북한건설용어집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3989)

3) 주요기관별 통일대비 추진동향

① 정책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주로 국토발전계획의 관점에서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 등과 관련한 연구(이상준, 2013), 국토개발관련 추진과제 연구(이상준, 2012)가 수행되었고, 주요 도시거점에 대한 개발여건 등을 검토하여 통일 이후 도시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이상준, 2011, 2012)를 통하여 국토 및 도시분야 전반에 대한 선행연구가 검토된바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통일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동독지역 공간구조 및 도시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2000년대에 남북한 화해무드를 배경으로 국토발전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및 협력방안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독일사례에서 공산국가에서 자본주의로 체제가 전환되는 국가들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었다. 동시에 북한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성영상 등을 활용한 연구방법론 등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주요거점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남북한간 제도적 차이에 대한 기초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표 2-6] 국토연구원 통일대비 주요연구 시기별 현황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토발전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2001) ·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과제(2013)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연구(2014)
도시	공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이후 북한지역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및 도시정책방향에 관한 연구(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2011-12)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후 동독지역의 공간구조 변화(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전환국의 도시발전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2001) 	
정보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실태분석(2004) 	
정책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2012) · (수시)국토분야 남북한 제도비교와 정책과제(2014)

□ 통일연구원

통일분야에 관한 정책과제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한 인프라개발관련 연구를 국토연구원과 협동과제로 진행한바 있다. 체제전환국의 국제협력 사례를 통하여 북한 개발 프로그램 수립의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교통, 에너지, 수자원 분야별로 다루어 졌다. 또한, 통일관련 정보의 통합적인 유지관리 등에 대한 연구⁸⁾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주로 정치, 외교, 군사, 대남정책, 경제정보 등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 통일관련 법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정책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법령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보고서 및 현안분석 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북한법률용어의 분석, 각종 북한관련 법제의 현안분석을 진행하였다. 2000년대에는 남북간 관광 및 개성공단 등 경제분야 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관광협력, 무역관련, 공업소유권보장, 회계, 교육 등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북한의 헌법체계에 대한 연구와 법령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경제협력지구개발과 관련한 부동산관리법제 관련 연구 등이 진행된바 있다.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 분야를 전담하는 북한경제연구부가 별도로 운영 중에 있다. 북한경제 실태 연구와 남북한 경제협력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주요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경제리뷰를 매월 발간하여 북한경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향과 분석을 통하여 최근 이슈들을 진단하고 북한관련 연구자료 소개 및 주요 북한경제관련 자료, 주요기사 목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현황 파악을 위한 주요경제자료의 검토 등과 관련한 ‘북한 경제의 분야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에서의 시사점’(2014, 이석),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2013, 이석)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8) 통일연구원(2010, 2011), ‘북한정보관리체계 실태조사’,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0년대 초반 남북경협의 틀 속에서 추진되었던 다양한 SOC사업의 추진방안과 관련하여서 ‘남북한 건설기술 지원 및 교류 활성화방안(장상욱(2002.1))’가 진행되었다. 최근, ‘북한 SOC구축 지원 전략수립 연구’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시범사업, 세미나(북한 건축인프라 개선 세미나(2015.6.4.) 등의 행사를 통하여 통일관련 기술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1993년에는 탈북 건축가인 김영성⁹⁾이 일부 연구에 참여한바 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분야의 과학기술개발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상 토목 및 건축분야에 대한 통일대비 추진과제에 대한 기획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통일대비 효율적 북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 구축 기획(대한토목학회, 2014.11~2015.11),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대한건축학회, 2015.7~2016.2)’ 이다. 건축분야의 주요 추진내용은 북한의 건축산업 현황조사 및 분석, 통일 시 북한 건축인프라 개선수준 및 목표설정, 정치·사회·기술적 여건을 고려한 북한 건축인프라 개선 마스터플랜 마련, 북한 건축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개발기술 적용 타당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에 대한 추진 시나리오 구축 등이다.

② 주요공공기관 및 지자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토지주택공사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책사업본부, 남북협력처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성공단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택 및 기숙사, 산업단지 등에 대한 분야에 실질적인 사업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내 북한연구센터를 통하여 북한연구자료 구축 및 연구개발 기획, 수행 및 지원 업무 진행¹⁰⁾하고 있다. 주요연구로는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방안 연구(2014, 김두환), 한반도 공동발전구상 수립 연구1(2013, 김두환), 남북한 협력적 공단개발방안 연구(2012, 김두환), 통일 후 북한지역주택 수요-300만호 이상

9) 1992년 탈북한 건축가로 이후로 북한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대한건축학회 건축계획위원회 특별강연회, 북한의 건축양식들, 1993.6.16.)한바 있음

10) 한국토지주택연구원 홈페이지 내 북한연구센터 소개

http://lhi.lh.or.kr/research/research_field04.asp?Mcode=3&sDivision=00011240

(2014.5, 김용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ERIK저널) 등이 있다. 주요 행사로는 북한 건축문화 콜로키움(2014.10.30.), 동북아시대 북한 개발협력 세미나(2014.9.23.), 통일대비 철도 중심 입체복합도시 구축 대토론회(2014.9.11.) 등이 진행되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일국가자산연구포럼 등의 조직을 통하여 남북경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자산관련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분기마다 북한지역 국가자산현황과 제도 동향조사연구, 독일 등 주요 체제 이행국 사례 심화연구, 통일 한국 국가자산관리 현안 과제 도출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5월에는 통일국가자산연구센터를 개설¹¹⁾, 6월에는 북한 국영기업관리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한바 있다.

□ 경기도

경기도는 북한지역과 접경된 지역이라는 특성상 별도 조직이 마련되어 있다. 균형발전기획실 산하에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조직으로는 남북교류협력팀, 통일기반조성팀, DMZ정책, 보존, 관광팀이 있다. 남북교류협력팀은 남북교류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방안 마련 대북지원 관련 국제기구 협력, 국제회의 추진 통일 및 남북협력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한다. 통일기반조성팀은 연간 경기도 통일교육계획 수립 남북 SOC 및 시설사업 추진, 관리 남북 경험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남북통일 대비시설 유치 및 법제도 마련, 통일교육활성화 조례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관련 주요사업으로는 개성한옥보존 사업이 추진 중이다. 통일부 보도자료¹²⁾에 따르면, 개성 한옥 보존 사업 및 개선 한옥 보전관련 국제학술회의 협의 진행 등을 위하여 경기문화재단 이지훈 책임연구원의 4명)하기 위한 것으로 “민족공동문화유산 보존 사업” 차원에서 방문 승인이 이루어졌다. 경기도 남북교류 관련보고서¹³⁾에서에 따르면, “2008년 경기도와 북한 민화협이 체결한 ‘개성지역 역사유적복원 사업 합의서’에 기반한 것으로서 2012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기초조사, 국제학술회의, 남북실무협의를, 개성한옥 보존 중장기 구상 수립 등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11) 머니투데이뉴스(2015.5.6.) 캠프, ‘투트랙’ 통일연구 시동... 전남 연구센터 설립

12) 통일부 보도자료(2014.7.1.) 개성 한옥 보존 사업 관련 방문 승인

13) 김동성, 신종호, 노진국(2014), 「2014 경기도 남북교류 기본구상」, 경기개발연구원, p53-54

2. 사업분야 추진동향

건축분야 관련 사업은 ‘개발 및 정비’, ‘학술 교류’, ‘문화이벤트’ 등으로 구분되고 현재는 직접적인 교류는 정체된 상황이다. 과거(2010년 이전) 경제협력 및 관광지구 개발의 일환으로 북한 내 직접 시설 건립 및 인도적 시설 지원이 추진된바 있고 이와 함께 문화재 등 역사자산 등에 대한 학술교류도 추진된바 있다. 하지만, 2012년 5·24 조치이후 남북 교류 경색 등으로 북한 내 직접적인 지원과 교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과의 인접 지역에 대한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문화 행사 등을 통해 남한의 일방적인 접근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2-7] 건축분야 관련 사업 현황

구 분			세부내용	시기	주체
개발및정비	북한 내	경제협력지구	개성공단 공장 신축사업	2000	현대아산, 통일부
		관광지구	금강산 아난티 골프&리조트 등	2008	한국관광공사, 에머스퍼시픽, 일업인베스트먼트 등
			금강산 호텔 및 외금강 호텔 신축공사		현대아산
		시설건립지원	유경 정주영체육관	2003	현대아산
			세계평화센터	2007	평화자동차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병동	2008	어린이어깨동무
			농촌 살림집	2009	미국 봉사단체 ‘풀러센터’
			남포 소아병원 입원병동	2010	어린이어깨동무
			평양과학기술대학	2010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북한 외	접경지역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마련	2011	안행부 지역발전과
			대성동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2015	안행부 지역발전과
		DMZ	DMZ세계생태평화공원	2015	통일준비위원회(통일부 등)
문화이벤트	문화재발굴및복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201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금강산 신계사 복원	2007	조계종, 금강산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 문화재청
			개성 영통사 복원	2005	천태종, 개성영통사복원위원회, 문화재청
			평양일대의 고구려 유적 학술조사	2005	고구려연구재단, 김일성대학
			평양 안학궁터 발굴	2006	
	전시		2014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2014	조민석, 국내외 건축예술분야 작가
	공모		공간학생건축상 ‘판문점 조성사업’	2001	공간건축
			이상건축상 ‘북한건축’	2005	이상건축
			공간학생건축상 ‘DMZ 평화의 플랫폼’	2014	공간건축
			2015 정림학생건축상	2015	정림문화재단
기타	정보인프라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2012	법무부/ 법제처
			지리정보화 사업	2005	국토지리정보원

① 개발 및 정비사업

□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지역에 추진된 건축사업

2000년 이전 북한 내 개발에 따른 직접 시설 지원사업과 2000년 이후 인접지역에 대한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북한지역 내 개발사업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시설건립 지원사업은 류경 정주영 체육관, 세계평화센터,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병동, 농촌 살림집, 남포 소아병원 입원병동, 평양과학기술대학 등으로 주로 민간협력 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건립과정에서 북한지역에 건축설계 경험 등이 일부 축적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분야 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한 1차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각 사업 추진시 설계, 시공 등의 모델은 향후 건축지원사업 사례를 검토하여 보면, 건축물 각 조성단계-기획, 부지선정, 설계, 시공, 전문인력-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각 건축관련 기관별(정부,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소 등) 역할 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사업유형들인 관광개발사업은 금강산관광개발사업, 공단지역개발은 개성공단사업, 건축지원사업은 평양에서 이루어진 각종 건축사업의 문제점과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및 기록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사업에 추진주체가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하면, 민간부문으로 자료확보 등에는 제한이 있는 상황이지만, 월간 SPACE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 일부가 소개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식화된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 금강산 아난티 골프&리조트 건축 프로세스

	남한제도	실행(북한)
설계	건축허가	위치지정 신청
	- 설계도서 검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서 사후 확인
시공	자재공급	남한에서 자재를 공수 조립식 건물, 글루램(목조)
전문인력	기술자-관련자	북한 기술자, 남한 감리
기타	의사소통의 문제 - 원격작업을 위한 (통신 등의 문제)	

출처 : “북한에서 건축하기 3-어린이어깨동무병원, 금강산 아난티 골프&리조트” 월간 SPACE 2013.2(534호) 재구성
http://www.vmspace.com/2008_re/kor/sub_emagazine_view.asp?category=architecture&idx=11713

□ 남한에서 추진 중인 접경지역 건축사업

• DMZ세계평화공원 사업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적인 사용에 대한 사업모델의 하나로 제시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주요한 사업으로 살펴볼 수 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92년 세계자연보전연맹이 DMZ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남북한 양측에 제안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로 2009년 환경부 DMZ 생태·평화공원 관련 기본 연구를 실시한바 있으며, 2010년에는 환경부, UN,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세계자연보존연맹)이 DMZ 생태·평화적 관리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계평화공원 조성 권고문을 채택한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5월 미 의회연설에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였고, 정부 국정과제 주요 추진계획에서 관련 사업 포함¹⁴⁾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15년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 고성 3개 지역이 유치 신청 중인 상황이다. 통일연구원 내에는 통일준비연구단(조민 본부장) 내 DMZ세계평화공원 연구분과 운영 중이며 관련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표 2-8] DMZ세계평화공원 추진경과(통일연구원 주최 행사)

행사명	일시	주요내용
제 1회 DMZ 세계평화공원 포럼	2013.10.17	조한범(국제관계연구센터장)이 DMZ 세계평화공원 포럼 소개
제2회 DMZ 세계평화공원 포럼	2014.1.21	통일연구원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추진단이 DMZ 세계평화공원과 유라시아협력이라는 발제문 발표
제 3회 DMZ 세계평화공원 포럼	2014.12.3	조한범(통일연구원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추진단 간사)가 경과보고를 하고 함광복 한국 DMZ연구소장이 제5회 Asian Leadership Conference의 DMZ 세션 의의와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제4회 DMZ 세계평화공원 포럼	2014.8.28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창의 융합형 남북협력 및 그린데탕트, 동북아 생태 평화 이니셔티브, 세계 생태 평화 문화의 거점화 등을 소개
제5회 DMZ세계생태평화공원 학술회의	2014.12.3	DMZ 세계평화공원의 생태 평화적 의의를 모색하고, 녹색기술을 적용한 활용 방안을 제안 거점후보지역(파주, 철원, 고성)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발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국민공감 국내심포지엄	2015.2.24	생명과 평화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이라는 주제로 인문, 역사학자 및 문화체육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공감 심포지엄 개최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 내 행사자료, 재구성

14) 조한범(2013),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DMZ 세계평화공원’, 희망의 DMZ세계평화공원 학술회의 자료집, 통일연구원 p55-56

- 남한지역 내 대성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안부 지역발전과에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민통선 내 선전마을인 대성동 마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성된 마을로 선전마을로 만들어진 다양한 접경지역 마을 중 하나이다. 1970년대 조성이후 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이용권한이 민통선 내의 주민들에게 제공된 상황에서 주택 개보수 등에 제한이 있어서 통일준비와 관련하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대성동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

-15.1.23 2차 보도자료 :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본격 추진

: 대성동 마을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총사업비 24억

- 15.2.10 1차 실무회의 진행

: 주택보수, 기록전시관, 마을경관, 마을공동체 4개 분과의 실무추진단 구성

: 참여주체는 국가기록원, 경기도, 파주시, 한국해비타트, 경기문화재단, KT 등

: 47개 동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택 기본현황, 노후도, 주민요구사항 파악, 마을 도면화 작업 진행(해비타트, 파주시)

* 별도로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대성동마을 민속조사보고서를 통하여 보고서 발간(2015.1)

출처 : DMZ통합정보시스템 내 대성동마을 : <http://www.dmz.go.kr/korean/wantknow/step2>

② 문화 이벤트

북한건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전시 및 학생대상 공모전, 문화재 발굴사업 등의 문화 이벤트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 2014 베니스비엔날레 한국전

격년으로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건축전의 소재로 남북한 건축을 테마로 다루면서 북한건축을 세계건축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의미있는 전시였음을 확인받은바 있다. 주관기관은 문화예술위원회이며 참여 커미셔너는 조민석, 배형민, 안창모가 참여하였고, 이외에 3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100년 건축사를 정리를 테마로 한 국제전시로 북한건축관련 자료수집을 위하여 북한에 대한 자료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해외작가들이 진행하였던 사진, 이미지, 연구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전시를 진행하였다. 귀국전을 통하여서도 국내에 남북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행사로서 평가받았다.

- 학생대상 건축공모전

2015 정림건축학생상(정림문화재단 주최)은 북한지역의 개성 시내를 사이트로 한 학생공모를 진행하였고, 2014 공간학생건축상(공간사 주최)에서는 ‘DMZ 평화의 플랫폼’을 주제로 DMZ내 다양한 건축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2005 이상건축상(월간 이상건축 주최)에서도 통일 후의 주거를 주제로 한 ‘남남북녀’라는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공모전과 연계하여 진행된 세미나에는 탈북건축가인 김영성의 ‘북한의 살림집’, 서울시립대학교 박철수 교수의 ‘남한의 공동주택’을 주제가 다루어졌다.

- (문화재청) 문화재 공동발굴 조사 사업

민족정체성 정립차원에서 문화재 발굴 및 복원사업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문화분야의 협력사업 추진된바 있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사업(2007), 북한 신계사 복원사업(2007)을 비롯하여 개성지구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학술토론회(2005) 등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만월대 발굴사업의 성과가 고궁박물관에서 전시된바 있다.

③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 법제도 종합지원 사업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사업

통일부 정책기획과, 법무부 통일법무과,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¹⁵⁾에서는 통일관련 법령정보 및 연구자료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법령정보는 북한법령, 남북교류 국내법령, 체제전환국 등 외국법령, 남북법령 비교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연구자료는 북한법제, 남북관계법제, 통일대비법제, 외국법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자료 중 건축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북한도시경영법에 대한 연구(최종권, 2012)’, ‘북한 건설법에 관한 연구(김현희, 2012)’를 통하여 북한도시건축법령과 국내 건축도시관련 법령에 대한 비교연구를 기초연구로 진행한바 있다. 향후 통일대비 법령은 통일방식에 대한 기초 등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비교연구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15)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 <http://www.unilaw.go.kr/mainWeb.html>

□ 지리정보사업

- 국토지리정보원 북한정보 서비스 사업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14년에 통일연구 및 경제협력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에 1/25,000 및 1/50,000축척의 지도자료를 공개하였다.¹⁶⁾ 이전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1년에는 북한지역 지세도가 1/250,000 축척으로 작성되어 북한지역 지형정보가 제공된바 있고, 2005년에는 접경지역에 대한 대축척지형도 제작, 2007년부터 북한 전역의 영상지도, 지형도, 수치지도, 수치표고자료 등을 제작하여 2012년 11월부터는 1/25,000에 대한 수치지형도의 상업적 판매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지도 공동활용 기반 구축(2014년)’을 진행하였고, 주요 도심지역까지 확인가능한 1/5000지도 제작을 추진 중이다. 북한지역에 대한 GIS자료도 구축하고 있으나 초기단계로 기초적인 정보만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통일대비 건축분야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건축물 정보들이 연계되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초기단계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그림 2-6]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www.unilaw.go.kr)



[그림 2-7] 국토지리정보원
북한지도집 표지

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3.28.) 닫혀있던 북한지도, 일반에 모습 드러내 : 북한 지도(지형도, 위성지도, 수치지형도) 3,28부터 공개

3. 민간분야 추진동향

□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에서는 통일건축산업위원회(옥정호 교수) 등을 통하여 통일건축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북한건축에 대한 연구성과 종합, 북한 건축산업 및 환경 파악, 남북전문가의 인적교류와 학술교류, 통일 이후 학문적, 산업적 발전 계획 수립 등이다. 학술단체의 특성상 통일대비한 학술연구 등이 논문이나 건축지 등으로 발표되고 있다. 2015년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로 ‘통일대비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학회 7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된 건축의 날 행사에서 통일주제로 이슈로 다루어졌고 세미나, 및 전시가 진행한바 있다. 다만, 북한과 학술단체 차원에서의 교류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민간차원의 학술교류 부문의 사업추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2015.8-2016.3) 개요

- (목표)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핵심 기술 발굴, 통일이전에 건축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통일비용의 절감 및 통일 후 예상되는 건축주거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
- (내용 및 범위) 북한의 건축산업 현황 조사 및 분석, 통일 시 북한 건축인프라 개선 수준 및 목표 설정, 정치·사회·기술적 여건을 고려한 북한 인프라 개선 마스터플랜 마련,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개발기술 적용 타당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 추진 시나리오 구축

(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aia.re.kr/portal/landmark/readTskView.do?tskId=101926&yearCnt=1&cate1=&cate2=&cate3=&year=&bizName=&psnNm=&orgNm=&tskName=&sort=&pageIndex=8&menuNo=200060>



[그림 2-8] 대한건축학회 건축의 날 행사 북한건축전시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개성공단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법적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간에 개성공단 인허가 업무지원협약 체결에 근거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 공업지구 디자인업무와 건축 제도 정비, 건축인허가 및 민원서비스 관련 업무, 건축 현장 관리 및 공사관리 업무, 건축물(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지원 등이다.

개성공단지역은 북한지역에 속하고 주요 사업은 별도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립 등의 주체가 남한에서 진행되고 관련 건축법령도 남한의 건축법에 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의 여러 모델 중 북한 측은 대지만 제공하고 건축관련 법령 및 기준은 남한의 것이 준용되는 상황이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및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¹⁷⁾,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경제 및 건설시장의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 경제 및 건설시장에 관한 기초연구(박용석, 2012), 남북한 건설분야 협력과제 분석과 북한 내 산업단지 개발 방안(박용석, 2010)(이슈페이퍼),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박용석, 2014), 개성 산업단지 개발의 남북한 경제적 효과 분석(윤영선, 2002)연구 등을 통하여 북한 건설시장 분석, 건설분야 협력과제 제시, 경제특구 참여방안 등 제시하였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분야 통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통일 대비 북한 인프라개발, 경제개발 참여, 경제개발구 참여방안 등 논의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과 공동으로 한반도 인프라 포럼을 구성하여 다양한 세미나를 통하여 건설분야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¹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1972)와 경남대북한대학원(1997)을 통합하여 2005년 연구와 교육이 통합된 전문대학원 운영 중이며 접경지역정기답사, 학술회의, 현대북한연구 계간지 발간 등 진행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탈북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북한도시에 대

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cerik.re.kr/>

18) 북한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nk.ac.kr/KOR/UNKS_main.aspx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도시분야 주요 연구로는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2004, 최완규)',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2006, 최완규)',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2007, 최완규)'등이 있다.

대학원에서는 도시관련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 건축도시관련 논문 연간 1-2건씩 발표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북한 주택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건설 및 매매를 중심으로(홍성원, 2014)', '북한 살림집 정책에 관한 연구(이규철, 2014)',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기 북한건축의 특성 연구(이윤하, 2009)'등이 있다.

□ 지역연구소

서울연구원의 경우, 통일이후의 수도와 연계하여 북한 건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속적으로 동북아도시센터 특강 등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동북아도시연구센터에서 남북한 문학에 나타난 서울과 평양의 도시 이미지 비교(김성수, 2004), 서울과 평양의 도시계획이념 및 공간구조 비교연구(김현수, 2004)등이 진행되었다.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DMZ접경지역의 도시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정부의 접경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또한,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와 관련한 성과와 향후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 설계사무소

1990년대 말, 삼우설계사무소 등에서도 북한도시건축연구회 등이 구성되어서 북한의 건축계획 및 건축물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지속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1998년에는 잡지 '건축문화'에 지하공간, 초고층건축, WATERFRONT, 북한건축, 미래 건축환경, 다목적 돔, 선진감리기법 등으로 7차례 연재기사가 소개된바 있다.

2000년대 정립건축에서 진행하였던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건립과정과 설계과정 등이 각종 세미나 및 매체를 통하여 소개되었다. 2013년 정림문화재단에서는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평양, '도시'로 읽다"를 진행하였고, 황두진건축사사무소는 영추포럼의 주제로 선정한 '북한의 도시와 건축'과 관련하여 6번의 강연을 진행한바 있다.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에서는 학술연구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도시사 아카이브 연구를 통하여 원전자료, 해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함흥, 평성의 두 도시를 대상으로 수집가능한 단행본, 간행물, 노동신문, 구술자료, 시각, 영상자료 등을 수집, 해제하였다. 연구성과물로는 ‘함흥과 평성 :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2014, 고유환, 박희진)’,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2013, 고유환, 박희진)’이 있다. 이 외에도 북한학 연구 논문집 발간 등을 진행하고 있다.

□ 학술 및 개인

최근, 단행본으로 출간된 자료로는 최근에 임동우의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북한 도시 읽기’등의 자료를 통하여 북한의 건축도시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다. 특히, ‘북한 도시 읽기’에서는 다양한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각 도시를 시각화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글들을 통하여 피상적으로 느껴지던 북한도시에 대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0년대에는 강영환의 ‘북한의 옛집’은 분단이전에 북한지역에 살고 있던 실향민들의 건축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자료집으로 의미가 있고, 이왕기의 ‘북한건축, 또 하나의 우리모습’ 1990년에는 리화선의 ‘조선건축사’, 장성수, 윤혜정 ‘통일시대 국토개발의 방향’ 등은 북한연구를 위한 시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 한국공학한림원 한반도국토포럼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까지 총4회가 진행되었다. 한반도의 비전과 전략부터 인프라, 물류, 도시와 건축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국토개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주요대상은 국회의원 및 정부관료, 한국공학한림원 임원 및 건설환경공학분과위원회 회원, CEO, 관련기관의 장이다.

4. 소결

□ 정책분야 동향

박근혜 정부의 주요 건축도시 목표는 생활인프라개선으로 북한주민의 생활환경을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다만, 외교정치, 경제적인 상황에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개선임에도 구체적인 실행에는 한계가 있다.

통일준비를 위하여 발족시킨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통일관련 추진 과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북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국토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북한 농촌지역 자립기반 구축,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정책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에서는 통일정책의 대상국가인 북한의 동향, 정세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통일부 정세분석국)는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전문가 및 일반국민에게도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토부에서는 2015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국토도시건축분야의 주요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자료구축을 중심으로 한 기초자료 구축단계에 집중되고 있다. 문화교류 및 시범사업 등은 남북관계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통일준비단계가 구체화되면 각 부처, 분야별 준비를 위해서는 특성화된 정보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축분야와 관련하여서도 특성화하고 한정된 정세분석 작성 검토가 추후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연구에서는 주로 국토분야, 법제분야, 자산관리 분야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토개발, SOC사업, 도시별전략, 남북간 법제비교, 통일 이후 북한지역 자산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남북간의 차이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미래준비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 마련이 설정되어야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정책동향과 같이 여건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본적인 자료구축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각 시나리오에 대응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독일 등의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보면, 국토개발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수립 등의 단계별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도시재생, 각 도시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시기별로 보았을 때 현재 수립되고 있는 국토개발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될 기본 인프라를 바탕으로 북한을 개발하고자 하는 전략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용이할 수 있다. 향후, 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건축, 도시단위에서의 통일준비와 통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한 연구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정책	-	이상준(1997-현재, 국토연구원)	-	손희두(2012,2014, 한국법제연구원) 박용석(2012) 최이섭(2014, 한국자산관리공사)

□ 민간분야 추진동향

1990년대 초반부터 건축분야의 학술분야를 중심으로 북한건축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고, 주로 북한지역의 주택과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들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중반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뷰조사 등을 통한 각 도시여건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운 중국학과 교수, 외국방문객, 북한에서 건축도시분야를 전공한 전문가 등 다양한 정보망을 통하여 다각적인 북한생활상에 대한 연구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민간	-	김영성(1993) 리화선(1993) 이왕기(1994) 김현수(1994) 윤혜정, 장성수(1997)	이왕기(2000) 김현수(2000), 최완규(2004)	강영환(2010), 임동우(2011), 안창모(2012), 최봉대(2013), 임동우(2014)

□ 사업분야 추진동향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건축지원 사업	-	-	개성공단(2000) 평화자동차공장(2002) 금강산아난티골프장(2008) 살림집 개선사업(2009) 평양과학기술대학(2010)	접경지역발전계획(2011) 대성동마을(2015)
교류	-	-	평양일대 문화재 조사(2005) 북한사찰문화재 발굴조사(2007) 지리정보화사업(2005~)	개성한옥보존사업 개성만월대발굴(2014~)

2000년대, 2000년, 2007년 남북정상 회담 이후로 한동안 활발한 남북간 교류가 진행되었으나 5.24 조치 등으로 대북관련 경제조치 등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교류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에서 추진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과 관련한 공장건립, 숙박시설 등의 직접적인 교류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인도적 교류로 병원, 학교, 마을 등의 건축사업도 진행되었다.

남한 측에서는 주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교류사업도 정치적인 성향에서 벗어난 문화교류,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접경지역의 DMZ생태평화공원, 대성동마을 개선사업 등과 전통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공동신청 사업 등(개성역사지구, 서울시의 한양도성·평양성, 성균관·국자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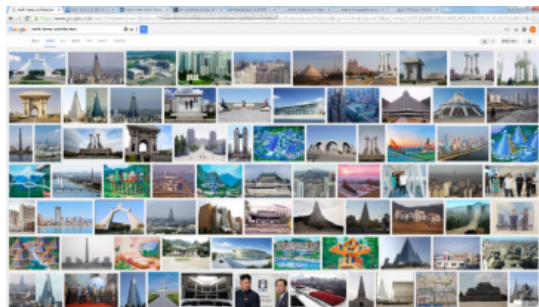
사업은 북한측의 태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건이 경색된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변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과 연계된 사업만 추진가능하다.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남북 동질성, 역사성 회복 차원 등의 문화적 사업이 초기에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제3장 북한 건축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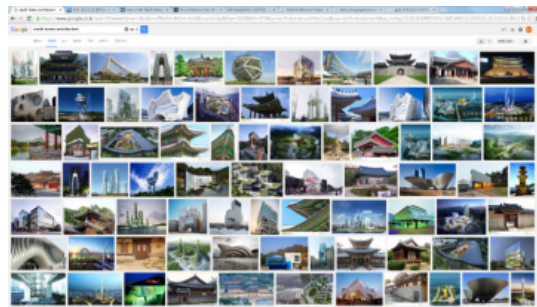
1.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 : 건축자재, 전문인력, 경제특구
2.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 : 도시와 건축, 주거
3.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 : 사회주의 건축, 주체건축

구글이미지 검색에 남한과 북한의 건축을 ‘North korea architecture’, ‘South korea architecture’로 검색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검색결과가 나온다. 북한건축은 주로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류경호텔, 인민대학습당, 고려호텔, 만경대소년학생궁전 등의 건축물과 개선문, 당창건기념탑 등의 기념비들 그리고 베니스비엔날레에 소개된바 있는 이미지들이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 언론사 등을 통하여 일부 북한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으나, 대부분 평양의 도시건축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건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현황 관련 자료는 직접적인 자료 취득에 한계가 있어서 2차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언론보도자료, 통계자료 및 기존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건축현황을 중심으로 북한건축을 정리하였다. 서론에서 검토하였던 경제·산업·기술적 관점, 사회적 관점, 문화적 관점의 틀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림 3-1] 구글이미지 검색에 나타난 북한건축
(<https://image.google.co.kr/>
(접속일 2015.11.23.)



[그림 3-2] 구글이미지 검색에 나타난 남한건축
(<https://image.google.co.kr/>
(접속일 2015.11.23.)

1.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 : 건축자재, 전문인력, 경제특구

1) 건축자재 생산능력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통일부 정책과제로 진행한 ‘북한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제도화 방안 연구’¹⁹⁾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적으로 활용한 주요자료는 ‘북한의 산업’(2010)²⁰⁾, ‘15년도 북한주요기관단체 및 인명록(2015)’²¹⁾, 통계청 북한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 자료들마다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주요기관단체 및 인명록의 자료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파악된 기관, 인물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서 각 기관별 생산능력 등에 대한 파악자료로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 건자재 주요현황

총 생산량을 비교하여 보면 남한이 47,291천MT으로 북한 생산량 6,600MT의 약8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²¹⁾ 시멘트사업은 유일하게 공급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부문으로 평가되었다. 대규모 건설사업을 위한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석회석이 풍부하며 제조 공정이 단순하여 시멘트 생산은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초 생산능력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평안남도 순천시) 300만톤,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황해북도 상원군) 200만톤 정도로 파악되었다.

유리사업은 공급역량이 크게 떨어지고, 제품의 질도 조악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벽돌 및 건설자기는 평양시 인근에 대동강타일공장을 건설하여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요에 크게 못 치고 있다. 내장재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철근이나 여타 금속자재도 부족한 상황이다.

□ 건자재 부문 주요기업현황

건자재부문 주요기업수를 207개로 시멘트 공장이 58개, 벽돌·타일·기타 건재가 83개, 유리 19개, 도자기 39개이며 이 중 설립, 투자 및 생산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된 기업은 155개이다. 각 지역별로 20~30개 정도가 분포되고 있으나 황해남도, 강원도,

19) 현대경제연구원(2014), 「북한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014, pp57-61, pp155-166

20) 한국정책금융공사(2010), 「북한의 산업」, 한국정책금융공사

21) 이석기(2015.9), 북한 산업통계, 산업연구원, pp5

량강도등은 10여개 내외가 분포되어 있다. 다만, 각 공장별 세부생산 능력 등은 공식적인 발표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각종 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기업소명칭을 바탕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주요기관단체 및 인명록’에 나타난 건설건재공업부문은 기관명을 중심으로 시멘트, 유리, 타일, 요업, 건재, 목재, 벽돌 및 블럭, 연합기업소, 간석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관명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들 공장 및 기관소 등은 향후 북한지역의 건축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3-1] 북한 건설건재공업부문 기관 현황

구 분	기관명
시멘트	구장시멘트공장, 김책시멘트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성산시멘트공장,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승호리시멘트공장, 2.8시멘트연합기업소, 천내리시멘트연합기업소, 해주시멘트공장, 강계시멘트공장, 강서시멘트공장, 개천시멘트공장, 개풍요현시멘트공장, 경암시멘트공장, 고무산시멘트공장, 고풍시멘트공장, 구례산시멘트공장, 금야시멘트공장, 김화시멘트공장, 길주시멘트공장, 나선시멘트공장, 나진시멘트공장, 단천시멘트공장, 덕천시멘트공장, 부래산시멘트공장, 북창시멘트공장, 부산리시멘트공장, 선봉시멘트공장, 순천시멘트공장, 승호리시멘트공장, 신포시멘트공장, 연탄시멘트공장, 우산군시멘트공장, 618시멘트공장, 위원시멘트공장, 2.8마동시멘트공장, 장강시멘트공장, 차가평시멘트공장, 철원시멘트공장, 8월2일시멘트공장, 함흥시멘트공장, 허천시멘트공장, 해산시멘트공장
유리, 타일, 요업	대안천선유리공장, 대동강타일공장, 대성요업공장, 신의주유리공장, 안변요업공장, 7월28일요업공장
건재	평양금속건재공장, 평양시 건재연합기업소, 강남건재공장, 낙원건재공장, 동흥산건재공장, 순안건재생산공장, 순천건재공장, 순천건재품강공공장, 순천보온재공장, 대동강종합건재기업소, 양덕건재공장, 웅진건재공장, 운전금속건재공장, 은산수지건재공장, 정평건재공장, 평양건재공장, 평양수지건재공장, 풍서건재공장, 함흥건재공장, 해산건재공장
목재	평양목재공장, 함흥목재종합공장, 강계침목방부공장, 강계목재가공공장, 길주침목방부공장, 길주합판공장, 회령목재가공공장
벽돌, 블럭	함흥씨리카트벽돌공장, 문천벽돌공장, 미림블록공장, 용암표벽돌공장, 길봉애국인도블록공장, 피현씨리카트벽돌공장

구 분	기관명
간석지	금성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대계도간석지연합기업소, 염주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황해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황해남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 청단간석지건설사업소, 웅진간석지건설사업소, 황해간석지건설사업소, 8월26일간석지건설사업소, 광산간석지건설사업소,
연합기업소	북부산업건설연합기업소, 서부산업건설연합기업소, 중앙열강종합기업소, 평안북도 6.24건설연합기업소
건설	강계도시건설사업소, 개성도시건설사업소, 광산도시건설사업소, 구성도시건설사업소, 나선건설사업소, 남구주택건설사업소, 남포주택건설사업소, 단천도시건설사업소, 순천도시건설사업소, 신의주압록강건설사업소, 평성건설사업소, 평성도시건설사업소, 평성5.18건설사업소, 해주건설사업소, 강선산업건설사업소, 개성3월17일건설사업소, 개성5월16일건설사업소, 제21금속공장건설사업소, 중구주택건설사업소, 천방간건설사업소, 청단간석지건설사업소, 해산5.16건설사업소, 황해북도5.16건설사업소, 2월 21일건설사업소, 금야토지및강하천건설사업소, 남포5월16일건설사업소, 남포항항만건설사업소, 서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6월2일 항만건설사업소, 6월 1일 관개건설사업소, 원산주택건설사업소, 의주토지및중소하천건설사업소, 재령토지건설사업소, 제56건설사업소, 함흥종합주택건설기업소, 동구산업건설사업소, 두만강건설사업소, 삼지연건설사업소, 3월17일건설사업소
기타	건재공업설계사업소, 광산설계사업소, 교량건설사업소, 남포해운사업소, 강계고려약가공공장, 낙원관개수리공장, 대흥마그네샤크림카분공장, 성진내화물공장, 승호콘크리트침목공장, 용악산생물공장, 위연제제공장, 청진수지관공장, 청진스레트공장, 평양석재공장, 평양알루미늄공장, 평양빛섬유통신케이블공장, 피연내화물공장

* 출처 : 통일부(2015), 15년도 북한주요기관단체인명록, 재구성

2) 건축분야 전문인력 및 기관

통계청 북한통계에서 제공하는 ‘도별, 성별, 전공학과별 전문학교²²⁾이상 졸업한 16살이상 인구수’에 따르면, 건축 및 건설학을 전공한 전문가는 80,184명으로 확인된다. 이는 전체 전문인력 2,972,852명의 2.7%수준이다. 각 지역별로도 전문가인력대비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정도 많으며,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4배 정도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평양시 > 평안남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순이다.

[표 3-2] 북한지역 건축관련 전문인력 현황

도별	구분별	전체 전문인력 수	건축 및 건설학 전문인력 수	인구대비 구성비
전국	성별	2,972,852	80,184	2.7%
	남자	1,671,996	52,463	3.1%
	여자	1,300,856	27,721	2.1%
	도시/농촌	2,972,852	80,184	2.7%
	도시	2,135,900	62,630	2.9%
	농촌	836,952	17,554	2.1%
량강도	성별	101,286	2,172	2.1%
	남자	53,560	1,379	2.6%
	여자	47,726	793	1.7%
	도시/농촌	101,286	2,172	2.1%
	도시	74,430	1,692	2.3%
	농촌	26,856	480	1.8%
함경북도	성별	298,771	8,080	2.7%
	남자	160,975	4,684	2.9%
	여자	137,796	3,396	2.5%
	도시/농촌	298,771	8,080	2.7%
	도시	226,781	6,786	3.0%
	농촌	71,990	1,294	1.8%
함경남도	성별	361,624	8,563	2.4%

22) 북한의 교육체계에서 고등교육기관은 고등전문학교, 단과대학, 대학 등으로 구성된다.

도별	구분별	전체 전문인력 수	건축 및 건설학 전문인력 수	인구대비 구성비
	남자	209,104	5,756	2.8%
	여자	152,520	2,807	1.8%
	도시/농촌	361,624	8,563	2.4%
	도시	259,536	6,947	2.7%
	농촌	102,088	1,616	1.6%
강원도	성별	180,844	4,191	2.3%
	남자	99,225	2,218	2.2%
	여자	81,619	1,973	2.4%
	도시/농촌	180,844	4,191	2.3%
	도시	106,099	2,828	2.7%
	농촌	74,745	1,363	1.8%
자강도	성별	122,142	2,225	1.8%
	남자	71,892	1,419	2.0%
	여자	50,250	806	1.6%
	도시/농촌	122,142	2,225	1.8%
	도시	86,020	1,649	1.9%
	농촌	36,122	576	1.6%
평안북도	성별	304,851	6,718	2.2%
	남자	178,421	4,423	2.5%
	여자	126,430	2,295	1.8%
	도시/농촌	304,851	6,718	2.2%
	도시	192,591	4,512	2.3%
	농촌	112,260	2,206	2.0%
평안남도	성별	438,698	10,728	2.4%
	남자	243,238	7,007	2.9%
	여자	195,460	3,721	1.9%
	도시/농촌	438,698	10,728	2.4%
	도시	319,402	7,901	2.5%
	농촌	119,296	2,827	2.4%
황해북도	성별	238,531	6,197	2.6%
	남자	134,290	4,071	3.0%
	여자	104,241	2,126	2.0%
	도시/농촌	238,531	6,197	2.6%
	도시	138,837	3,996	2.9%

도별	구분별	전체 전문인력 수	건축 및 건설학 전문인력 수	인구대비 구성비
	농촌	99,694	2,201	2.2%
황해남도	성별	232,729	5,242	2.3%
	남자	138,934	3,582	2.6%
	여자	93,795	1,660	1.8%
	도시/농촌	232,729	5,242	2.3%
	도시	98,801	2,498	2.5%
	농촌	133,928	2,744	2.0%
평양시	성별	693,376	26,068	3.8%
	남자	382,357	17,924	4.7%
	여자	311,019	8,144	2.6%
	도시/농촌	693,376	26,068	3.8%
	도시	633,403	23,821	3.8%
	농촌	59,973	2,247	3.7%

* 출처 : 통계청(2008) 북한통계_도별, 성별, 전공학과별 전문학교이상 졸업한 16살이상 인구수, 재구성

□ 종합대학 : 평양건축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1953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분리되어 건설대학으로 설립된 이후 평양건설건재종합대학으로 알려졌으나 2012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변경되었다. 교육 및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전당 등 주요건축물 설계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대학교육체제 개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건축분야도 지역별로 개편이 진행된바 있는데 함흥건설전문학교는 2003년에 함흥건설대학으로 변경²³⁾된 이후에 최근 함흥경공업대학, 함흥컴퓨터 기술대학과 통합하여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 외에도 평양도시경영전문학교 등은 직업기술대학으로 개편되었다.

□ 평양도시설계연구소 및 지역도시설계원

북한에는 각 지역별로 건축도시분야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평양도시설계원(소장 윤석천)은 평양뿐만 아니라 조선혁명박물관, 국제친선전람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 주요건축물들을 설계하였다. 각 지역별로는 설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도시설계원이 운영되고 있다.

23) 통일부(2003.6.23.), 주간북한동향 제646호

□ 조선건축가동맹

조선건축가동맹은 북한의 건축가와 건설기술자들을 전후 복구사업에 조직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54년 김일성의 지시로 창립되었다.²⁴⁾ 2015년 현재 위원장은 심영학으로 국가건설감독상을 겸하고 있다. 북한건축이 민간건축물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치자의 이념을 반영한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 건축분야의 국제교류의 장인 UIA총회에도 참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국가 건축가 그룹과의 국제적인 건축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분기별로는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조선건축’을 발간하고 있다.

□ 백두산건축연구원(Paektusan Academy of Architecture)

건축분야에서는 작년 베니스비엔날레에 소개되었던 북한건축가의 아이디어 스케치²⁵⁾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북한의 주요한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양각도국제호텔, 조선중앙TV홀, 상하이엑스포 북한관 등도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MAK에서 진행된 북한 예술과 건축 전시인 “김일성화(FLOWERS FOR KIM IL SUNG(전시담당 : Peter Noever))”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림 3-3] 실크공동주택(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익명의 건축가, 2011)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홈페이지 내 Presskit)

24)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25) 19593년 고려투어(koryo tour)라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관련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닉 보너의 컬렉션 중 하나임

4)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현황

□ 경제특구

북한은 중국의 경제특구 사례를 참고로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시작으로 2002년 신의주 행정특별구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후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모델로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지구가 추진된바 있다. 북한 중국간에는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도 일부 추진되었으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제개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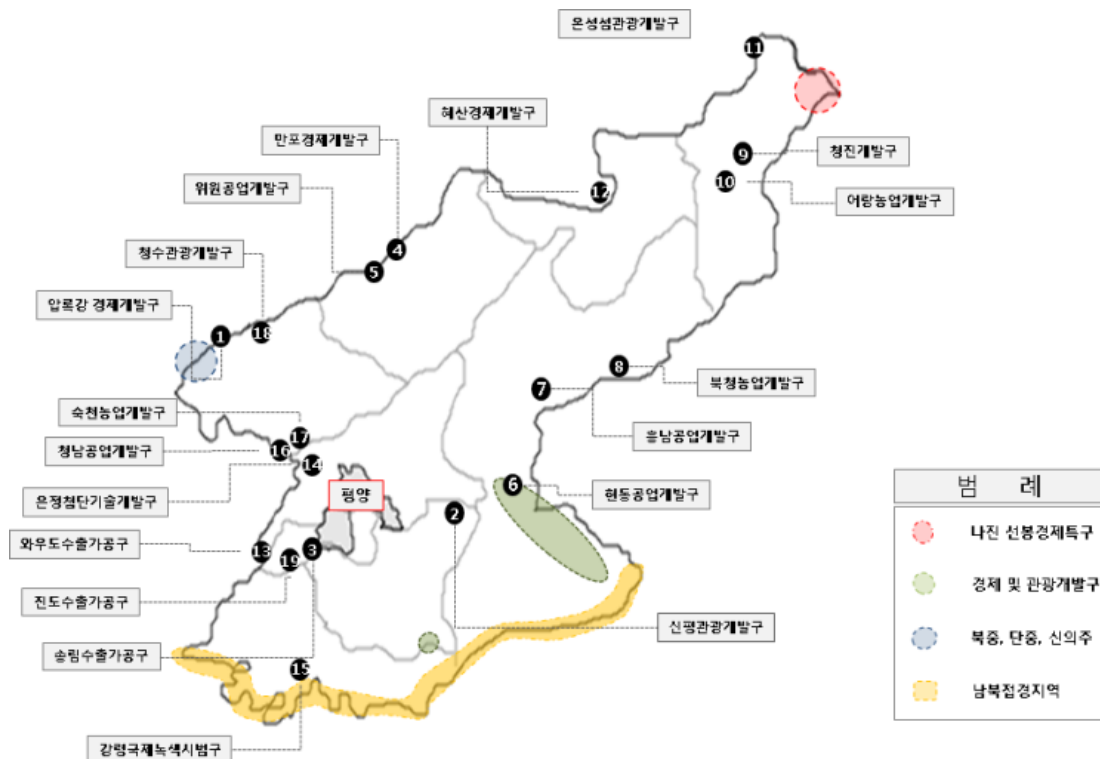
북한은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경제개발구(SEZ : Special Economic Zone)를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11월에 13개를 발표하였고, 2014년 6월에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발표, 2014년 7월에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경제개발구법」에서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경제개발 및 과학기술개발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특구 등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2012년 ‘12.1조치’를 통해서 업소별로 책임영제와 동시에 지역별로 당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자체 개발구 개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개발총계획이 일부 언론을 통하여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들 지역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선도적인 개혁, 개방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외국의 다양한 투자관련 전문가(박경애 캐나다 북한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 소장 등) 및 기관(Choson Exchange)들에도 투자설명 및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제적 협력, 남북간의 협력 등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표 3-3] 지방급 경제개발구 현황(계획)

구 분	1차 (2013.11.21.) 13개소	2차 (2014.7.23.) 6개소
공업개발구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평안남도 청남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 함경북도 온성성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청수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남포시 진도수출가공구
경제개발	량강도 해산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과학기술 개발		평양시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황해남도 강령국제녹색시범구



[그림 3-5] 북한 지방급 경제개발구 및 경제특구 위치

2.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 : 도시와 건축, 주거

북한은 건축관련 법령은 「건설법」, 「살림집법」 등이 있으며, 이는 남한의 건축법, 건축기본법령에 준한다. 남한은 대상별로 범위가 세분화되어져 있는 반면에 북한은 총괄적인 범위에서 법령이 다루어지고 있다. 도시와 관련하여서 「도시계획법」, 「도시경영법」 등이 있다. 특정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한 법령으로 수도인 평양에 대한 「평양시관리법」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개발구에 대한 법령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분야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다만, 북한의 경우, 건축물 대부분이 국가관리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도시관리차원에서 건물이 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도시경영법」의 제2장 건물관리(제9조~제18조)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분류 및 관리주체, 이용허가, 보수 유형별 주체, 보수 주기와 시기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분야의 일부 법령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기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²⁷⁾

[표 3-4] 남북한 건축관련 법 구분

	건축분야	도시분야
북한	건설법, 살림집법	도시계획법, 도시경영법, 평양시 관리법
남한	건축법, 건축기본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 경관법 등

1) 도시와 건축 : 도시경영법(2006), 건설법(2011)

① 도시경영법

「도시경영법」은 도시건설 이후의 시설물의 관리, 도시관리에 관한 법이다. 건설법은 목적은 법령에서 “도시경영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은 전망성 있게 꾸려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도시경영법」은 건물 관리, 상하수도난방시설 운영, 도시도로 하천정리, 원림조성, 도시미화,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7) 정책지도자들의 현장지도 등을 통하여 건축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현과 관련한 기술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성능, 기술기준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인숙의 인터뷰가 2000년에 콘스트라넷(www.constranet.com)를 통하여 일부가 소개된바 있다.

② 건설법

「건설법」은 건설계획,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에 관한 법이다. 건설법의 목적은 “건설총계획작성과 실현,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우리의 건축법과 같이 건설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법」은 건설법의 기본, 건설총계획, 건설설계, 건설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원칙과 총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점에서는 건축기본법의 성격도 일부 담고 있다.

기본원칙으로는 건설분야의 기본원칙과 계획화, 주체성, 집중화 및 효과성제고, 공업화 및 현대화, 정규화 및 정상화, 과학화, 그리고 국제기구와 교류 및 협조 등이 제시(법2조~법9조)되어 있다. 건설총계획에는 작성의 원칙에서 분류, 승인, 건설순위의 결정 등에 대한 사항 등(법10조~16조)을 담고 있다.

□ 남북한 설계과정 비교

건축설계단계에서는 남한의 건축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북한에서는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에서 작성하고 있다. 설계업무 등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건축심의과정에서는 설계합평회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합평회에는 과학자, 기술자 등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설계허가에는 중요도에 따라 내각, 국가건설감독기관이나 해당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표 3-5] 남북한 설계과정 비교

	남한	북한
설계주체	건축사 (건축법제23조)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 작성 (건설법 제18조 설계계약)
설계업무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제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
설계검토	건축심의	건축주는 검토 후 정해진 기간에 설계안에 대하여 합의 (건설법 제23조) 설계합평회의 의견을 받아 완성 -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해당부문 일군 (건설법 제24조)
건축허가 설계승인	지자체장 (건축법 제11조)	내각, 국가건설감독기관, 해당기관 승인 (건설법 제52조)

[표 3-6] 건설허가 '명시서' 승인과정

번호	건설 관련 항목	검토 승인기관(부서)	해당 승인(사인)
1	토지	국토환경부	국토환경부 부장
2	도시경영	해당 도시경영과(부서)	인민위원회 도시경영 부 부위원장
3	안전관련	해당 지역 보안서	지역 보안서장
4	위생 방역관련	해당 지역 위생 방역소	위생 방역소 소장
5	건축 설계관련	지역 설계사업소	도시 건설 설계사업소 소장
6	건설대상 검토	도, 시군 건설감독부(감리기관)	도 시, 군 건설감독부(감리부) 부장
7	아파트건축과 관련한 지시 명령서	해당 도 시,군 지역 인민위원회	도 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 출처 : 홍성원(2014), 북한 주택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건설 및 매매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pp47

건축물의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남한의 경우, 복잡한 건축행위 등을 통하여 분류체계를 만들어 것에 비하면, 북한에는 「도시경영법」의 근거하면 살림집, 공공건물, 생산건물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향후, 건축물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예상하여 건축물의 등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남한의 건축물대장과 유사하게 건물을 등록하도록 「도시경영법」 제56조에서는 명시하고 있음을 보았을 때, 관리시스템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7] 남북한 건물의 분류 및 등록

	남한	북한
건물의 분류 (용도, 유형)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제2조 정의)	국가소유 건물은 살림집, 공공건물, 생산건물 (도시경영법 제10조 건물의 분류와 관리분담)
건물의 등록	지자체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건축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대지현황을 적어서 보관 (건축법제38조 건축물대장)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건물과 시설물, 주민지구토지를 정확히 등록 (도시경영법 제56조 건물, 시설물, 주민 지구토지의 등록)

2) 주거 : 살림집법(2009), 주거현황

① 살림집법(2009)

북한에서는 국가가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배분하는 것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목적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이용, 관리”를 위해서이다. 법은 살림집법의 기본, 살림집의 건설, 살림집법의 이관, 인수 및 등록, 살림집의 배정 및 이용, 살림집의 관리, 살림집부분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에 따르면 “살림집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소유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다. 대부분은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소유살림집이며 일부에 한정되어 개인소유살림집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주택과 관련하여서는 남한에서도 국가가 개입하는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표 3-8] 남북한 살림집 비교

	남한	북한
계획주체	국가, 지자체 민간, 개인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살림집법 제9조)
건설주체	민간건설사, 개인	살림집 건설기관
건설설계	민간건설사 및 국가, 지자체	도시건설전문설계기관, 기업소 (살림집법 제11조)
자재, 자금, 설비	민간	국가계획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 (살림집법 제16조)
등록 및 관리	건축물대장	살림집등록대장 - 등록번호, 준공연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살림집법 제25조)
배정	-	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 (살림집법 제28조)

② 북한주거 현황²⁸⁾

2008년 유엔인구기금(UNFPA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에서는 북한인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자료는 국내 북한관련 통계의 주요자료로 활용되어 통계청의 북한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²⁹⁾되기도 하고 최신의 현황이 아닌 자료라는 한계도 있으나, 현재까지 활용 가능한 공식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질적조사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방식도 병행되고 있으나, 거주나 이동의 자유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지역에 한정된 조사라는 한계도 있다. 건축분야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의 형태

주택 형태별 가구 수가 높은 비중인 연립주택(43.9%) > 단독주택(33.8%) > 아파트(21.4%)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에 있어서 도시지역은 연립주택(49.5%), 농촌지역은 단독주택(59.4%)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9] 주택의 형태별 가구 수

(단위 : 가구, %)

구 분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
북한	전체	5,887,471 (100)	1,988,415 (33.8)	2,584,435 (43.9)	1,261,709 (21.4)	52,912 (0.9)
	도시	3,579,626 (100)	616,955 (17.2)	1,773,414 (49.5)	1,164,767 (32.5)	24,490 (0.7)
	농촌	2,307,845 (100)	1,371,460 (59.4)	811,021 (35.1)	96,942 (4.2)	28,422 (1.2)
남한 (2005년)		15,887,128 (100)	7,064,128 (44.5)	1,695,429 (10.7)	6,628,993 (41.7)	498,578 (3.1)

* 주 : 북한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타'로 구분되고, 남한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기타'로 구분되어 이번 분석에서 남한의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 항목에 포함시킴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1.3.22.),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통계청

28)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DPR Korea, 2009

29) 이석(2011),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 KDI

□ 화장실 사용 유형

전체 가구의 59.4%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40.5%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평양시는 75.2%로 타지역이 55%내외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0] 화장실 사용 유형

구 분		수세식		재래식	
		단독사용	공동사용	단독사용	공동사용
북한	전체	3,434,306 (58.3)	65,579 (1.1)	2,045,134 (34.7)	342,452 (5.8)
	도시	2,374,540 (66.3)	58,629 (1.6)	858,412 (24.0)	288,045 (8.0)
	농촌	1,059,766 (45.9)	6,950 (0.3)	1,186,722 (51.4)	54,407 (2.4)
남한 (2005년)		14,701,523 (92.5)	233,818 (1.5)	776,534 (4.9)	151,391 (1.0)

* 주 : 남한의 경우 화장실 없음(23,862 가구, 0.2%)도 조사되었으나 미포함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1.3.22.).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통계청

[표 3-11] 시도별 화장실 사용 유형

구 분	계	수세식		재래식	
		단독사용	공동사용	단독사용	공동사용
북한 전체	100.0	58.3	1.1	34.7	5.8
양강도	100.0	54.1	1.1	39.4	5.4
함경북도	100.0	54.8	1.2	35.6	8.4
함경남도	100.0	55.6	1.4	39.6	3.4
강원도	100.0	54.9	1.1	36.9	7.1
자강도	100.0	57.5	1.0	34.5	7.0
평안북도	100.0	57.4	0.8	33.2	8.6
평안남도	100.0	56.5	1.1	35.5	6.8
황해북도	100.0	54.4	1.3	40.1	4.3
황해남도	100.0	53.9	1.2	39.7	5.3
평양시	100.0	75.2	0.9	20.8	3.1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1.3.22.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통계청

□ 난방형태

북한지역의 주요 난방연료는 석탄(47.1%)과 나무(45.1%)이 9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주로 석탄난방이 농촌지역은 나무난방이 주된 난방형태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평양시 등에는 타 지역과 달리 중앙 및 지역난방(32.2%)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강도 등은 나무 난방형태가 76.7%로 높게 나타났고, 평안남도는 석탄 난방형태가 81.6%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2] 주된 난방형태

(단위 : 가구, %)

구 분		중앙 및 지역 난방	전기난방	전기난방 +다른 난방	가정용 석탄난방	가정용 나무난방	기타
북한	전체	263,809 (4.5)	40,624 (0.7)	55,712 (0.9)	2,773,238 (47.1)	2,656,866 (45.1)	97,222 (1.7)
	도시	263,055 (7.3)	35,630 (1.0)	45,343 (1.3)	2,300,395 (64.3)	918,583 (25.7)	16,620 (0.5)
	농촌	754 (0.0)	4,994 (0.2)	10,369 (0.4)	472,843 (20.5)	1,738,283 (75.3)	80,602 (3.5)
남한 (2005년)		2,310,522 (14.5)	527,114 (3.3)	— —	213,548 (1.3)	63,819 (0.4)	73,068 (0.5)

* 주 : 남한의 난방형태 중 미포함된 유형 : 도시가스보일러(8,036,661가구, 50.6%), 기름보일러(4,083,504가구, 25.7%), 프로판보일러(578,892가구, 3.6%) 등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1.3.22.). 북한 인구조와 인구센서스 분석, 통계청

[표 3-13] 지역별 난방형태

(단위 : %)

지역	계	중앙 및 지역 난방	전기난방	다른난방	석탄	나무	기타
북한 전체	100.0	4.5	0.7	0.9	47.1	45.1	1.7
양강도	100.0	0.0	1.7	1.6	1.0	95.4	0.2
함경북도	100.0	0.1	0.3	4.0	39.3	55.5	0.8
함경남도	100.0	0.0	0.4	0.7	38.0	58.3	2.5
강원도	100.0	0.0	0.3	0.8	36.0	61.5	1.4
자강도	100.0	0.0	0.9	1.4	20.9	76.7	0.1
평안북도	100.0	0.0	0.2	0.4	49.2	45.2	4.9
평안남도	100.0	0.1	0.4	0.1	81.6	17.6	0.3
황해북도	100.0	0.0	0.1	0.4	41.7	55.9	1.9
황해남도	100.0	0.0	0.2	0.6	28.6	68.5	2.1
평양시	100.0	32.2	2.7	0.9	58.6	4.6	1.1

*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1.3.22.). 북한 인구조와 인구센서스 분석, 통계청

□ 주거 유형

북한 주거는 일반적으로 입주대상에 따라서 주택 유형도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다. 통일원(1992)의 자료에 따르면, 간부들을 대상으로는 고급단독주택, 신형 고층아파트들이 공급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10평 미만의 공영주택, 농촌문화주택, 합숙소 등이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지역의 지도계층이 대부분 평양에 밀집되어 거주한다는 점에서 평양지역과 다른 도시, 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평양에는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미래 과학자거리 등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공급되기도 하였다.

[표 3-14] 주택등급별 규모 및 입주 대상

주택형		규모	가옥구조	입주대상	비율
고급 단독주택		대지 : 300-500평 독립식 : 1-2층 건평 : 200평 정도	방 3개 이상 정원, 수세식 변소 냉온방시설	중앙당 · 정무원의 부부장급 이상 군의 소장급 이상 고위간부	15%
신형 고층아파트		높이 : 20-40층 규모 : 20-50평	방2-3개 목욕탕, 수세식변소 베란다, 냉온수시설	중앙당 과장급, 정무원 국장급 대학교수, 문예단체 간부급 인민군 대좌, 기업소 책임자	
중급 아파트		12-15평	방2개, 부엌, 창고	중앙기관 지도원	
일반아파트		8-12평	방1-2개 부엌 1개	인민학교 · 고등중학교장 일반 노동자 사무원	25%
1호	집단공영주택	7-10평	방 1-2개, 부엌1개 창고1개	말단 근로자 사무원	60%
	농촌문화주택	2-5층 3-5가구용	방2개, 부엌1개 창고1개	협동농장원	
	공장미혼자 합숙소	1실 4-5명 수용	시설 낙후, 노후화		
	농촌변두리 기존가옥	방2-3개	초가 또는 기와	변두리 농민	

* 출처 : 통일원, '92북한개요', 1992, pp282,

* 박용석(2012), 북한 경제 및 건설시장에 관한 기초연구-북한 내 최우선 건설 수요를 중심으로-, pp97재인용

3.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 : 사회주의 건축, 주체건축

북한건축에 대한 소개는 대부분 최고지도자의 지시나 현장지도 등을 통하여 언론에 소개되거나 평양소재의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다. 즉, 북한사회에 대한 체제선전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건축물들과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구분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50년대 이후, 평양의 주요건축물을 중심으로 평양건축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대구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서 살펴보았다.

1) 시기별 북한건축특성

□ 김일성 시대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 사회주의 도시

북한에서는 6.25이후 도시복구 과정에서 기존의 도시적인 맥락보다는 새롭게 도시를 재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복구를 지원하는 국가들이나 전문가들의 영향에 따라 사회주의 도시모델을 도입하게 되었다. 옛 소련은 재건과정 전반에 참여하였고 건축양식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쳐왔다. 헝가리, 불가리아, 동독, 루마니아 등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 각 도시의 재건사업에 참여하였다.

[표 3-15] 북한 도시재건 지원국가 현황

구분	지원국	년도
평양	헝가리, 불가리아	1954-1957
함흥	동독	1955-1964
순천	루마니아	1968
원산	폴란드	1954-1966
덕천	체코	1954-1956

* 출처 : 서동훈(1991), “북한의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현황” 「건설」 183호, pp43

함흥의 경우에도 복구사업이 1954년부터 1962년까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에서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도시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독일의 블록형 주거단지개념이 도입되어 주요가로에 면해서 3-4층 저층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방식이 진행되었다. 도시교통의 주요부분은 교차로 등이 계획되기도 하였다.

계획의 주안점은 주택난 해결이 최우선이었고 필요한 설계와 건재의 규격, 표준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립식 시공방법을 마련하였다. 공급기준 면적은 1인당 6.5㎡정도로 규정하여서 한 가족을 5인으로 가정하였을 때, 30-40㎡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이후, 기반

시설로 시멘트공장, 채석장, 음료공장, 얼음공장, 체신청사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건축을 살펴보면,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병원 등의 사회운영을 위한 시설들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지게 된다. 전후 복구 시기 소련의 형식적인 건축양식인 고전주의 건축양식이 많은 부분 적용되었다. 초기에는 자체적인 건축양식을 고민할 여유가 없었으나 점차 새로운 양식을 고민하게 된다. 1954년에는 ‘민족적 건축예술’³⁰⁾을 언급하게 된다.

1960년대 초 김일성은 “우리는 사회주의적 사회주의 건물을 지어야한다. 건축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이다”라고 말한 이후에 평양대극장, 옥류관, 개성학생소년궁전, 인민문화궁전, 국제친선전람관,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함흥대극장, 평양 개선문 등이 대표적이다.

□ 김정일 시대 : 주체건축, 건축예술론

북한건축에 대한 문화적 관점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용어가 주체건축이다. 주체건축의 실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을 살펴보면, 사회주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이 담겨져야 하고, 형식은 민족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고건축에서의 디자인어휘를 차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다른 기존의 양식과 구분되는 ‘독창성’, ‘특색’이 강조되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 이미 김정일은 주체건축사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집권 이후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현대적인 기술이 좀 더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치적인 정체성이 확보되었고 대외적으로 북한의 정체성을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에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주요건축물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평양국제영화회관, 동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양각도 축구경기장, 평양국제통신센터, 만경대 소년학생궁전, 청년호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건립된 건축물 등이 대표적이며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등도 이 시기에 건립되었다.

30) 1954년 3월 26일 ‘전국 건축가 및 건설기술자대회’

“전후 복구기에 새로운 건축예술을 창조하는 데 있어 선조들의 건축예술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민족적 특성을 현대적 미감에 맞도록 재현해야한다고 언급하며, 건축설계는 ‘민족형식에 사회적인 내용을 부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

출처 : 박영정, 양현미, 김혜준, 송승섭, 안창모, 전영선(2002), 북한 문화시설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15-16 재인용

□ 김정은 시대 : 주체건축유지, 수령영생건축, 선편리성 후미학성건축

이왕기(2015)교수³¹⁾는 김정은 시대의 건축에 대한 특징을 ‘주체건축유지’, ‘수령영생 건축’, ‘선편리성 후미학성건축’으로 정리한다.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주체건축을 유지하고 정치적인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령영생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제시된 것이 ‘선편리성 후미학성건축’으로 건축은 편리성이 우선 확보된 이후에 미학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주요건축물은 평양 순안국제공항, 마식령스키장, 원산국제공항,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해당화관, 평양민속공원, 문수물놀이장 등이다. 주로 대규모 위락 및 편의시설은 평양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외자본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작업이 중심으로 되고 있다. 평양 시에는 대동강변에 위치한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강조한 체제선전을 강조하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2) 건축문화행사

□ 5.21 건축축전(건축미학대토론회)

매년 5월 21일에 건축축전 행사를 통하여 전국의 건축설계관련 기관들에서 제출된 건축설계공모안(현상모습작품), 논문 등이 발표된다. 행사에는 당비서, 내각부총리, 조선건축가동맹 위원장, 건설공재공업상, 국가건설감독상, 국토환경보호상, 도시경영상, 만수대창작사,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주요관계자가 참여하여 건축분야에 대한 건축미학토론회 등의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 기타 : 국제건축도서전시회

이외에도 건축관련 출판물을 전시하는 ‘평양국제건축도서전시회’ 등 행사등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행사에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등 10여개 국가에서 발간된 건축과학기술도서 5,000여종이 전시되었다.³²⁾

31) 이왕기(2015), “김정은 시대 건축의 계승과 변화”, land & housing INsight, vol21, 2015,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pp18-31

32) 통일부(2009.8.3.), 주간북한동향 제955호, 통일부, pp4

제4장 독일 통일의 건축분야 사례 연구

1. 통일 관련 독일의 도시 및 건축분야
2. 도시개발지원 정책(Städtebauförderung)
3. 추진 프로그램 적용 사례

독일에서는 통일 전 미리 동·서독 통일을 위한 도시 및 건축분야의 특정한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독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던 도시 및 건축분야 정책을 탄탄히 구축하고 이를 동독에도 보완, 적용함으로써 동·서독간의 도시건축적인 발전의 간극을 줄여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일 전 서독에서 추진, 진행, 적용 중이었던 도시 및 건축분야 정책인 ‘도시개발지원’ 정책(Städtebauförderung)을 소개하고 통일 후 어떻게 도시활성화 및 균형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 관련 독일의 도시 및 건축 분야³³⁾

1) 통일 이전의 독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는 2개의 정부가 들어서며 아주 상이한 조건 하에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 주택사유지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자동차 중심의 도시 같은 도시계획 철학이 서독을 지배하기 시작한 반면 동독에서는 국가주도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

① 동독

구동독의 도시구조는 총 442개의 소규모 도시들과 162개의 중규모 도시 그리고 13개의 대도시로 이루어져 있었다. 10만 명 이상의 거주자를 지닌 대도시 중 에어푸르트(Erfurt)만 전쟁으로 인한 파괴 및 손실이 적었던 반면 대부분의 중, 소규모 도시들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전후 도시 재건으로부터 변화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황

33) 본 장은 BBSR(2011), “40 Jahre Städtebauförderung”, BMVBS 주요내용을 요약하였다.

으로 인해 구동독에서는 많은 도시의 역사적 도심구조가 유지되고 있었다.

□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도시개발정책은 1950년 7월 27일 체결된 ‘도시건설 16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독일 사회학자 Heinz Sahner에 의하면 이 항목들은 전체주의, 중앙집중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그 중점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이 3가지 핵심의미와 함께 동독의 도시개발은 사회정치적인 청사진을 따르며 국가의 중앙집중적인 경제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도시복구와 주거단지의 개발을 위해 1989년까지 구동독은 사회주의적 도시안을 추구했다. 지자체는 독립적인 정치적 행정부서로써 그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전쟁의 파괴가 컸던 대도시들(Dresden, Leipzig, Ost-Berlin, Chemnitz, Rostock, Magdeburg, Halle)은 현대 사회주의 도시의 전형에 따라 개발되었다. 도시의 기능에 대한 구조는 DDR 정권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 대규모 조립식 주거단지

1970년대 이후 구동독에서는 주택공급을 위해 거의 전적으로 공장식 조립식주거만 건설했고, 약 150만 주택이 이런 방식으로 생겨났다. 이런 단지들은 도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기본공급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했으며 단지 인근으로의 고용의 기회도 낮았다.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점은 초기에는 주택수요에 대한 수적인 부족함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주택의 수준에 있어서도 서독에서는 임대주택 수준에서 확보되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은(화장실 1개, 샤워부스 1개, 중앙난방) 현대화된 주택에서나 보였다. 주거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하에 공급된 대규모 조립식주거단지에서도 기술적,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고 있었고 특히 에너지에 관련된 정비 및 현대화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았다.

□ 낙후된 구도심 지역

구동독의 도시개발정책이 외곽의 대규모 주거단지에 치중되어 진행되는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성장한 구도심 지역은 낙후상태로 남겨 지게 되었다. 많은 지역들에서 부족한 재정투입으로 인해 구서독 도시들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구도심의 현대화 작업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황폐화된 건물들의 상태와 함께 구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망들도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불충분한 식수공급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석탄난방시설

로 인한 높은 배기가스 오염,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가로망들로 인한 문제점들이 구도심에 대한 선호도를 경감시키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도시들은 많은 지역에서 예전의 도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이 곳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정돈 및 현대화 작업이 조속히 필요했다. 도시건축적인 공간의 질과 매력적인 주거환경이 재형성되어야 했다.

□ 다양한 유형의 지역과 사회구조

이런 도시적 상황을 바탕으로 구서독 도시들과 비교하여 구동독 도시에서는 통일 이전 탈도시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구동독에서는 도시 내부의 역사적 도심과 독일제국 시기 건설된 지역³⁴⁾, 도시 외곽의 대규모 조립식주거단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도시구조에 따른 구서독과 구동독의 차이는 오늘날까지도 두드러진다. 사회적 구조를 보자면 서독인구의 3%가 도시외곽의 대규모 주거단지에 거주한 반면 구동독에서는 이 수치가 20%에 달했다. 따라서 구동독 도시의 이런 주거단지에서는 서독 같은 임대주택게토가 발견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넓은 사회적 구성원의 폭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통독 이후 구동독 도시들에서도 사회공간적인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② 서독

서독에서는 1971년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주도하에 ‘도시개발지원 정책’이 도입되고 80년대를 거쳐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게 된다. 구서독은 도시개발지원을 이용해 역사적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낙후된 주거상태를 개선시키고 도시에 대한 생태적 생각을 바탕으로 지자체 도시공간의 경쟁력과 함께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며 구동독 도시들보다 도시개발에 있어 앞서나가게 된다. 이 ‘도시개발지원’은 도시 구조적으로 취약한 도시들과 기초지자체들의 지원을 위한 도구로써 정치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결속시키며 서독의 도시 및 건축분야의 핵심정책이 된다. 서독은 통일 직전까지 이 정책을 통해 도시건축적인 물리적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집중하였고 통일 이후에는 변화된 정치, 사회 상황에 따라 이 정책을 세분화된 접근법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고 이런 성공 요인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지원 정책은 당연히 구동독 지역으로도 도입되었다.

34) Gründerzeitviertel: 19세기 중후반 독일제국시기에 건설된 지역으로 길변으로 입면이 향해있고, 3층~6층의 중정을 가진 블록 형식의 주거건물로 이루어진 주거지역

2) 전환기 독일

위에서 언급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1991년 2월 ARGEBAU-Ministerkonferenz³⁵⁾에서 도시전반적인 개보수 요구에 따른 ‘구동독 도시의 도시개발지원을 위한 원칙’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지원’ 정책을 통해 구동독 도시에 존재하고 있는 도시계획적인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도시건축유산을 되살리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전환 초기 동독에서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들이 대두되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적인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역사적으로 한 번의 사회적 단절이 있었던 상황에서 변화된 도시정책을 어떻게 착수해야 하나?
-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도시정책 진행시 적극적인 관계자로 편입시킬 것인가?
- 짧은 시간 안에 체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적 압박 속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도시개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시키고 확정시킬 것인가?
- 통일 당시 동독의 도시건축환경을 백지상태라고 보았을 때, 백지상태 위에서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도시개발 프로그램을 단지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행정적 구조가 구축되어야 하나?

이 모든 질문들은 구동독의 도시들이 이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빠른 속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했다.

□ 행정구조 시스템의 변화

통일과 함께 도시개발을 위한 기본조건들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정권 붕괴로 인한 시스템 변화와 행정구조의 변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동독의 사회주의 정권에서 서독의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가는 전환 과정은 정치적 기구들, 행정기관 그리고 위계적 조직 체계의 근본적인 재건을 강요했다. 구동독 도시의 행정기관들은 통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다. 각 행정기관들에서는 자질이 부족한 담당자들이 문제로 떠올랐고, 일부 개별 관청들에서 정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선 기능적인 조직구조와 작업방식을 구축하기 위하여 초지역적인 협업기관과 감독기관 (예) 시장, 기초자치단체장)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즉, 통일과정에서 국가차원의 특별 조직 체계로 독일신탁청(Treuhandanstalt)이 제시되었다.

35) ARGEBAU-Ministerkonferenz : 독일 16개 주에 있는 도시, 건축, 주택분야 장관들과 의원들의 내각회의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통일 이후 행정구조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이 대두되었다. 1989년까지 구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이 도시개발의 발전전략과 목적을 중앙의 위치에서 정의했다면 이 과제가 통일 이후에는 각 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옮겨 가게 된다. 즉,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과 그에 따른 행정 절차들이 통일 이후 재구성된 기관들로 완전히 이전되어야 했다. 충분한 경험이 없었고, 실행경험도 부족하여서 많은 마찰이 발생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환과정 초기에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행정구조를 구축하고 보장된 법적 근거 위에서 행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공공 행정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서독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 도시개발지원 정책 적용의 어려움

서독에서 시행되었던 계획사례와 지원사례를 동독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들의 뒤떨어지는 행정적인 경쟁력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토대의 부족함이 장애물이 되었다. 둘째, 1990년대 초 동독지역에는 토지이용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계획들은 그 계획의 특성상 단기간에 수립될 수가 없었다. 셋째, 건물들의 소유권 환원에 대한 요구가 구도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들의 불분명한 소유권 관계가 도시 내부의 빠른 발전을 방해했다. 소유권 환원 청구로 인해 초래된 해당 건물들은 법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묶여 있어야 했고 이는 노후 건물들의 개보수에 대한 작업을 더디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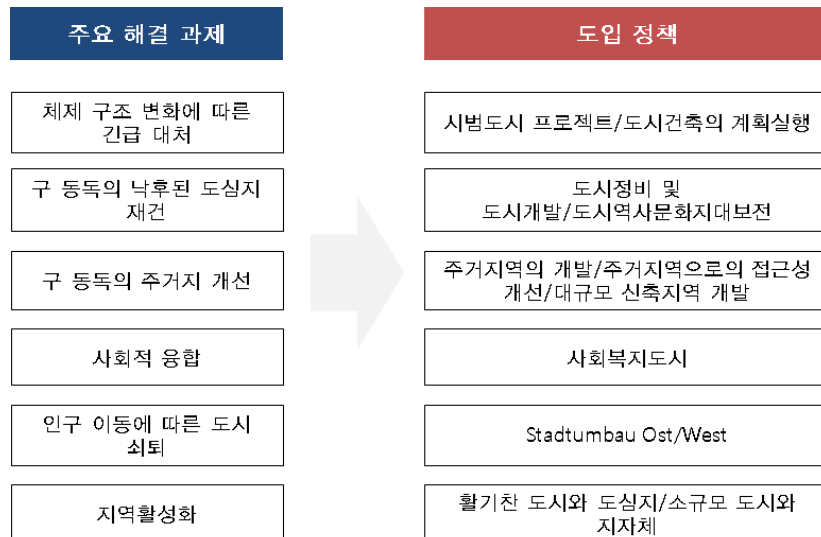
□ 그 밖의 문제점과 기회

행정구조 시스템 변화 및 행정적인 경쟁력 부족, 기본계획도서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들과 함께 구동독 도시에서는 대기오염, 갈탄 탄광, 유독성 폐기물 등에 의한 생태적 문제 상황과 공급시설 및 교통망 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 기존의 군사시설로 사용되던 부지의 반환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가 도시 내 위치적 이점으로 인해 도시개발의 기회로 떠오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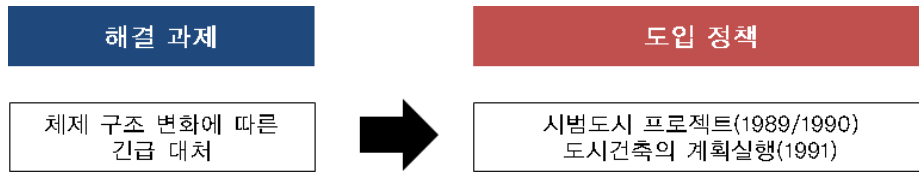
3) 통일 이후의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정치적 붕괴와 함께 10만 명에 달하는 동독 주민들의 서독으로의 이주로 인해 서독에서의 인구감소가 감소하는 듯 하였다. 동시에 주거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동독 주택시장에서의 높은 투자 상황은 동독에서 번영하고 있던 도시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1990년도 한 해 70만호가 넘는 새로운 주택이 신축되었다. 한편으로는 노후된 건물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고, 동시에 서독의 도시와 사회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이 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개발지원’은 즉각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우선 수 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도심지의 안정과 정비를 위해 투입되었다.

‘도시개발지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1991/1992년부터 연방정부-주정부 프로그램인 역사적 도심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도시역사문화보전지대’가 구동독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도심지 정비 및 현대화뿐만 아니라 도시외곽이나 도심지 밖에 위치한 대형주거단지의 개발을 위해서 1993/1994년 연방정부-주정부 프로그램인 ‘대규모 신축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착수되었다. 1999년부터는 기존 프로그램이 보충을 위해 ‘특별한 개발요구를 지니고 있는 지역을 위한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도시개발지원정책으로 도입되었다. 통일 이후 독일의 도시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도시 및 건축 분야의 도입 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 통일 이후 주요 해결과제 및 도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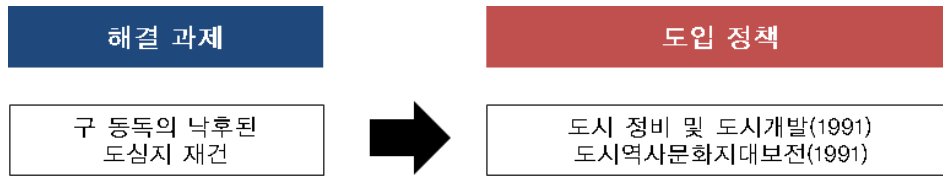
□ 시범도시 프로젝트(Modellstädte) (1989-1990)

1989-90년에 구동독과 구서독은 시범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가장 좋은 삶의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가장 결정적인 전제조건이다. 이에 주거환경과 고용시장 안정, 기반시설의 개선,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상태의 개보수, 역사적 도심의 재건이라는 과제가 설정되었고 11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서독에서 진행했었던 도시 재개발수단을 이용해 동독도시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1991년 이후, ‘역사적 도심의 활성화’³⁶⁾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도 함께 추진 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년 도시재개발 회의가 개최되어 각 시범도시 대표자들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구동독 도시들에게 도시재개발을 배우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를 통해 통일 후 체제 전한 상황아래에 놓여있던 도시건축적인 문제 상황들을 파악, 제거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

□ 도시건축의 계획실행(Städtebauliche Planungsleistungen) (1991)

통일 직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계획기반에 대한 부족함이었다. 이를 위해 1991년 ‘도시건축의 계획실행’ 이란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통일 직후 구동독 도시의 확연히 낮은 경제력을 구서독 도시의 상태와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공업, 산업지역의 개발이 시급했다.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시계획업무의 기반 즉, 현 상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각종 기본도면들이 구축되어 있어야 했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은 이를 위한 비용을 해결해 주며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라멘플란과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의 승인을 위한 준비 및 구체화 작업에 필요한 비형식적인 도면들의 수립과 변경, 보안을 위해 사용되었다.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업, 산업 시설의 기본계획과 안정화 계획 수립 시 이에 속한 기반시설들도 함께 고려된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했다.

36) 구 동독 도시의 11개의 시범 프로젝트와 함께 1991년부터 1996년 사이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대규모 조립식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에 목표를 두고 있다.



□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Städtebauliche Sanierungs- und Entwicklungsmaßnahmen) (1991)

- 건물상태 및 공공공간의 물리적인 개보수에 대한 집중적인 조치사항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실행접근
- 진행기간 : 구서독 도시는 1971년 이후 / 1991년 구동독 도시로 확장
- 연방정부지원 : 75억 유로(~2009), 54.2백만 유로(2010), 50.3백만 유로(2011)
- 지원받은 도시와 기초지자체 : 2,262 (660 구동독 / 1,602 구서독)

1971년부터 이미 서독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던 도시정비와 도시개발 프로그램은 1991년부터 2009년까지 구동독 도시에 시행되며 약 880개의 조치사항들을 약 650개의 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투입했다. 전체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약 26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난 20년간 이 프로그램은 구동독 도시의 물리적 도시정비 및 개보수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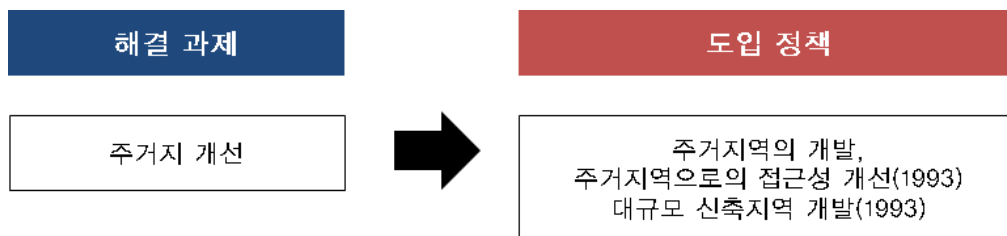
2012년까지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도시개발지원 정책의 고전적인 프로그램으로 법적, 재정적 그리고 조직적인 기반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에 기인하고 있다. 도시건축적인 결점을 제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정비 조치는 소규모 도시부터 밀도가 높은 대도시까지 다양한 실행영역과 적용범주를 가지고 도입되었다. 다양한 시기와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던 기존의 도시 건축적 구조가 변화된 요구사항에 맞추어 재개발 되었다. 이에 반해 도시개발 조치는 새로운 주거지역 형성이나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도심지의 새로운 용도를 통한 개발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의 차원에서 공적인 수단에 의해 토지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프로그램(Städtebaulicher Denkmalschutz) (동독 1991, 서독 2009)

- 역사적인 구도심 보전 및 개발, 기초지자체, 개인소유자와 투자자들을 위한 개발 협의
- 연방정부지원 : 18억 유로(~2009), 100.3백만 유로(2010), 92.1백만 유로(2011)
- 지원받은 도시와 기초지자체 : 351 (201 구동독 / 150 구서독)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1991년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약 80개의 구동독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수의 구동독 도시들이 1990년에 보전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도시 중심지가 있었으나 대부분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시의 건축문화적인 자산과 그로 인한 고유의 도시 건축적 질을 보전하고 현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역사적인 구도심이 서비스업과 소규모 상업, 행정업 및 소규모 공업 그리고 주거지역을 위한 장소로 활성화되어야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2009년까지 18억 유로 이상의 연방정부 예산이 약 240개의 조치사항과 함께 200개의 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흘러들어갔다.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은 도시개발과 문화재관리를 위한 통합된 접근법을 추구했다. 이는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독자적인 전문가들로 도시계획, 문화재관리, 건축분야 그리고 구동독 지역과 구서독 지역의 학자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 문화재 관리 재단의 단체장과 전문가 그룹의 의장인 건축가는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과 만나 매년 개최되는 의회와 도시계획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한다. 지원전제조건으로써의 보전규약은 이 프로그램만의 특이점을 보여준다.



- 주거지역의 개발(städtebauliche Entwicklung von Wohngebieten),
주거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Erschließung von Wohngebieten) (1993)

통일 후 첫 해 특히 구도심에서 발견되어지는 낙후된 주거상태와 대형주거단지들에 대한 부정적인 진단은 주거공간의 보전과 창출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의 도입을 이끌었다. 1993년 행정기구간의 협의 원리의 틀에서 약 51백만 유로가 프로그램 ‘주거지역의 개발’에 투입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주거용도토지의 개발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주거 지역으로의 접근성’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건물신축에 사용될 부지정리를 위한 단기적인 준비를 위한 조치였다. 지원금액은 주거단지로 사용될 부지에 따른 가로망 신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그 밖의 조치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1993년과 1994년 사이 약 204백만 유로의 연방정부 예산이 약 600개 이상의 조치와 함께 440개의 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되었다.

□ 대규모 신축지역 개발(Städtebauliche Weiterentwicklung großer Neubaugebiete) (1993-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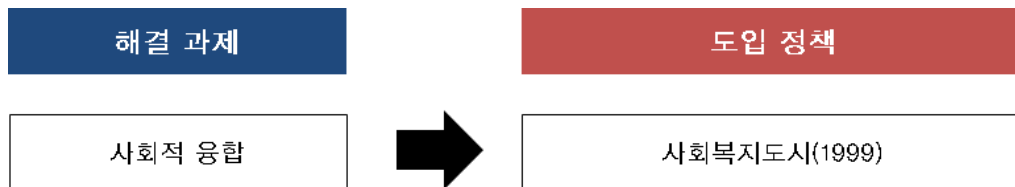
- 도시재생/ 대규모 주거단지와 조립식 주거단지에 있는 건물 개보수, 주거환경 개선 및 가치증진/ 주거환경의 지속적인 개발/ 용도 혼합의 강화와 공공 참여/ 도시조직으로의 주거단지 연결
- 연방정부지원 : 230백만 유로
- 지원받은 도시와 기초지자체 : 145

구동독 지역에 있는 대규모 조립식 주거단지는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주거공급을 위해 필요했다. 이 주거단지를 향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 지역에서의 균형 잡힌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책 프로그램의 영역을 넓혀 ExWoSt-연구영역의 11개 시범 프로젝트와 함께 1993년 도시개발지원 정책에 추가적으로 대규모 신축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신축지역은 거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했다. 기존 주거환경의 결함과 소규모 상가들과 서비스업, 사회문화적인 기반시설들의 문제점들이 제거되어야 했다. 연방정부는 약 236백만 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했고 145개의 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던 182개의 조립식 주거단지가 2001년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이런 조립식 주거단지는 인기 있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통일 바로 직전에 건설된 신축단지는 이런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주거환경, 미약한 건축기술적인 질 그리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택상품으로써 조립식 주거단지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주거단지들이 증가하는 고급 주거유형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했다. 구동독 지역에서 이 신축주거단지에 원격난방시설을 끌어들이려고 힘쓰고 있을 때 1990년대 중반부터 조립식 주거단지의 많은 거주자들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또는

개보수가 완료된 오래된 건물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신축지역의 평균 거주자 연령이 낮아지고 이주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 지역에 정착하려는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구서독 도시에 있는 일 자리를 찾아 떠났다. 품질향상에도 불구하고 이 조립식 주거단지들은 항상 주택시장에서의 낮은 수요를 보여 주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부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규모 조립식주거단지로 유입되지 않았다. 타 지역 및 도시외곽지역으로의 이주 및 변화된 주거요구사항으로 인해 구동독의 인구수는 계속해서 감소하였고 이 대규모 조립식 주거단지의 공가 현상을 초래했다. 전체적인 산업 분야의 붕괴도 작업장 인근에 자리하고 있던 대규모 주거단지들로부터의 거대한 이동을 유발시켰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사회적 구조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 사회복지도시(Soziale Stadt) (1999)

- 통합적 접근 / 활성화 및 참여성 / 단지관리 / 자원연결 / 모델계획
- 연방정부지원 : 888.6백만 유로(~2009), 94.7백만 유로(2010), 28.5백만 유로(2011)
- 지원받은 도시와 기초지자체 : 375

구동독 도시 뿐만 아니라 구서독 도시들에서도 표출되고 있던 사회적 분리 현상에 대해 도시개발지원 정책은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시작한다.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과 함께 연방정부는 1999년부터 도시건축적인 가치증진과 소외된 지역들의 사회적 융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도시 내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조치들과 함께 도시재개발을 위한 건축적 투자가 연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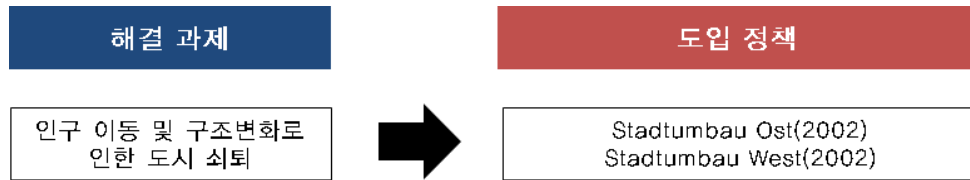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은 2012년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주거 질의 도시건축적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도시-지역투자’로 수정된다. 우선적인 목표는 해당되는 지역에서 사회적인 결함과 모든 인구구성그룹들의 융합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여러 세대를 아우르며 가족-친화적이며 동시에 고령자들을 배려하는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지원하게 되고 사회통합적인 조치사항들을 전제로 투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도시중심지, 시민센터, 광장 그리고 공동체 삶을 위해 필요한 공공공간들이 강화된다.

프로그램 실행 지역을 확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원에 있어 추진력을 더하고 전문영역을 넘나드는 공동의 해결전략을 발전시킨다. 새로 수정된 프로그램과 함께 현장에 맞는 도구들, 협력단체 그리고 조치사항들이 결정되고 연계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제분야와 사회분야의 파트너들, 시민재단과 봉사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긴밀하게 연결된다. 대책안들의 조율과 주민들 활동의 활성화는 현장에서 단지관리(QM)를 통해 이행된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억 유로의 연방정부예산이 투입되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 연방정부가 투입예산의 3분의 1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와 지자체 내에서의 재정투입까지 합치면 약 3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조치사항들의 40%는 대도시에서 실행되었고 비슷한 비율로 중소규모 도시에서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20%는 소규모 도시 및 시골지역의 지자체에서 사용되었다. 2014년 말까지 390개의 지자체에 총 659개의 조치사항이 진행되었으며 2013년에 150백만 유로가 투입되었고 2014년에는 이에 40 백만 유로가 추가되었으며 2015년에도 150백만 유로가 예산으로 잡혀 있다. 전체적인 도시부흥전략으로 수립된 이 프로그램은 투자적인 조치사항 외에도 비 투자적인 성격의 조치사항, 예를 들어 고용창출과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이민자들의 사회적 융합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도시개발지원 정책인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의 파트너 프로그램으로써 유럽사회기금과 독일환경청의 지원 아래에 고용시장 보완책으로써 ‘프로그램 단지 내 교육, 경영, 직업’이 도입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도시개발지원정책과 고용시장대책이 맞물려 사회복지도시 추진 지역 중 특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중점사항을 추진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거주자들의 자격향상과 사회적 상황 개선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가는 이행기의 청소년들의 직업 양성교육을 후원하며 그들이 고용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유럽사회기금의 지원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4백만 유로의 유럽사회기금과 60백만 유로의 연방정부 재정이 투입되었다.



□ 동독지역 도시재생(Stadtumbau Ost) (2002-지속)

- 도심지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쇠퇴하는 도시지역 가치증진, 통합된 도시개발계획
- 연방정부지원 : 10억 유로 (~2009), 2010년 94.7백만 유로(2010), 82.9백만 유로(2011)
- 지원받은 도시와 기초지자체: 425

1990년대 동독 지역의 공가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연구 결과에 따라 2000년 연방정부에 의해 ‘주택시장의 구조변화’ 라는 명칭의 전문가위원회가 구동독 지역에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그들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100만호에 달하는 공가-조립식 주거단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의 수를 언급하며 약 40만호의 노후 주택들이 통일 시점에 이미 그들의 노후상태로 인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18년 이전에 동독에서 건설되었던 주택건물의 약 3분의 1이 1990년대 말에 공가로 놓여졌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은 독일제국시기에 건설된 규모가 큰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도시건축적 결함 상태에 처해 있는 Chemnitz, Grlitz, Halle, Leipzig 그리고 Magde-burg가 이에 해당한다. 조립식 주거단지에서 공가율은 각 지역 사이에서 커다란 차이(0%에서 30%까지)를 보였으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이 수치에 대한 대응으로 2001년 ‘Stadtumbau Ost 프로그램’이 도시개발지원 정책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준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공가상태에 대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구동독 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상위 단계의 전략으로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과 함께 연방공모전이 진행되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공모전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과 주택시장의 통합된 계획안을 발전시켜야 했다. 이 계획안에는 향후 인구변화 추세와 주택정책의 발전에 대한 분석이 기재되어야 했고 이는 향후 ‘Stadtumbau 프로그램’의 수단으로 대체되었다. 이 연방공모전을 통해 성장과 쇠퇴에 따른 도시의 발전 추세에 대해 공공연한 분위기에서 토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이 만들어졌다.

Stadtumbau의 목표는 통일 후 붕괴와 사회적 침식에 직면해 있는 도시지역들의 안정화와 많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 노후건물들의 보전이었다. 하지만 먼저 철거정책이 중심으로 떠올랐고 공공연하게 철거 프로그램으로 간주되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정부 지원으로 35만 호의 주택을 철거한다는 다소 ‘딱딱한’ 프로그램의 목표가 구동독 도시와 자치단체들의 매력적인 삶과 일의 터전을 보장하고 창출하기 위함이라는 ‘부드러운’ 목표에 비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보였기 때문이다.

‘Stadtumbau Ost 프로그램’의 기틀 아래 2002년부터 2011년 중반까지 총 약 30만 호의 주택건물이 철거되었다. 공가율은 평균 2002년 16.2%에서 2011년 8.3%로 줄어들었다. 구동독 도시의 도심지에 위치한 80%에 해당하는 노후주택건물들이 개인소유주에 의해 점유되어 있었고, 이런 인주택소유주들은 Stadtumbau 계획안 작성 시 원격회의와 위원회 소집 등에 계속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동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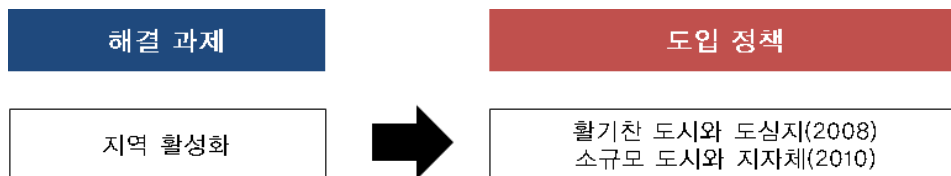
‘Stadtumbau Ost 프로그램’은 전면철거 뿐만 아니라 개선을 위한 부분철거정책을 연계시켰다. 공가상태로 놓여있던 도시외곽의 부분철거를 통해 비어있는 공공용지와 도심지를 강화시키고 보전시킬 수 있는 지역들의 가치가 개선되었다. 이를 위해 개선조치들은 특히 역사적 구도심 지역이나 독일제국시기 형성지역에 집중되었다. 구동독 도시들의 도심지들은 지난 여러 해 동안 ‘Stadtumbau Ost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개발지원 프로그램들 속에서도 포괄적인 도시 개선 정책의 대상이었다. 이 지역들은 오늘날 기능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지 주변과 몇몇 독일제국시기 형성지역에 면한 중심대로에는 아직도 공가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고 계속해서 많은 개발요구가 뒤따르고 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과 중요한 공급시설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 서독지역 도시재생(Stadtumbau West) (2004)

- 도심지 강화, 경제적 구조변화 또는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한 도시구조변화에 직면한 지역 재생, 오래된 주거지역에 대한 최신 요구사항 반영
- 연방정부지원 : 365 백만 유로(~2009), 85.7 백만 유로(2010), 75.1 백만 유로(2011)
- 지원받은 도시와 기초지자체: 398

통일 이후 도시개발지원의 중점추진사항이 구동독 도시로 옮겨갔기 때문에 구서독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철저하게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구서독 도시들은 시청이나 학교 건물 같은 자치단체소속 공공건물의 개보수에 집중했고 개인소유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보류되었다. 이는 즉 전면적인 도시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장애물로 드러나게 된다. 많은 지역들이 1991년부터 정부지원으로부터 배제되었고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종료되었다. 이에 더해 서독도시들에서는 도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번창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에 시달렸고 개보수가 필요한 건물들과 공가 상태로 놓인 건물들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지자체들은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16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2004년도 도시개발지원 정책인 ‘Stadtumbau West’ 로 확장되었다. 많은 수의 구서독 도시와 지자체들이 구동독 도시와 같은 방식으로 개선 및 철거조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 ‘Stadtumbau West’ 의 실행중점사항은 도심지, 다양한 시기에 건설된 주거단지 그리고 산업시설 유희지 및 군사시설 전환부지를 재생시키는 것이었다. ‘Stadtumbau Ost’ 처럼 ‘Stadtumbau West 프로그램’ 도 도시전체적인 계획과 전략적인 실행의 통합이 요구되었다.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조치들은 지속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 ‘Stadtumbau West’ 계획안은 개인적인 관계자들 특히,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들 간의 긴밀한 협력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협업과정은 2004년 이래 고유의 규정으로 건설법전 Stadtumbau 조항 § 171a-d에 법제화되었다. 이 항목은 건설법전의 특별도시법 규정을 보완해 주고 있다. Stadtumbau는 구동독 도시와 구서독 도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인구와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와 연계된 도시건축적 상황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 활기찬 도시와 도심지 Aktive Stadt- und Ortsteilzentren (Zentrenprogramm) (2008)

- 통합 실행 / 협업 활성화와 능동적인 개인 참여 / 건설정책과 참여정책의 결합
- 연방정부지원: 882,9백만 유로(~2009), 85.7백만 유로(2010), 90.1백만 유로(2011)
- 지원받은 도시와 기초지자체: 281

이 프로그램은 많은 지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도시 중심지의 기능 상실에 대한 조치로 도시내부에 위치한 생산지역들, 공가상태에 직면한 소규모 공업 지역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지원금액은 재정비 및 현대화, 건축과 토지정리 및 도시경영 등을 통한 이 지역의 가치상승과 특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지자체는 예산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기금의 50%는 연방정부의 도시개발지원 예산에서 충당되고 나머지 50%는 개인적인 관계자들이나 추가적인 지자체 예산을 통해 확보된다.

□ 소규모 도시와 지자체 – 범지역적인 협력작업과 네트워크(2010)

Kleinere Städte und Gemeinden – überörtliche Zusammenarbeit und Netzwerke

- 기초지자체 상호간 또는 범지역적 협업, 기반시설 개성, 계속되는 지원수단들과의 결합, 범지역적 개발계획
- 연방정부지원: 7.6백만 유로(2010), 50.3백만 유로(2011)
- 지원받은 도시와 기초지자체: 75

인구변화와 경제변화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 일자리 상실과 타 지역으로 전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현재 시골과 그 주변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들은 존재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를 맡고 있고 이런 곳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주변지역들과 연결함으로써 정체적인 개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런 농경지역들과 소규모 도시의 생존에 있어서의 안정화에 중점사항을 두고 지원정책을 강화시키하고자 ‘농촌 기반시설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소규모 도시와 지자체 – 범지역적인 협력작업과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10년 이래 소규모 지자체들의 중요한 과제 수행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2. 도시개발지원 정책 (Städtebauförderung)³⁷⁾

1) 개요

도시개발지원은 독일 연방정부의 도시 및 건축 분야의 핵심정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정치적 과제이자 도시재개발의 재정투입에 있어 중요한 기본토대이다. 도시개발지원은 경제, 기반시설, 사회복지 및 보건,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를 연결하여 통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각 지역에 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현재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심적인 투자 및 지휘수단이 되고 있다.

1971년에 도시개발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로 도시개발지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후 1986년 연방건설법에 함께 기재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다. 즉, 도시개발지원 정책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도시개발지원은 2007년도에 발의된 국가도시 발전정책(Die Nationale Stadtentwicklungspolitik)의 중요한 초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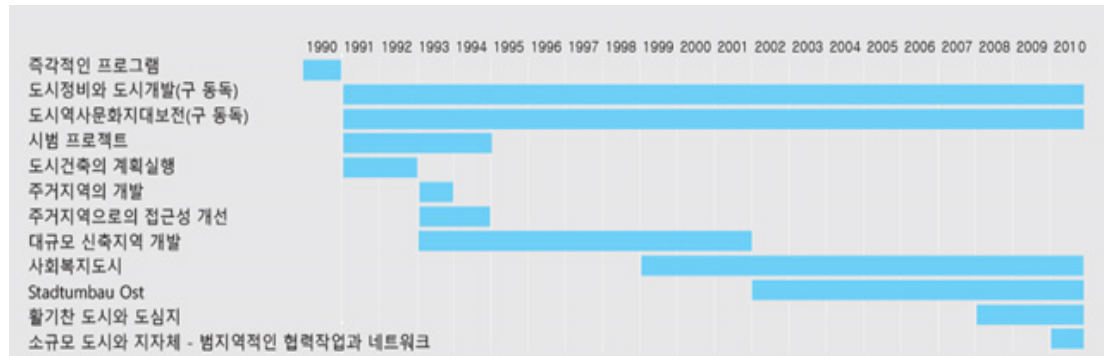
건설법전 § 164b Abs. 1 조항에 따라 각 주의 재정투입과 관련한 사안들이 행정기구간의 협의 원리(Verwaltungsvereinbarung (VV) Städtebauförderung)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매년 체결된 협의사항 안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도시개발지원을 위한 재정적 배분, 투입 그리고 예산을 합의한다. 그러면 주 정부는 이 예산을 지자체에 다시 배분한다. 이런 방식으로 각 주별 상황에 맞춘 도시개발조치와 전략적인 지원항목 그리고 지역에 따른 요구사항들이 소규모 단위로 확정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획권한을 가지고 도시건축정책을 준비하고 실행시킨다.

2) 추진 프로그램

도시개발지원 프로그램들은 현재의 도시발전 경향 속에서 다양한 요구사항과 문제관계를 반영하며 사회적,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전과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통일 후 약 20년간 진행되었던 도시개발지원 프로그램은 아래 그림과 같고 이 중 현재는 ‘도시역사문화지

37) 본 장은 Jürgen G. G. Decke-Stellmann Thorsten Wagener, "Die Städtebauförderung - ein wichtiger Begleiter des ostdeutschen Transformationsprozesses", 20 Jahre deutsche Einheit,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Heft 10/11, 2010) 주요내용을 요약하였다.

대보전’, ‘사회복지도시’, ‘Stadtumbau Ost’ , ‘Stadtumbau West’ , ‘활기찬 도시와 도심지’, ‘소규모 도시와 공동체’ 총 6개의 프로그램이 핵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정비와 도시개발(구 동독)’ 프로그램은 1971년부터 도입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2012년 새로운 예산투입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고 2015년을 끝으로 모든 지원이 종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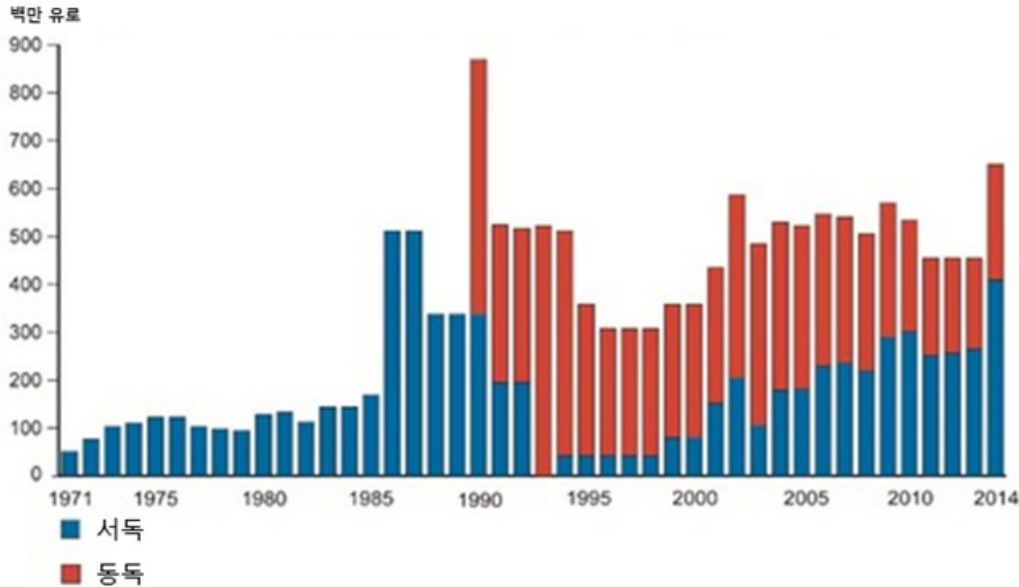
[그림 4-2] 도시개발지원 프로그램 1990년부터 2010년(통일 후 20년간)

(Jürgen Göttsche-Stellmann Thorsten Wagener, "Die Städtebauförderung – ein wichtiger Begleiter des ostdeutschen Transformationsprozesses", 20 Jahre deutsche Einheit,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Heft 10/11.2010), p748

3) 자금조달 및 투입

도시개발지원의 자금조달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연방정부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프로그램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의 예산 투입이 40%이고, Stadtumbau Ost 중 철거를 위한 예산은 연방정부가 50%를 맡고 있다. 주 정부도 연방정부처럼 높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예산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처리한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연방정부 예산 계획 안에서 확정된다. 이 연방정부 예산계획에서 이미 연방환경건설부의 개별계획으로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 프로그램’,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프로그램’ 그리고 ‘Stadtumbau 프로그램’이 구서독과 구동독도시를 위해 편성된다. 이는 동, 서독 지역에 특화된 수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근거로 한다. ‘사회복지도시’와 ‘활기찬 도시와 도심부’, ‘소규모 도시와 지자체 - 범지역적인 협력작업과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독일연방 전역에 걸쳐 착수된다. 2008년까지는 도시건축적으로 높은 개발요구를 지니고 있는 구동독 지역 지자체에 지원 중점사항이 놓여 있었다. 2009년부터는 구서독 지역에도 자금조달의 배분이 강화되어

투입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구동독 지역의 인구비율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더 높은 비율의 연방정부의 재정적 도움이 구동독 지역에 투입된다.



[그림 4-3] 구동독, 구서독 지역별 연방정부의 도시개발지원 재정투입 현황 1971~2014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StBauF/DE/Grundlagen/Mittelverteilung/Mittelverteilung_nod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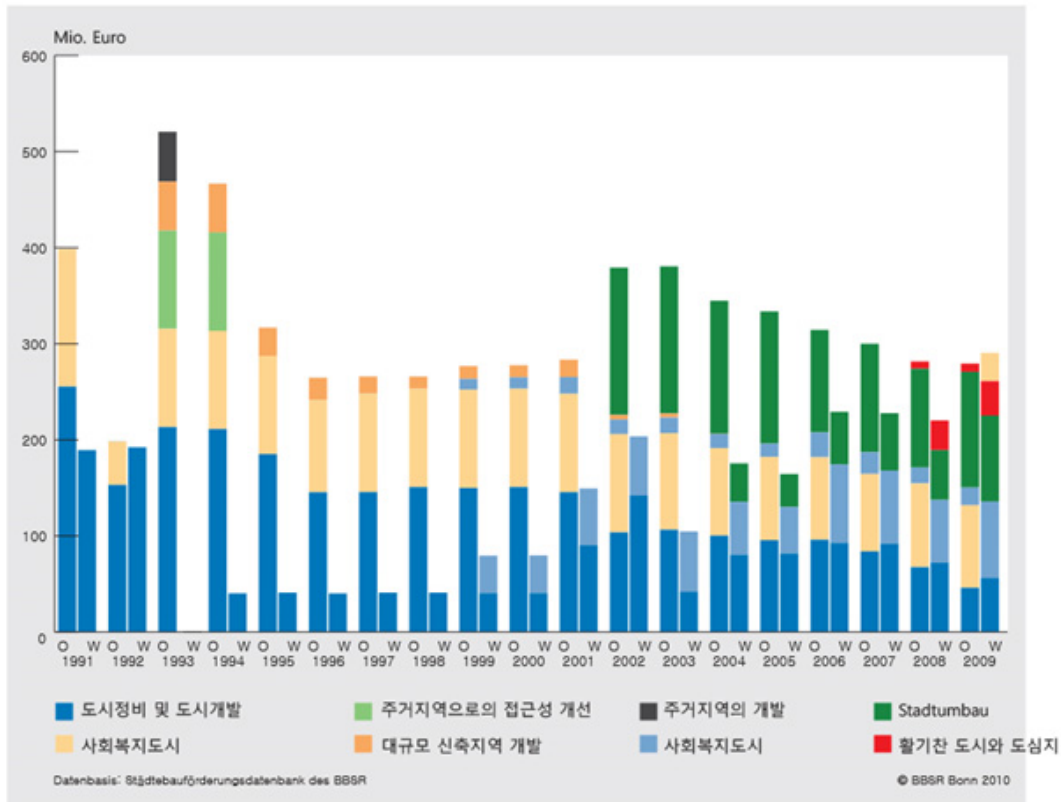
□ 자금조달의 분배

자금조달의 분배는 주정부별로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소들과 여러 가지 가중치에 의해 BBSR(독일 건물, 도시 및 공간개발 연방연구소)에 의해 책정된다. 이 때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한 주정부들의 수에 따라 전체 지원 예산이 분배된다. 자금조달의 분배 기준을 위한 기본구성요소로 외국인 이주자 비율, 고령층 비율 등을 포함하는 인구구성, 보유 건축물의 상태, 실업률, 공가율 등이 고려된다. 그 중 기본구성요소인 인구구성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70%까지 고려된다.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 프로그램’과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특정한 기간에 2% 이상의 인구감소를 보이는 지자체, 외국인 거주자 구성비율, 1981년 이전 건축된 건물의 세대수 비율에 근거하여 예산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 구성요소들은 각각 7.5%까지 예산에 책정된다. 이는 동독과 서독 지역을 분리한 후 각기 따로 이루어진다. ‘활기찬 도시와 도심지 프로그램’은 동독과 서독 지역이 함께 같은 기준으로 독일 전체 지

역을 대상으로 예산 분배가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은 인구구성비율과 함께 실업률(22.5%)과 외국인 비율(7.5%)을 근거로 독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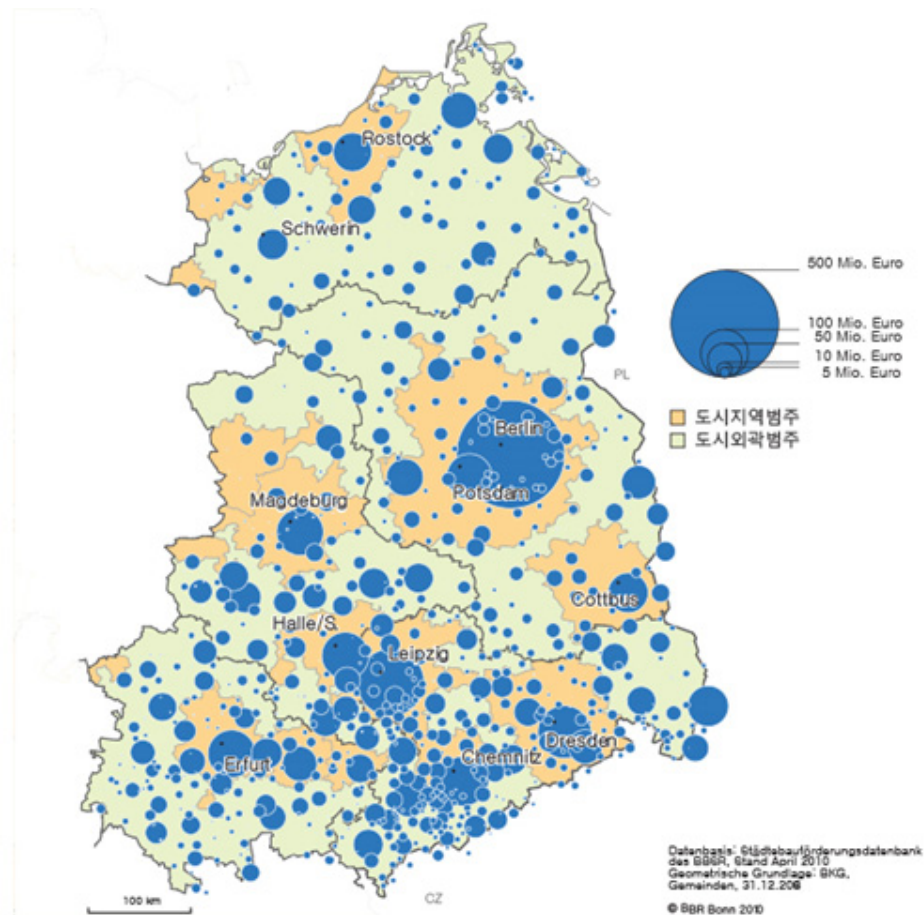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도시개발지원 정책의 투입 준비에 있어 우선적으로 동독과 서독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구조적 차이점을 깊이 고려하였다. 어떤 정책(도시역사문화지대 보전, Stadtumbau)들은 동, 서독 도시의 구분 없이 투입되었던 반면 어떤 정책(도시정비 및 도시개발)들은 동, 서독 도시를 분리하여 투입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과 활기찬 도시와 도심지 프로그램, 소규모 도시와 지자체 - 범지역적인 협력작업과 네트워크 프로그램 같은 최근에 새롭게 시행된 프로그램들은 이에 반해 독일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구동독 도시들은 이런 최근의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지원수단의 확보를 위해 구서독 도시들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그림 4-4] 동독, 서독 연방정부의 도시개발지원 1991년부터 2009년
(Jürgen Göttsche-Stellmann Thorsten Wagener(2010), p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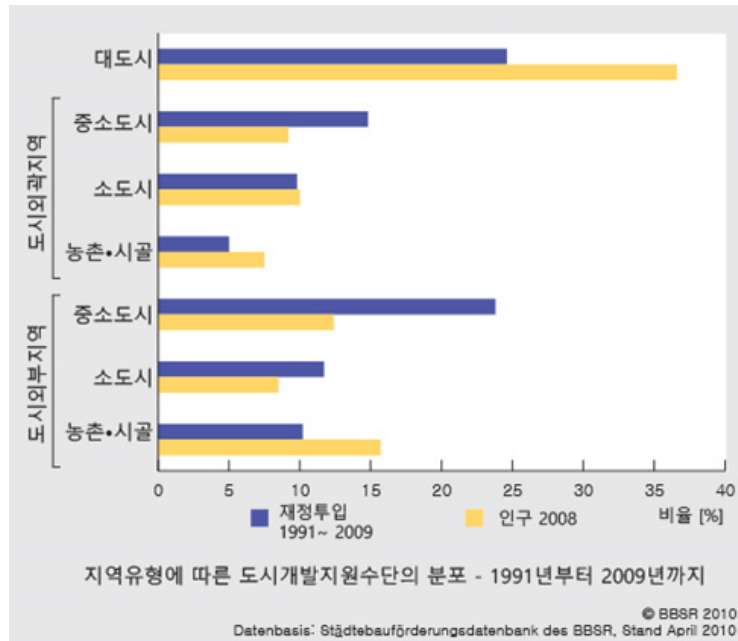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지원금액의 발전사향을 서독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동독 도시들에 월

등히 많은 지원수단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동독 도시들의 높은 개보수 요구에 따라 구서독 도시에서의 도시개발지원 금액은 명확히 낮은 단계로 인하여 있다. 1993년에는 심지어 구서독 도시에서 도시개발지원을 포기했고, 연이은 해에도 구동독 도시의 지원 금액에 비추어 아주 소수의 지원만이 이루어졌다. 1999년부터 처음으로 독일 전역에 걸친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구서독 도시에도 특별요구사항을 지닌 채 그 동안의 차별로 손해를 보고 있는 도시들에 지원수단이 투입되었다. 2009년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프로그램의 구서독 도시로의 확장으로 인해 구서독 도시의 지원정도가 구동독 도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도시개발지원 정책 시행 이래 처음으로 구서독 도시에 대한 지원이 구동독 도시를 능가하게 되었다.



[그림 4-5] 구 동독 지역 도시개발지원의 공간적 분포 상황 - 1991년부터 2009년
(Jürgen Göttsche-Stellmann Thorsten Wagener(2010), p751)

위의 그림은 1991년에서 2009년 사이 동독 지역에서의 승인된 연방정부 재정투입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Erfurt, Sachsen의 삼각지역(Halle, Leipzig, Dresden, Chemnitz)과 베를린에서 도시개발지원의 투입이 두드러져 보인다. 하지만 이 재정투입이 단지 대도시와 밀집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주지는 않는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도시외곽 지역에도 골고루 지원대책이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지역유형에 따른 도시개발지원수단의 분포
- 1991년부터 2009년까지
(Jürgen Göttsche-Stellmann Thorsten Wagener(2010), p751)

동독 전체 지원지역에 동독 인구의 37%가 살고 있는 반면 1991년과 2009년 사이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온 지원금액은 약 46%에 해당한다. 특히 도시 외곽지역의 중규모 도시에 대한 지원을 봤을 때 지역인구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재정투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 외곽지역의 소규모 도시들과 도시외부지역의 중규모 도시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을 보면 약 25%의 지원금액이 투자되었던 반면 인구비율을 이를 상회하는 37%에 달한다.

4) 추진주체별 역할

①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도시개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건축환경을 구축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기본법 조항 104b에 상응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도시건설지원의 행정기구간의 협의 원리의 토대 위에 재정적 투입을 확정짓고 이는 주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완된다. 기본법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정책의 재정투입 시 각각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원가능 금액에 관여한다.

② 각 주정부

한 편으로 주정부들은 연방정부 - 주정부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연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연방정부의 수단을 보완할 의무를 가진다. 다른 한 편으로는 주정부의 조치와 재정적 도움과 함께 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다른 자본공급처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도시개발행위의 주체자로서 지휘권을 갖게 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다른 후원자들의 지원수단을 연결하고 예산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③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정책의 투자책임자로 지원수단에 대한 신청과 보완의 의무가 있다. 동시에 도시개발정책에 있어서의 과제와 책무를 가지고 있다.

- 사전 조사 및 실행 준비/ 도시정비지역 및 보완지역의 공식적인 확정 및 발령
- 도시건축계획 수립(리먼플랜, 지구단위계획)/ 지역 거주자에 대한 정보 및 관리 (사회보장계획)
- 발굴 및 진입로 계획 실행/ 디자인 실행/ 산업체 및 개인 투자 실현을 위한 관리/ 재정 투입
- 공공요구시설과 관련시설 설립

④ 기업

직접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건설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적합한 기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도시정비계약의 체결을 통해 도시정비책임자로 위임될 수 있다. 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행영역의 도시정비과제를 맡게 된다.

- 도시정비조치의 실행/ 정비수단의 경영관리
- 대상 부지 취득 또는 도시정비의 준비 또는 실행을 위한 권리 획득

가능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건설법전 § 157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마무리 작업과 비용처리 관련 업무를 도시정비책임자와 다른 업체에게 맡기거나 법적 또는 경영적으로 도시정비책임자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업체에게 맡기게 된다.

5) 시사점

도시개발지원은 1990년 이래 독일 정책에 있어서 확실한 성공사례이다. 구동독 도시들은 많은 다양한 시각을 보여 주었고 그 곳에서 얻게 된 많은 경험들은 도시계획의 중요한 추진력과 내용들을 얻게 해 주었다. 구동독에 위치한 연방구성의 각 주들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양의 현대화 및 전환 과정들을 통해 독일 모든 주 정부의 향후 발전을 추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동독 도시들의 도시재개발의 실질적인 성공 요인은 추진과제가 명확했고 정책적으로 그 목적이 확실했으며 도시들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심으로 책임을 맡아 수행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구동독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재정투입을 감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지원은 유일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조세규칙, 경제지원정책, 고용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건립 그리고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 인구발전

도시와 지자체 안에서의 인구변화는 이동에 의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역구성원, 그들의 삶의 질, 고용의 기회에 따른 지역의 호감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지금도 예전과 같이 구 동독지역에서는 구 서독지역으로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1989년과 1990년에 발생한 대규모의 인구이동으로 350,000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유출되었고 동독 지역의 인구감소가 지금은 많이 경미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여전히 연간 50,000명의 인구가 서독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2003년 이후부터 구동독 지역의 대도시들은 경미하지만 긍정적인 인구발전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대도시가 아닌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중소규모 도시에서 이는 두드러진다. 이런 현상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도시 및 지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 건물상태

개보수 및 현대화 과정과 노후 건물의 철거를 통해 구동독 지역에서 발견되던 도시 주거의 낙후된 환경은 지난 20년간 분명하게 호전되었다. 이로 인해 통일 이후 동서독 간에 존재하던 주거건물의 격차는 단기간 안에 많이 좁혀지게 되었다. 1990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며 서독 거주자의 4%가 살고 있는 주거건물의 개보수 또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에 해당하는 동독 거주자는 28%에 달했다. 2000년까지 이 격차는 좁혀져 2008년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보면 같은 질문에 서독에서는 2%, 동독에서는 3%가 응답했다. 통일 후 10년 안에 동독과 서독은 비슷한 발전궤도에 진입하게 되었고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BBSR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도시개발지원 정책이 이에 기여했음은 확실하다.

□ 지역사회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진행된 도시개발지원 정책은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의 건설경제가 되살아났고,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구도심의 보전과 정비를 위해 여러 가지 활성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도시의 기능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주민들이 그들의 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 정책적 발전

통일로 인한 변화는 도시개발지원 정책에 있어 스스로 혁신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독의 정치영역이 서독과 달랐기 때문에 서독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지원 정책을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었고 변형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를 통해 해당 과제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강화시켜야 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1991년에 이미 재빠르게 도입된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프로그램은 황폐화된 구도심에 놓여 있는 가치 있는 수많은 건축 자산들을 보전하는데 성공하였고, Stadtumbau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인구감소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독의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도시개발지원 정책은 그 가능성을 확장시켜 나갔다. 동독의 도시에 도시개발지원 정책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으며 도시발전을 이끌어 나갔다.

3. 추진 프로그램 적용 사례

1) 낙후된 도심지 재건, Berlin Spandauer Vorstadt³⁸⁾



주정부 : 베를린
지자체 : 베를린 미테
프로그램 :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진행기간 : 1993-2008
지역규모 : 67ha
지원규모 : 205백만 유로
지역유형 : 노후 도심지

[그림 4-7]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

(Die Sanierung der Spandauer Vorstadt 1993-2008 Prozess und Ergebnis, Bezirksamt Mitte von Berlin Abteilung Stadtentwicklung Amt für Planen und Genehmigen, 2008, p12)

① 개요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는 베를린에서 역사적으로 성장되어온 도시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장소로 300년에 가까운 베를린 도시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시답게 보전 가치가 높은 건축물들이 많았고 토지 또한 보전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몇 안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방치된 채 낙후상태에 놓여 있었고, 전체 토지 중 약 96%에 해당되는 부분이 복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시정비 초기부터 높은 개보수 압박에 시달렸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작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도시역사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보수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 중요한 도시정비 목적

- 문화역사적인 관점에서 구 시가지로써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보호와 관리

38) Berlin(2008), Die Sanierung der Spandauer Vorstadt 1993-2008 Prozess und Ergebnis, Bezirksamt Mitte von Berlin Abteilung Stadtentwicklung Amt für Planen und Genehmigen

독일환경부 홈페이지, 베를린홈페이지 내 Berlin Spandauer Vorstadt 사업소개 자료 요약 정리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StBauF/DE/Programm/SanierungsUndEntwicklungsmassnahmen/Praxis/Massnahmen/Spandauer_Vorstadt/spandauer_vorstadt_inhalt.html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staedtebau/foerderprogramme/denkmalchutz/de/foerdervorhaben/spandauer_vorstadt/am_zwirngraben.shtm

- 주거기능의 확보 및 강화, 가내수공업 시설과 소규모 상업 구조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심지에 인접해 있는 주거와 일터의 혼합적 도시기능의 실현
- 통과차량 감소, 공업시설 및 가정연료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감소와 사유지 개방 및 블록 내부 중정 공간의 연계를 통한 오픈 스페이스 계획을 통한 환경여건 개선

상기 나열된 목적들은 재정비계획에 구체화되어 있고 도시건축적인 라멘플란의 틀에서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런 재개발에 있어 베를린 미테 행정관구가 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베를린 도시계획청과 개보수행정청에서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베를린의 도시재개발 후원을 위한 협력 사무소(Koordinationsbüro zur Unterstützung der Stadterneuerung in Berlin)가 정비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Monbijou광장, 하케웨 시장, Joachim도로와 Stein도로 그리고 Mulack도로변으로 공간을 위요할 수 있는 물리적 벽면이 다시 형성되었고 St. Hedwig병원을 건설함으로써 Krausnick도로에 면해 존재하던 건물 사이 틈새공간이 단히게 되었다. 예전에 존재하던 166개의 건물틈새공간과 유휴공간들이 114번에 걸쳐 채워졌다. 노후건물로 놓여 있던 4,060개의 주택들이 2006년 말까지 약 85.6% 까지 전체적으로 정비되었고 현대화되었다. 역사적으로 보전해야 할 부지는 까다로운 건축 기준을 통해 높은 수준으로 개발되었고, 주거기능과 상업용도에 대한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해소시켰다. 신축건물에는 1,187개, 노후건물의 최상층에는 418개의 주거가 새로 들어섰다. 도시개발에 있어 주택비율을 확정시키고 자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시재개발 취지를 설명, 교육하며 건물의 컨셉 및 평면계획 시 미래의 거주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높은 수준의 신축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다. 많은 놀이터, 녹지공간과 도시 광장들이 새로이 조성되었고 도로변 공공 공간들이 재정비되었다. 가족친화적인 단지개발은 무엇보다도 전체 거주자 인구 중 어린이 비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프로그램은 한 편으로는 도시건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건축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도심지 공간을 주거공간으로써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다양한 용도들의 혼합을 통한 생기 넘치는 도시공간 창출과 신축 건물들의 높은 건축적 수준 그리고 지역 고유의 독특한 매력의 보전을 통해 도시생활과 도시주거를 꽃피웠다는 것이 이 지역에서 진행된 도시역사문화보전지대 프로그램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8] Oranienburger 도로에 있는 예술중정(Kunsthof) 1993년의 모습과 정비 후 모습

BBSR(2011), 40 Jahre Städtebauförderung, BMVBS

② 추진프로그램의 역할

□ 도시정비 프로그램

베를린 시의회는 1993년 8월 31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의 변화된 전반적인 목표를 실질적인 도시재개발시 원칙으로 규정하기 위해 ‘베를린의 도시재개발을 위한 원칙들’을 체결한다. 이 중 두 번째 원칙이 변하지 않는 도시의 특성보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항목이었고 이는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에 적합한 내용이었다. 같은 해 9월 21일 베를린 시의회는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를 도시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 10월 9일부터 도시정비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 적용된 방법들:
 - 사회복지계획, 도시정비구역의 공업시설임차인을 위한 예산관련 계획
 - 기반시설 공급분석 / 대중교통로를 위한 교통계획과 도로정비계획
 -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시 노후건물의 현대화 대책을 위한 임대료 상한선
 - 지역과 연관된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주류업 및 음식점 건립 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허가 관리
 - 도시정비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공개토론, 워크숍, 설문조사)
- 도시정비 관계자들:

- 베를린 미테 행정관청, 계획과 허가 부서, 시의회 도시개발청, 정비 수입자, 베를린 도시재개발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사무소, 임대관련 상담소, 도시연구와 관리를 위한 기관,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 관련 대표자들

□ 도시정비 컨셉

통일 이후 지역 내부로 빠르게 침투한 투자에 대한 압박은 목표지향적인 투자의 방향과 전략적이며 통합적인 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개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높은 투자에 대한 압박은 지역을 위한 좋은 발전의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잘못된 개발로의 위험도 발생시킬 수 있었다.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본사항들과 전략들이 논의되어야 했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이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했다. 누구를 위해, 어떤 용도를 위해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가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나? 어떤 부지 위에서 역사적인 도시를 복원시키는 작업이 행해져야 하나? 그리고 어느 곳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가? 토지보전지역 위의 노후건물 개선을 위해 어떤 디자인이 요구되는가? 어떻게 도시건축적인 고유함을 보전할 수 있고, 신축건물이 기존 도시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가?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의 어버니티를 반영하는 장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공공간이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과 동시에 역사적인 구조를 보전한 채 현대적 용도에 맞는 새로운 개발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 역사적 도심과 새로운 오픈 스페이스의 재건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의 개발은 역사적인 도시환경을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의 요구사항과 필요한 도시기능들을 시대에 맞추어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토지보전지역에 있는 노후건물 개보수 - 역사적 건물의 현대화된 주거

점진적인 도시재개발 계획은 노후지역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 토지보전지역에 놓인 노후건물들의 상태는 심각했고 많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대의 요구에 맞는 주거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적화를 위한 모든 가능성이 사용되었다.

□ 지원 프로그램 도시역사문화지대 보전 - 이상적인 도시이미지

1991년부터 이미 도입되어 있던 도시역사문화지대보전 프로그램은 이 지역을 위한 좋은 기회였다. 지원을 통해 개보수된 건물들의 퀄리티는 이미 현재의 요구에 부합할 정

도의 높은 수준으로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의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수단들은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가 도시계획적인 구조와 건축적인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주거양식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 역사적 지역의 현대 건축물 - 신축건물을 통한 역사적 도시 평면위에서의 감각적 보완

도시정비의 일환으로 100개가 넘는 신축건물이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에 건설되었다. 이 중에는 중정공간에 놓인 협소한 노후건물부터 대규모 부지까지, 그리고 전통적인 양식과 현대적인 양식 의 다양한 건물들이 해당되었다. 장소성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 이미지에 점진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 가치증진을 통한 공공공간의 재수용 - 도심지 주거의 부활에 기여

도시외부 개발에 앞서 ‘도시내부 개발하기’라는 베를린 시의 정책은 도심지를 주거지로 강화시키게 만들었다. 공공공간의 가치증진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공간은 지역 정체성의 기본을 이루며 다양한 연령대, 서로 상이한 사회적 계층 그리고 서로 다른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한 곳에 모여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낸다. 이런 의미에서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의 공공공간의 질과 쾌적성이 요구된다.

□ 사회적, 문화적 기반시설의 개선

도심지에 위치한 주거의 퀄리티는 보육시설, 학교, 스포츠센터, 문화여가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퀄리티와 접근성을 통해 결정된다. 주거 퀄리티와 모든 인구구성그룹의 지역 연계가능성은 더 나은 사회, 문화적 기반시설을 통해 높아지게 된다.

□ 역사적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현시대를 반영한 대중교통망 구축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도심지에서의 삶과 일, 경험들을 위해서는 개인교통이 필요하다. 이에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는 교통량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조용한 도심 환경을 원하는 이 지역의 거주자, 또는 주차장을 찾는 방문객, 고령자부터 안전한 등하교길이 필요한 아이들까지 고려하여 교통량 경감을 위한 여러 단계의 방책들과 속도계획, 주차장 관리와 교차로 개보수 등 다양한 계층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③ 개별조치사항 소개

□ Zwirngraben광장 (Hackescher 시장)

슈판다우어 슈타트 초입 부분에는 Zwirngraben 광장이 있다. 이 곳은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장소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 1880년부터 기차역과 기차선로가 들어서며 이 주변지역으로 높은 밀도의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고 많은 공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발생한 공지들은 녹지로 변하기 시작했고 개보수 계획에 따라 90년대 중반 부분적으로 다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점진적으로 건물들이 들어서고 녹지를 보전하면서 소규모 도시광장으로 활용하는 오픈 스페이스 계획이 확정되며 이렇게 조성된 도시광장은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의 특화된 도시 기능 안에 통합되게 된다.



[그림 4-9] Zwirngraben광장의 도시변화 1930년, 1990년 그리고 2005년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staedtebau/foerderprogramme/denkmalerschutz/de/foerdervorhaben/spandauer_vorstadt/am_zwirngraben.shtml)

□ Joachim도로변 주택건물

Joachim도로 20번지에 있는 주택건물은 1780년도에 건설되었다. 1799년도 이 건물에는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는 흡연실이 있었으며 실내공놀이를 할 수 있는 건물로 발전되었다. 1859년 중정공간에 홀이 있는 건물이 들어서고 1803년 이 건물에 나란히 21번지에 경찰서가 들어선다. 측벽을 공유하며 1830년과 1840년 사이에 생겨난 주택건물들과 함께 이 건축물복합체는 건축기념물이 된다. 고유의 건축명면을 유치시킨 채 수작업을 통해 완성된 디테일과 나무로 만들어진 계단실 등이 당시 베를린 임대주택의 유형에 있어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0] 중정공간 파사드의 1992년 모습과 새로 개보수된 모습

사진: Klaus Bädicker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staedtebau/foerderprogramme/denkmalschutz/de/foerdervorhaben/spandauer_vorstadt/joachimstr20_21.shtml)

□ Kunstwerke 개보수

‘버터공장’이라는 이름 아래 중정시설로 유명한 건물이 August도로 69에 있다. 이 건물은 200년 된 건축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4년에 설립된 전면 건물은 아직도 초기의 공간구성을 유지하고 있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들도 당시의 건축양식을 지니고 있다. 1842년에 신축된 Seidenwaren공장과 함께 중정 시설들은 오늘날에도 후기고전주의 양식을 보유하고 있다. 건물의 구조적인 개보수와 함께 원래의 건축요소들이 전문적으로 정비되었다. 1998년 Dan Graham의 계획에 따라 현대유리건축 양식의 카페가 중정영역에 들어섰고 중정공간은 다시 닫힌 공간이 된다. 이 건물에는 12개의 주거건물과 아뜰리에식 주거와 함께 베를린 비엔날레의 행사장으로 사용되는 전시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④ 시사점

슈판다우어 포어슈타트는 높은 퀄리티의 재개발을 통해 급격하게 관광지로 발전되었다. 주류업과 요식업, 여가시설은 과세와 함께 허가되었고 2002년 용도변경금지와 함께 도시에서의 주거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새로 조성된 공공 놀이터, 녹지 및 사회문화기반시설들은 계획법에 의해 보장되었다. 초기 단계 지원수단들의 신속한 준비를 통해 우선 임차인들의 동의와 함께 사회복지계획에 의해 보장되는 재개발이 추진되었고 현대화를 위해 수반되는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었다. 이 지역의 약 6,300세대 중 개보수 정비법에 따라 1,300개의 주거가 연계되어 개선되었다. 정비법 종료 후에도 관련담당국에서는 계속해서 구속 없는 자유로운 그룹 속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Krausnick공원의 경우 공원 내부

영역은 거주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가꿔지고 있으며 관청 주도에 의한 공원 조성과는 달리 공원 내 녹지와 놀이터는 인근 거주자들이 해당 관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받아 유지, 관리하고 있다.

계획, 정비법에 대한 도구, 도시건축계획의 지속적인 이행, 주거를 위한 공공 지원을 목표로 하는 투자방향은 임대료 상한가 제한과 연계되어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었고 높은 퀄리티 속에서의 부지 보전을 통한 도시이미지는 계속해서 발전되었다. 이와 동시에 현대적인 신축건물들은 역사적 도시이미지를 보전시킨 채 계획되었다. 거주자, 상가운영자, 주택소유자 등의 다양한 관계자 그룹을 위해 유동적인 임대료 선정과 다채로운 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이 허용되었고 이는 이 지역의 높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의 도입은 도심지라는 위치로 인해 유발되는 고가치 창출과 압박을 경감시켜 주었다. 동시에 특히 공공 공간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도로 이용가능한 다채로운 도심지 기능의 혼합을 통해 특히 젊은 가족들을 위해 매력적인 도심지역으로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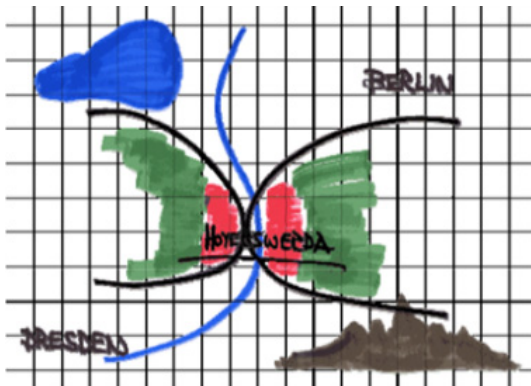
[그림 4-11] August 도로변 전면건물



[그림 4-12] 유리파사드 카페가 있는 중정공간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staedtebau/foerderprogramme/denkmalschutz/de/foerdervorhaben/spandaue_r_vorstadt/auguststr69.shtml)

2) 주거지 개선, Hoyerswerda Neustadt³⁹⁾



주정부 : 작센
 지자체 : 호이에스베르다
 프로그램 : 대규모 신축지역 개발
 Stadtumbau Ost
 진행기간 : 2002
 지역규모 : 398ha
 지원규모 : 2013년까지 연방정부
 예산 : 17백만 유로
 지역유형 : 주거단지

[그림 4-13] 회에스베르다 개요
 (Hoyerswerda(2008), INSEK für die Stadt Hoyerswerda Fortschreibung)

① 개요

Hoyerswerda는 1950년대 동독의 가장 중요한 산업도시로써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갈탄가공 생산구조를 갖춘 도시였다. 1955년에 구도심 서쪽으로 사회주의 계획도시로써 약 16,500세대의 복합주거단지 Neustadt가 건립되었고, 1981년 인구수는 총 약 10배 정도인 71,000명으로 상승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 중심지에 처음으로 문화, 공급시설들이 구축되기 시작하지만 같은 시기 사회구조변화로 인해 급속한 인구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2002년에는 약 20%의 주거건물이 공가 상태로 놓이게 된다.



[그림 4-14] Liselotte-herrmann 도로에 있는 조립식 주거건물 철거 후 들어선 도시빌라
 (BBSR(2011), 40 Jahre Städtebauförderung, BMVBS)

39) INSEK für die Stadt Hoyerswerda Fortschreibung 2008, BBSR(2011), 40 Jahre Städtebauförderung, BMVBS 독일 환경청 홈페이지 내 Hoyerswerda 사업 소개 자료요약

1997년 실시된 ‘주거도시에서 도시로’라는 도시계획 공모전 계획안을 기초로 1999년 도시기본계획 ‘호이에스베르다 2030’이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조립식 주거단지의 철거 및 부분개축이 계획되어 있었고 새로운 주거 퀄리티와 오픈 스페이스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0년부터 이 계획안에 따라 주거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된 지역에는 주거상품의 다각화를 위한 실험주택으로써 4개의 도시빌라가 들어섰다. 2001년에는 Stadtumbau Ost 공모전 참여를 위해 도시개발통합계획(INSEK 2001)이 작성되었고 이와 함께 2015년까지 8,500세대의 주택건물철거에 대한 계획과 3개의 Stadtumbau지역을 확정했다. 구도심, 노이슈타트(398ha) 그리고 Knappenrode가 이에 해당한다. 2003년과 2004년 그리고 2005년에는 각각의 테마로 주거, 경제 그리고 기반시설을 위한 부분계획이 작성되었다. INSEK과 부분계획은 2008년과 2013년에 수정 보완되었다.

호이에스베르다에서 진행된 Stadtumbau는 3가지 영역이 맞물려 움직였다. 조립식 주거단지의 철거, 유흥지의 가치증진과 기반시설의 반환이 그것이다. 주거단지의 개선과 함께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동에 따라 사회기반시설도 조절되어야 했다. 총 약 20개의 기반시설들이 철거되거나 개축되었다. 학교와 보육시설에 대한 새로운 용도가 제안될 시에는 단체 활동공간, 고령층을 위한 시설, 사회보건관련 직업을 위한 교육양성소도 함께 포함되었다.



[그림 4-15] 호이에스베르다 오픈 스페이스 계획
<http://www.werkstatt-stadt.de/de/projekte/188/>

호이에스베르다에서 실시된 광범위한 철거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유희지에 대해서는 그 활용에 있어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INSEK 2008의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드레스덴 공대와 함께 ‘새로운 호이에스베르다 오픈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오픈 스페이스 활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유희지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도심지 인근에서 발생한 유희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녹지를 조성하였고 도시외곽에서 발생한 유희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생태적 조경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의 유희지에는 식재가 이루어졌다.

② 추진 프로그램의 역할

□ STADTUMBAU 관계자들

중요한 관계자로 지자체, 호이에스베르다 주택조합(Wohnungsgesellschaft mbH Hoyerswerda)과 호이에스베르다 생활공간 협동조합(LebensRäume Hoyerswerda eG) 그리고 호이에스베르다 공익사업회사(Versorgungsbetriebe Hoyerswerda GmbH)를 들 수 있다. 노이슈타트에서 많은 수의 주택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2개의 대형 주택회사가 정비와 개보수에 대해 투자하였고 이 모든 관계자는 오늘날까지 도시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담당자로 연계되어 함께 Stadtumbau 정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 거주자들 또한 다양한 참여방식으로 Stadtumbau 진행과정에 개입이 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관련 단체들도 다양한 주제로 관여하고 있다.

□ 유연한 지원 프로그램

구동독 지자체는 건축구조, 문제 상황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있어 커다란 다양성을 띄고 있다. 이런 상이한 문제 상황들은 각 장소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Stadtumbau과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해당되는 지자체와 주택조합이 커다란 자율성 안에서 지원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원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제약이 많은 협소한 대응방안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Stadtumbau Ost 프로그램은 구채무상환과 관련된 수단투입으로 인해 지자체와 주택회사의 활동반경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많은 주택회사들이 무분별한 철거전략의 이행을 위해 구채무상환을 주택철거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 지어 재정적 도움을 받으려는 무리한 요청들을 해왔다. 이로 인해 지원수단의 투입이 보

류되게 되고 그 결과 점진적이며 장소적 조건에 맞는 Stadtumbau 계획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따라서 Stadtumbau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유연한 적용이 필수적이었다. 지원금액의 사용에 관해서는 현장의 관계자들이 결정할 일이지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구채무상환에 대한 개조가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주민참여도 강화

현재 많은 도시에서 Stadtumbau는 주민참여도가 많이 낮은 상황이다. Stadtumbau 계획은 종종 주민들과의 대화 없이 작성되었다. 도시계획가나 건설정책가들은 그들의 계획을 별다른 대안 없이 보여주었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고려되지 못한 채 Stadtumbau 계획안에 반한 저항들은 무시되었다. 많은 사례에서 주민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의지에 맞서 그들의 주거건물로부터 해약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런 정도의 권위적인 계획문화에 대한 결과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단념과 정치적 혐오가 발생했다. 따라서 주민참여도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Stadtumbau계획이 해당 주민들만의 합의와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③ 개별조치사항

□ Lausitzer 광장 주변 노이슈타트 중심지 개발



[그림 4-16] 도시중앙공원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StBauF/DE/Programm/StadtumbauOst/Praxis/Massnahmen/Hoyerswerda/Hoyerswerda_node.html

도심지 개발은 INSEK에서도 핵심적인 과제였다. 구 동독시절에는 단지 하나의 도시 행사장으로써의 Stadthalle가 있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이 곳에 상업지구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Stadthalle옆으로 저층부에 상가시설이 있는 11층의 고층 판상형 주거건물이 들어섰고 이런 식으로 타워형 주거건물도 줄을 지어 건축되었다. 판상형 주거건물은 2002년과 2004년 사이 완전히 철거되었고 타워형 주거건물은 노이슈타트 도심지의 아이콘으로써 남겨놓았다. Lausitz타워라고 일컫는 이 타워형 주거건물에는 새로운 주택평면에 따라 개축되었고 동시에 상가 및 사무실 공간이 생겨났으며 건물의 옥상테라스는 전망공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Stadthalle와 Lausitz타워 사이 철거부지에는 2009년부터 3.5ha 크기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산책로와 다용도 광장, 수광장 등의 시설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노이슈타트의 도심지 외부공간과 도시공원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약 1.3백만 유로가 Stadtumbau 지원수단으로 투입되었고,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시설들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인 호이에스베르다 주택조합(WH)이 투자하였다. 이 공원의 관리와 유지보수는 호이에스베르다 주택조합이 책임지고 있다.

□ 도심지에서 발생한 유휴지에 대한 오픈 스페이스 계획

노이슈타트의 중심지인 도시공원 주변으로는 주택건물철거로 인해 발생한 부지들이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공원’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의 장소로 운동, 여가시설(고령자들을 위한)들로 계획되어 있고, 비치발리볼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Freizeit공원’은 인근 청소년들을 겨냥한 휴식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철거지역(WK2)에는 호이에스베르다 주택조합과의 협업으로 조형공원이 들어섰다.



[그림 4-17] 조형공원 계획안

http://www.scan-hy.de/bilder/full/konzept_1.jpg

□ 도시외곽에서 발생한 유희지에 대한 새로운 생태적 조경공간

도시통합개발계획 INSEK 2008에 따라 노이슈타트 북동쪽에 위치한 세 군데 복합주거지역(WK8,9,10)에는 2020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조경공간을 조성하기로 한다. 광범위하게 진행될 이 조경공간은 경미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되며 도심지에서 도시 외부 자연공간으로 넘어가는 전이공간으로써 기능하게 된다. 커다란 식재들은 새로운 도시경계를 형성하며 공공녹지 공간에는 작은 개별 수풀이 조성된다. 첫 번째 식재는 Stadtumbau 지원 예산으로 시작되고 또한 타협안으로써 갈탄에너지회사로부터 지원되었다. WK8 지구에는 철거부지 위에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함으로써 도시와 전원 사이의 부드러운 전이공간을 형성시켰다. 단독주택을 위한 이런 신축부지 건설은 도시외곽의 철거부지에 대한 대처에 있어 핵심적인 전략이다. 계속해서 호이에스베르다는 이렇게 발생하는 철거부지를 식재 및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한다.



[그림 4-18] 노이슈타트 현재 모습

http://www.scan-hy.de/bilder/full/ssg_4.jpg

□ 공익업무

호이에스베르다의 Stadtumbau 과정은 시장이 주최하는 원탁회의 및 포럼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도 공개되었다. 특히 Orange Box라는 전시부스를 이용해 각종 전시 및 의사소통, 정보전달 공간으로써 활용하고 Stadtumbau 진행과정과 결과를 공지하며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Orange Box는 노이슈타트 중심가와 도심지 사이의 중앙대로 교차로에 세워졌고 노이슈타트와 구도심 두 지역 모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공장이라는 뜻의 'Kulturfabrik'에서는 계속해서 예술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며 Stadtumbau와 호이에스베르다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모티브로 예술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Stadtumbau를 진행하며 변화된 여건에 따른 기술적 기반시설인 공급처리시스템에 대한 조정은 중요한 과제였다. 공익 공급업체(Versorgungsbetriebe Hoyerswerda GmbH - VBH)와 지자체와의 협동작업으로 2005년 기반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실시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대규모 주거단지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Cottbus공대와의 협업을 통해 ‘호이에스베르다 2050’계획을 수립하며 경제적 전략을 재정비하였다. 이 계획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단지의 발전을 고려하여 도시건축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기술적 기반시설을 고려한 계획안은 계속해서 INSEK 계획안에 함께 포함되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었다.

④ 시사점

호이에스베르다는 Stadtumbau Ost 공모전 이전부터 1997년에 벌써 처음으로 주택 건물 철거조치를 시행한 도시로 철거작업이 도시외곽부터 도시내부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약 8,500세대에 해당하는 주거건물들의 포괄적인 철거작업은 마치 계획된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런 철거작업과 함께 철거부지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도 호이에스베르다는 용도변경, 녹지 조성, 기술적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대처하였다.

노이슈타트의 Stadtumbau이행은 단 2개의 주택조합이 대상 부지의 많은 면적과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다른 구동독 지역에 비해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가상황의 대처에 있어 단지 비어져 있는 건물들을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주거단지의 구조 및 활용에 대해 계획할 수 있었다.

호이에스베르다 노이슈타트의 주거건물 개보수 상태는 지금 약 80%까지 진행되었다. 8,492세대에 해당하는 주거건물의 철거 후 공가율은 2012년 6%까지 감소될 수 있었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주택조합은 현재 임시적으로 철거를 중단하는 것에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인구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택수요와 변화하고 있는 요구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고령자층을 겨냥한 주거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고 동시에 인구구조변동을 고려한 기반시설도 계획되어야 한다. INSEK 2008에 따라 2020년까지 약 5,700세대의 주거건물이 더 철거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부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호이에스베르다는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도시발전에 대한 내용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3)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쇠퇴, Wittenberg Jahnschulviertel⁴⁰⁾



주정부 : 브란덴부르크

지자체 : 비텐베르크

프로그램 : Stadtumbau Ost 사회복지도시

진행기간 : 2002-

지역규모 : 27ha

지원규모 : 2013년까지 연방정부 예산

전체지역 13백만 유로

Jahnschulviertel 3.9백만 유로

지역유형 : 독일제국시기 형성 단지

[그림 4-19] Jahnschulviertel현황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

① 개요

브란덴부르크 북쪽 엘베강가에 위치한 비텐베르크는 1990년부터 도시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하며 현재는 약 17,500명이 살고 있는 중소도시이다. 옛 경제적 부흥을 보여주는 독일제국시기 형성지역이 넓게 퍼져 있는 비텐베르크는 DDR 시기에도 그 구조를 남긴 채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통일 이후 독일제국시기 형성지역의 공가 상태가 증가하게 된다. 기차역과 시청 그리고 중심상가거리 사이에 위치한 Jahnschulviertel은 지리상의 이점과 매력적인 건축물들로 두드러진다. 이 지역의 건물들은 3층의 닫힌 블록 구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겐트스틸과 인본주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는 입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약 1,400세대의 주거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은 도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Jahnschulviertel의 중심지 Heisterbusch지역은 기념물보전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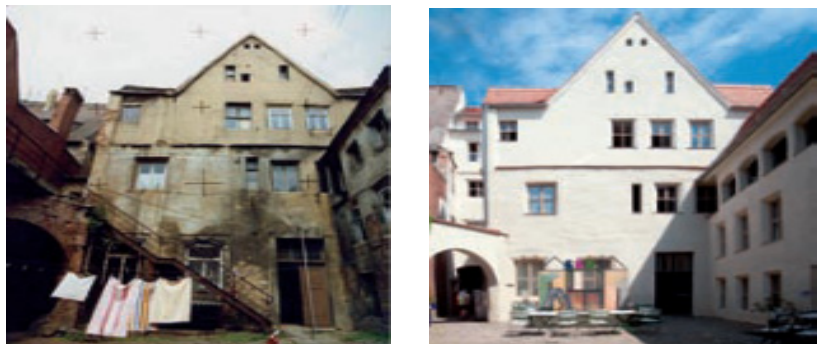
1990년대 초 Jahnschulviertel의 주거건물 중 약 10%가 공가였다. 가치 있는 건물

40) 40 Jahre Städtebauförderung 및 독일 도시개발지원정책 홈페이지 내 Wittenberg 사업 내용 요약 정리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StBauF/DE/Programm/StadtumbauOst/Praxis/Massnahmen/Wittenberge/Wittenberge_node.html

들이 나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개보수에 대한 요구사항은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따라서 1993년 비텐베르크는 공적인 지원 수단 없이 건물들을 개보수하기로 결정하고 역사적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통일 이후 어려운 구조적 상황 속에서 사적인 투자자들이 개발 개입에 있어 소극적이었고, 그나마도 소유권 관계가 명확한 건물들에 한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Jahnschulviertel에 대한 개발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었다. 여러 가지 공적인 복구방식들도 Jahnschulviertel에는 제한적이었고 지자체 차원의 비텐베르크 주택조합(WGW: Wohnungsgesellschaft Wittenberge)도 처음에는 Jahnschulviertel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다.

1990년대 말 Jahnschulviertel의 공가율 거의 50%에 달했고 심각한 개보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1999년 이 지역은 도시정비 지역으로 확정되었고 도시개발지원 정책의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이 도입되게 된다. 이에 더해 지역의 한 부분은 도시역사문화보전지대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2002년 지역의 가치증진에 있어 핵심적인 지원 정책인 Stadtumbau Ost 프로그램에 채택된다. 증가하고 있는 공가 상태와 개보수 되지 못한 채 존재하는 독일제국시기 형성지역에 대해 2015년까지 약 2,400세대를 철거한다는 목표에 여러 관계자들이 큰 이견 없이 동의했다. Jahnschulviertel의 가치증진을 위한 결정에 따라 도시보전과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2007 도시개발계획과 2009 Stadtumbau전략이 고려되었다. Jahnschulviertel을 중점지역으로 하는 부분지역 개발계획이 2011년부터 착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텐베르크 주택조합(WGW)이 역사적 노후건물의 개보수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4-20] 1517년 루터의 반박문이 인쇄된 Cranachhof의 1990년과 오늘날
(BBSR(2011), 40 Jahre Städtebauförderung, BMVBS)

② 실행영역과 재정투입

- 핵심실행영역 : 노후건물 확보 및 개보수/ 관계자 네트워크/ 공공 공간/ 주거환경
- 재정투입 : Stadtumbau Ost (2002년부터), 사회복지도시 (1999년부터)

③ 개별조치사항

Stadtumbau Ost 프로그램을 통해 2002년부터 Jahnschulviertel에 있는 약 20개의 주거건물 정비와 약 10개의 건물들에 대한 포괄적인 안정화 작업에 지원수단이 투입되었다. 이 건물들은 비텐베르크 주택조합 소유의 건물이거나 도시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인소유자에게 양도된 건물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택 임대 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물들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다. 기존 상태를 고려하며 개발을 진행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자는 Jahnschulviertel에서 약 40%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주택조합이었다. 2004년부터 비텐베르크 주택조합은 도시지자체와 협의하여 건물들 정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2007 도시개발계획’에 기반을 두고 중요한 연결도로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들의 개보수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였다. 보완적으로 부분적인 철거를 통해 오픈 스페이스를 발생시키며 개보수 된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켰다. 2005년부터 비텐베르크 주택조합은 매년 약 한 두개의 건물을 높은 수준으로 개보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택조합의 경영상태와 높은 투자비용과 동시에 낮은 임대율로 인해 이런 개보수의 전반적인 상황과 속도는 제한을 받기 시작했다.



[그림 4-21] Johannes-Runge도로에 있는 주택들
(Gutachterverfahren Wittenberge -
Jahnschulviertel(2013))

□ 기반시설 강화

Jahn학교의 정비와 현대화 작업은 중요한 가치증진의 촉매제가 되었다. 도시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유겐트스틸 형식의 학교와 체육관 그리고 운동장은 전체적으로 개보수되었다. 이를 위해 ‘Stadtumbau Ost 프로그램’과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 프로그램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밖에 대표적인 복합건물인 주민센터와 가족센터의 개보수를 위해 Stadtumbau 예산이 투입되었다. 동시에 개인적인 투자자에 의해 건강센터와 요양원, 독일 철도 회사 교육기관이 들어서며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 공공공간의 가치증진

Jahnschulviertel은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용이한 기차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주자 수를 고려했을 때 기차역과 Jahnschulviertel을 연결하는 접근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정비는 공공공간의 가치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사용하지 않는 선로는 독일 철도 회사를 통해 철거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지는 도시로 환원되어 녹지공간으로써 주변 주거단지를 위한 접근로로 사용되었다. 또한 Jahnschulviertel 내부에 있는 도시광장들은, 예를 들어 Goetheplatz, Schillerplatz 그리고 새로 개장되는 주민센터 앞의 광장은 매력적으로 조성되어 전체적으로 머물며 쉴 수 있는 장소로써의 질을 높였다.



[그림 4-22] Jahn학교와 주민센터 앞

<https://www.wittenberge.de/texte/seite.php?id=124099%20>

④ 시사점

Jahnschulviertel의 지속적인 Stadtumbau를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여전히 Jahnschulviertel에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높은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Wittenberg 도시의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점진적으로 이 지역을 현대화시키고 가치를 지니는 건물들의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 비텐베르크 주택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도시적 용도 또는 임시사용용도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또한 필요하다.

Jahnschulviertel의 Stadtumbau 과정을 통한 경험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놓인 도시들이 그들의 오래된 도시구조의 가치 향상을 위해 얼마나 오랜 인내심이 필요한가를 보여준다. 보유하고 있는 공가상황과 개보수 요구상황은 Stadtumbau와 주택시장 관계자들의 모든 자원들을 집중시켜야 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지난 세월 Jahnviertel의 쇠퇴와 방치에 대한 흔적들은 Stadtumbau Ost 및 사회복지도시 정책 등을 통해 극복되었고 현재는 다시 다채롭게 장식된 건물입면을 가진 블록구조와 잘 가꾸진 소규모 광장들로 도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개보수가 필요한 건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림 4-23] 기차역 앞 광장

http://www.staedtebauforderung.info/StBauF/DE/Programm/StadtumbauOst/Praxis/Massnahmen/Wittenberge/Wittenberge_node.htm

4) 사회적 융합, Leipziger Osten⁴¹⁾



주정부 : 작센

지자체 : 라이프치히

프로그램 : Soziale Stadt

진행기간 : 1999-2015

지역규모 : 340ha

지원규모 :

지역유형 : 독일제국시기 형성단지

[그림 4-24] 라이프치거 오스텐의 독일제국시기 형성 도시구조

<http://www.leipzig.de/typo3temp/GB/c85088940e.jpg>

① 개요

Neustadt, Neuschönefeld, Volkmarisdorf 그리고 Reudnitz로 이루어진 라이프치거 오스텐 지역은 1870년에서 1910년 사이 독일제국시기의 건물양식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현재 저렴한 주택가격과 도심지에 가까운 위치의 주거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곳이다. 라이프치거 오스텐에는 젊은 가족들의 진출로 인한 평균이상의 높은 인구감소율과 높은 실업률, 소득이 적은 가게의 비율, 적은 녹지 공간 비율, 높은 자동차 소음 그리고 높은 공가율 등의 사회적, 경제적, 도시건축적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확연히 드러나 있었다. 동시에 이 지역은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본질적인 사회적, 공간적, 조직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뛰어난 대중교통망, 도심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 유희지, 공공기능으로 사용되던 장소, 다양한 책임자들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기반시설, 적극적인 상가들과 사적, 공적 건축투자자들이 이 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라이프치히 도시는 라이프치거 오스텐 지역에서 도시개발을 위해 7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본질적인 도시의 결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이행 가능한 사안들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Eisenbahn도로 중심지 개발/ 공공단체를 겨냥한 프로젝트
- 오픈 스페이스 Rabet 가치증진/ 단지조합/ 지역 일자리 창출

41) 라이프치거 지자체 홈페이지 및 독일 도시개발지원정책 홈페이지 내 자료 요약 <http://www.leipzig.de/>, <http://www.staedtebauforderung.info/>

- 예방차원의 사회복지 상담의 새로운 방법/ Vollmarsdorf 단지관리(QM)

이 프로젝트들 중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았던 프로젝트들은 포럼 ‘라이프치거 오스텐’에서 그 결과를 놓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포럼에서는 지속적인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졌고 개발 목표가 논의되었다. 이 공공포럼에는 다양한 관계자그룹이 참여했는데 그 그룹들에는 임대인, 건물소유주, 공업시설운영자, 사회복지 대표자, 종교단체와 교육단체, 시민연합, 어린이와 청소년, 행정관계자와 정치인들이 포함 되어 있다. 이 포럼은 라이프치거 오스텐에 있는 청소년클럽에서 연말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② 투입된 지원 프로그램

- 도시정비 프로그램(Städtebauliche Sanierungsmaßnahme_SEP)
- 주정부 정비 프로그램(Landessanierungsprogramm (LSP))
- 통합된 프로그램 사회복지도시(Integriertes Programm Soziale Stadt _SSP)
- 단지 내 교육, 경제, 고용(Bildung, Wirtschaft, Arbeit im Quartier_BIWAQ)
- 프로그램 제노스, 다양성 속의 삶과 일(Programm XENOS – Leben und Arbeiten in Vielfalt)
- 지역발전을 위한 유럽기금, 도시개발 2000, 라이프치거 오스텐 2006 (EFRE – Stadtentwicklung 2000 – 2006 Der Leipziger Osten)
- 지역발전을 위한 유럽기금, 지속적인 도시개발 2007–2013 (EFRE – Nachhaltige Stadtentwicklung 2007 – 2013)
- Stadtumbau Ost (SUO), 프로그램 부분 중 가치증진과 철거

③ 개별조치사항

□ ‘네 이름을 말해줘’ : Eisenbahn도로 변 국제상가들의 표지판 정비사업

라이프치히 Volkmarsdorf는 전통적인 업무지구로 독일제국시기의 건축양식과 80년대 신축 건물로 구성되었다. 사회정책의 변화에 따라 90년대 후반까지 고소득층의 전출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공가가 증가하게 되었다. 독일인들의 전출과 함께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해외이민자수가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라이프치거 오스텐의 외국인 거주자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런 변화는 중심 상가 도로인 Eisenbahn도로에 특히 터키, 쿠르드, 아랍 쪽 상가들의 밀집도를 높였다. 정기적인 가게 설문조사와 거주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상황이 이 곳에 정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게 불신과 불쾌감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상가들의 표지판에 적혀 있는 외국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낯설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독일인 거주자들을 위해 상가 표지판의 이름과 표식들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21x21cm 크기의 판 위에 통일적인 디자인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4-25] 표지판 정비사업 표지판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

□ ‘SOS - 안전, 규칙, 청결’ (Sicherheit, Ordnung und Sauberkeit im Leipziger Osten)

도시이미지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일들이 진행되며 동시에 라이프치히 오스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적인 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남녀노소 모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공간을 매력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연간 축제(부활절행사, 여름축제 등)의 사전준비와 사후처리 등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런 구체적이며 평가 가능한 작업결과에 대한 공동작업의 긍정적인 경험은 SOS 프로젝트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실업상태에 대한 좌절감이 더 깊어지는 것과 현실에 지쳐 포기하게 되는 상황들을 막아주었다.

이렇게 지역과 관련된 고용창출 프로젝트는 라이프치히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프로젝트 지역의 일자리는 찾고 있는 거주자들은 지역에 맞추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의미 있는 일자리들을 찾을 수 있었다.

5) 군부대 반환으로 인한 도시재개발, Osnabrück⁴²⁾



주정부 : 니더작센
 지자체 : 오스나브뤼크
 프로그램 : Stadtumbau West
 진행기간 : 2008
 지역규모 : Hafen 61.59ha
 westerberg 36.72ha
 지원규모 : 2012년까지
 1.6백만 유로(hafen)
 1.3백만 유로(westerberg)
 지역유형 : 군부대 이전 부지

[그림 4-26] 오스나브뤼크의 군부대 이전 부지 위치
 (<http://www.osnabrueck.de/konversion/standorte.html>)

① 개요

2차 세계대전이 이후, 오스나브뤼크에는 영국 군대가 주둔하고 영국 군대시설과 군인 가족들을 위한 주거단지가 자리잡기 시작한다. 2006년 영국군은 2009년까지 부지를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3월 독일연방 부동산연구소(BImA : Bundesanstalt für Immobilienaufgaben)는 전체면적 160ha에 달하는 총 6개의 군사부지에 대한 개발에 착수한다. 그 이후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군사부지에 시민들의 사용을 위한 공공성을 마련하고 기존 도시조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도시전체적인 과제가 되었다. 지자체 측면에서 중요한 도전과제는 침체되어 있는 인구발전상황에서 ‘한 번에 발생하는 대규모 부지의 토지잠재력을 단기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였다.

Belfast, Prestatyn and Woolwich Barracks은 도심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 군사부지들 주변으로 자리잡고 있는 주거단지에는 약 1,350세대의 주택건물이 있고 3개의 지역구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영국군의 철수와 함께 2개의 학교부지와 운동장 부지도 역시 개발을 위해 사용되게 되었다.

군사부지 전환과정의 전체적인 조율은 기본적인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시장의 업

42) 독일환경부 홈페이지 내 오스나브뤼크 사업 소개 및 오스나브뤼크 지역 홈페이지 내 자료 요약
http://www.staedtebauforderung.info/StBauF/DE/Programm/StadtumbauWest/Praxis/Kommunale_Praxisbeispiele/Massnahmen/osnabrueck/osnabrueck_node.html
<http://www.osnabrueck.de/konversion/standorte.html>

무에 직속으로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실행조직으로써 Konversion(변환) 프로젝트 그룹이 도시개발영역 아래 4명의 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한 명은 영국 군대의 건축부서 소속으로 부대시설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007년 말부터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와 함께 대규모의 계획이 진행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도입되었다. 도시전체적인 관점에서 ‘Konversion(변환) 전망계획’이 공공성을 가지고 집중적인 참여와 함께 수립되었다. 이런 참여는 모든 부분 공간들의 계획의 구체화 과정(개별 반환부지의 계획, 도시계획 공모전)에서도 추진되었다. 2007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계획안들을 소개하고 온라인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계속해서 이전에는 진입이 불가능했던 부지와 건물들에 대해 누구나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반환건물과 부지는 이벤트와 문화, 체육시설로써의 임시사용을 유도했고 이로 인해 관심을 끌어올렸다. 반환된 지 2년 후 ‘KonVisionen(함께 가는 비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영국군의 철수가 후퇴가 아니라 도시개발에 있어 기회라는 변화를 인식하게 하였다.

첫 번째 진행단계의 계획적인 결과물으로써 ‘Konverion 전망계획’에는 존재하고 있는 건물의 위치와 유형,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따른 모든 반환부지의 각각의 용도에 대해 설정하였다. 도시계획 공모전이나 라멘플란에는 이 계획안의 전망이 구체적인 설계로 심화되었다.

정체되어 있는 발전추세를 배경으로 많은 수의 반환부지가 단기간 안에 부동산 시장으로 나올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Konversion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나브뤽 지자체는 독일연방 부동산연구소와 함께 반환부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임시용도로 사용하였고 몇몇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던 임시용도가 미래전망과 함께 장기간으로 연결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반환부지의 많은 부분의 매입에 있어 오스나브뤽시의 100% 자회사인 ESOS(에너지 서비스 회사)가 중간취득자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오스나브뤽시는 100% 지분소유자로 어떤 금전적인 부담도 발생하지 않았다. ESOS는 반환부지의 철거, 오염물제거와 진입로 구축에 대한 업무도 맡아 처리하였다. 토지를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것은 오스나브뤽 경제 지원 회사⁴³⁾가 맡았다.

43) WFO Wirtschaftsförderung Osnabrück GmbH

② 실행영역과 재정투입

□ 핵심실행영역

- 기반시설 조정/ 주거단지 조성/ 기존 상태를 고려한 건물과 부지 관리

□ 재정투입 : 연방정부-주정부-프로그램 Stadtumbau West

③ 개별조치사항

□ Konversion Westerberg

Westerberg 지역구는 3개의 영국군 군사부지에 맞닿아 있다 2008년 Schamhorst 군사부지와 Metzger 군사부지가 반환되었고 1년 후 Von-Stein 군사부지가 반환되었다.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와 주거지로 인해 이 3개의 군사부지는 학문과 주거공원으로 제안되었고 중장기적으로 Westerberg지역을 위해 반환부지 주변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진입도로가 계획 중이다.

□ Scharnhorst군사부지



[그림 4-27] Scharnhorst 마스터플랜

<http://www.saltzmann-architekten.de/images/projekte/wbw/Masterplan.jpg>



[그림 4-28] Scharnhorst 내 이노베이션 센터

http://www.osnabrueck.de/fileadmin/_processed_/csm_DSC_0452_03a133391e.jpg

2008년 말 섬유기술과 경량건축에 대한 회사가 과거 탱크홀로 사용되던 건물에 입주했다. 임시용도라는 명목으로 입주하게 된 이 회사는 당초 오스나브뤽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이상적인 용도로 적합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입주 후 시의 도시계획에 통합되게 된다. 총 16개의 임시 사무공간이 임차되었다. 2011년 ‘학문과 주거공원 Scharnhorst’라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기술센터(이노베이션센터 오스나브뤽, ICO)의 건립이 계획된다. 이를 위해 군부대 건물의 많은 부분이 철거되었다. 2012년 ICO 시공을 위한 초석이 놓이

고 2013년 골조가 완공되었다. 5.4ha에 해당하는 부지는 주거공원으로 계획되며 Wohnpark Scharnhorst GmbH에 팔렸다. 목적은 젊은 기업인과 연구원들을 위한 실험적이며 현대적인 주거개발이었다. 이를 위해 약 600~700명을 겨냥한 혁신적인 연립주택과 자가 단독주택 및 임대주택, 학생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 Von-Stein 군사부지

Von-Stein 군사부지에는 대학캠퍼스가 조성되며 오스나브뤽 대학이 확장, 사용하게 된다. 2012년 대학식당이 완공하였고 다목적강의실과 도서관이 2015년 개장한다. 니더작센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약 70백만 유로를 투자했다.



[그림 4-29] Von-Stein 내 대학캠퍼스
http://www.osnabrueck.de/fileadmin/_processed_/c/sm_Von-Stein_05_5160b49829.jpg



[그림 4-30] Von-Stein 내 커피자판기 회사 본사 건물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StBauF/DE/Programm/StadtumbauWest/Praxis/Kommunale_Praxisbeispiele/Massnahmen/osnabrueck/osnabrueck_node.html

□ Konversion Hafen

오스나브뤽 항구 인근에 위치한 31ha의 Winkelhausen병영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선로와 함께 공업과 서비스지역으로 개발되었다. 영국군의 철수 후 2009년 물류회사가 초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그 동안 첫 번째 임시용도로 영국군이 체육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놀이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이 두 가지 임시용도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그로 인해 이 임시용도를 유지하는 동안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장기간에 걸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이 부지에는 계속해서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피자판기 회사가 Winkelhausen병영에 입주하기를 결정했고 건축적으로 현란한 디자인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이를 위해 몇 개의 군인숙소건물이

철거된다. 반면에 부지 가장자리를 따라 들어서 있던 또 다른 군인숙소건물은 보존되어 2013년 중순부터 새로운 용도에 따라 정비되었고 오스나브뤽 세무서와 경찰국, 니더작센 주정부의 직원양성소로 사용된다. 부지 서쪽으로는 기념물로써 보존되어야 하는 예전 창고건물과 오래된 카지노 건물이 있는데 후 용도로써 문화, 창의적인 작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의한 사용이 계획되어 있다. 전체 부지에는 2012년 말 녹지가 들어서며 주변 환경의 퀄리티를 높여주고 있다.

④ 시사점

오스나브뤽 시에서 160ha에 달하는 ‘Konversion’의 과정을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공공적인 참여를 연계시킨 방법은 모범이 될 만하다. 철수 공고 1년 후 그리고 첫 번째 병영기지 반환 1년 반 전인 시점에 오스나브뤽시는 일명 ‘변환 전망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반환지역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갔다. 각 장소의 계획에 대한 구체화는 도시 계획 공모전이나 기본구조계획을 통해 이루어졌다. ‘변환 전망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이런 시민들의 참여는 인터넷, 언론, 시민포럼, 전시와 공모전 협동작업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건물과 부지들의 임시사용을 통해 병영기지의 변환 과정과 함께 인근 시민들의 정체성을 강화시켰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오스나브뤽의 ‘KonVisionen’과정은 적당한 기본 틀 아래 다양한 유희지와 공가 건물을 재 활성화 시키는 것, 기존 도시 기능과 구조에 통합시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도시발전에 있어 자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도시전체적인 도전과제가 도시의 쇠퇴가 아닌 잠재적인 기회라는 것을 공공성 안에서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독일 부동산연구소와의 협력작업을 통해 반환부지내 주택들을 젊은 가족에게 성공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다. 주거단지의 어느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상품으로 팔렸고 다른 부분들은 사회복지기준을 고려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판매되었다. 이런 다양한 매각방식은 이 지역의 도시적 기능을 적절히 혼합시키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제5장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건축분야 과제

1. 개요
2.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3.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4.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5. 통일대비 건축분야 단계별 추진방향

1. 개요

본 장에서 제시되는 건축분야 과제는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과제를 기존연구 및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었던 과제들을 정리하고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제시되었던 과제들을 제시한다. 제시된 과제들은 1차적으로 주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건축의 3개 영역-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으로 구분하였다. 2차로는 유사한 성격의 과제들로 그룹핑화하고 전략차원의 과제와 세부단위 차원의 과제들로 구분하였다. 각 과제별로 가능성, 시급성, 추진여건, 기대효과 등을 통하여 종합평가하여 정리하였다.

건축분야 수요조사에서는 건축분야에 대한 부문을 한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통일대비 건축분야 과제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되는 과제들은 모두 포함하였다. 제시된 과제들 중에는 건축이 국토, 도시분야의 인프라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건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프라와 관련한 과제도 다수 제안되었다.

국토인프라 구축을 제외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과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기 추진되는 사업의 현황,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단계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국토 및 도시분야와 연계한 건축’은 국토계획과 연계한 지역별 발전전략 등과 연계된 건축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토목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택지개발이후에 들어서게 되는 건축물 등이 이에 속한다. ‘건축생산능력과 관련한 건축’이란 건축자재, 건축생산의 주체로서의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이다.

[표 5-1]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과제명	검토항목				종합평가
		필요성	시급성	추진여건	기대효과	
국토 및 도시분야와 연계한 건축 #1.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						
1	도시 주거관련 합작 프로젝트	O	O	O	O	O
2	기초생활권 정주환경 개선 정비사업	O	O	△	△	△
3	북중러 두만강 도시개발 프로젝트	△	X	X	O	X
4	남북한 국제통일관광특구 개발 프로젝트	△	△	X	△	X
5	경제개발구 사업과 연계한 건축사업	O	△	X	O	O
건축생산능력과 관련한 건축 #2. 건축자재, 인력, 기술 향상						
5	건축자재 생산능력 진단 및 향상방안	△	O	△	O	O
6	전문기술인력 공급방안 마련	X	△	△	△	△
7	남북한간 기술격차를 고려한 적정기술 개발 방안 마련	X	X	△	X	△
8	주요 도시별 산업훈련센터 운영	O	△	O	O	O

1)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

□ 도시 주거관련 합작 프로젝트

- 2011년 나선경제무역단지 공동개발 공동관리 연합위원회를 설립, 북 중 합작개발을 추진하여 나선시의 남산 18호동 살림집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였음.⁴⁴⁾
 - 나선시 대부분의 민간 합작 프로젝트는 북한측에서 중국에 먼저 제안하여 시행되고 있음
- 북한이 가진 기술력의 한계나 경제적 지원 부담 등은 다양한 합작개발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로 연결. 도시개발의 대규모 계획보다는 소규모 건물단위의 프로젝트 등 범위를 넓히지 않는 것이 중요.

□ 기초생활권 정주환경 개선 사업

- 북한의 주거시스템인 주택소구역계획⁴⁵⁾에서는 주거 시설 내에 교육시설, 봉사시설,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작업장 등의 생산시설을 함께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주택공급은 주거와 이러한 지원시설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단지 필요한 양의 필요한 수준의 주택만 공급되고 있음.
- 북한 주민의 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및 공공시설 공급 기술 개발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거단위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건축에 관한 기초자료 구축 필요하며 북한에 적합한 주거시스템 개발로 난방시스템이나 신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연계한 건축사업

- 북한은 자체적인 경제성장 동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구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개발사업 추진 시 공장건축, 기숙사 등 다양한 건축물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건축분야 협력사업이 추진가능
 - 개성공단의 경우, 토지만 북한에서 제공하고 남한의 기술, 자재 등이 공급되고 법령도 남한의 건축법이 준용되는 특수한 사례임

44) 문지훈, 김세훈(2015), 북한 나선시 도시개발과 남산 18호동 살림집을 통해 본 북 중 합작 개발의 특성, 국토계획 제 50권 제1호

45) 북한의 현재 주택소구역계획이라고 하는 주거시스템으로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micro-district 개념을 차용한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

2) 건축생산능력 제고, 효율적 공급방안

□ 건축자재 생산능력 진단 및 향상방안

- 시멘트, 철강 등 건설관련 자재 생산능력 진단 및 향후 건축수요 등을 고려한 공급방안 마련 필요
- 자체적인 생산능력 제고방안과 더불어 남한, 중국 등에서의 공급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검토를 통한 단계별 전략 마련

□ 전문기술인력 공급방안 마련

- 향후 건축수요 등에 대해 예측을 바탕으로 건축사, 시공자 등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필요

□ 남북한간 기술격차를 고려한 적정기술 개발방안 마련

- 남북한의 기술격차에 따라 남한의 기술수준을 북한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기존 기술수준을 고려한 적정기술 개발 필요

□ 건축도시분야 전문인력 교류 및 양성프로그램

- 남북간 건축도시분야 기술과 용어에 큰 차이가 있어서 남북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적교류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
- 교육의 범위와 수준, 비용과 사후평가 등에 대해서는 남북간 협의를 통해 마련, 교육대상자의 범위와 선발기준을 포함한 프로그램 수립

3.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법제도적 관점에서 건축’이란, 사회체제의 산물인 법, 제도 등을 통하여 규정되고 있는 건축이다.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이란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인프라기반의 건축으로 공공 건축물 및 주택 등을 의미한다.

[표 5-2]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과제명	검토항목				종합평가
		필요성	시급성	추진여건	기대효과	
법제도적 관점에서 건축 #1. 기존건축물, 낙후지역 개선						
1	노후건축물 감축 및 성능 개선사업	○	○	△	△	○
2	농촌 및 산간지역 건축물 지원사업	△	○	△	△	△
3	농촌지역 축사지원 사업	○	×	×	×	×
4	시범영농단지 조성계획 공동수립	△	△	○	△	△
5	기존 공동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방안	○	○	○	○	○
주민생활과 관련한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건축 #2. 신규건축물 유형별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6	의료시설 확충사업	×	×	×	○	○
7	친환경 결핵요양시설 기술지원 사업	○	△	○	○	○
8	북한 청소년 체육센터건립	△	△	○	○	○
9	학교, 유치원, 보육원 확충사업	○	×	×	△	○
10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적정주거기준 설정	○	○	○	○	○

1) 기존건축물 및 낙후지역 개선

□ 노후건축물 감축 및 성능 개선 사업

-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아파트 단지 현대화과정 참조하여 북한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감축 및 에너지성능개선 사업을 추진
- 기존 노후건축물의 실태조사 : 건축물 노후도 조사, 개보수 가능 건축물의 선별
- 아파트 현대화 계획의 수립 : 단계적으로 시설개보수 계획 수립하고 현대화를 위한 자원 조달계획 및 그린 리모델링방식 수립

□ 기존의 협동농장의 현대화사업 추진

- 협동농장으로 운영되던 기존시설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

□ 기존 공동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방안

- 1960-70년대 대규모로 공급되었던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방안 마련

2) 신규건축물 유형별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 의료시설 확충사업(결핵요양시설 기술지원 사업)

-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민간기관에서 북한지역 결핵환자 지원을 위한 병동시설 공급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의료지원과 동시에 필요한 건축을 공급하여 주는 상황으로 단시간 내 효율적인 건축작업을 위하여 남한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제작하여 북한에서 조립하여 활용될 수 있는 모듈화되고 시스템화된 공급방식이 이루어짐

□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적정주거기준 설정

- 남북간의 주거수준은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통일 이후에 기본적인 주거부문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주거공급을 위한 기준이 사전에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학교, 유치원, 보육원 확충을 위한 공급기준 설정

- 사회안정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역단위의 공급수준이 고려되어야 함

이들 과제는 개별적인 과제라기 보다는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시설들에 대한 공급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별시설 단위의 공급계획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 전문가 참여방식이나, 마을만들기,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 방식의 접목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도 초기에는 각 지역별로 동서독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도시 조성사업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현재는 더 작은 주거단지 차원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QM)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요를 파악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한 용도전환, 도시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좀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패러다임이 진행되고 있다.

4.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과제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재, 건축자산으로서의 건축이란, 남북간의 물리적인 분단이전에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였던 시기의 자산으로서의 상호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이다. 미래 공동의 문화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건축은 남북한 분단 이후 문화적 차이를 발생한 건축에 대한 것으로 향후 회복하여야 할 방향과 가치에 대하여 필요한 건축이다.

[표 5-3]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과제명	검토항목				종합평가
		필요성	시급성	추진여건	기대효과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재, 건축자산으로서의 건축 #1.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 활용 과제						
1	남북 건축문화 유네스코 등재사업	O	O	O	O	O
2	건축문화재 유지보수 기술자 교류사업	O	O	△	△	△
3	비무장지대 건축자산 공동조사	X	X	△	X	X
4	남북 대목수 기술교류	O	X	X	X	X
5	일제강점기 건축자산 활용방안	X	X	X	△	X
6	한국건축사에 대한 공동편찬 작업	O	△	△	O	O
7	남북 유적관광지 개발사업	O	△	△	O	O
8	남북한 건축자산 지도 발간	△	△	O	△	△
미래 공동의 문화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건축 #2.근현대 및 미래 구상을 위한 과제						
8	남북한 건축분야 용어사전 발간	△	O	△	O	O
9	북한건축 실태파악을 위한 북한건축동향 발간	O	O	O	O	O
10	남북한 건축 디자인 박람회	X	X	△	X	X
11	남북한 해비타트 건축봉사 교류활동	X	X	X	△	X
12	인터넷 기반의 남북 건축 작품 교류활동	X	X	X	O	X
13	통일시대 북한지역 건축공모전 개최	O	△	O	O	O
14	남북한 한옥공모전 개최	△	△	O	O	통합
15	남북 주요도시 여행 가이드북 제작	O	X	X	△	X
16	남북 건축문화 유튜브 및 인포그래픽 작업	X	X	X	O	X
17	통일한국 건축문화 전시관 운영	O	△	O	O	O
18	북한도시건축 이해를 위한 사이버강좌 개설	O	△	O	O	O

* 검토항목 ; 양호 O, 보통 △ 미흡 X

1)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 활용 과제

□ 남북 주요건축유산 유네스코 등재 사업

- 개성역사보존지구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사업이 추진되는 등 북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
- 남북한간에 공동으로 등재가능한 자산을 발굴하여 추진 필요

□ 건축문화재 유지보수 기술자 교류사업

-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등에서는 남한의 자재 및 기술자가 북한지역에 사찰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바 있음
- 북한지역에 전통건축기술과 관련한 목수, 기술자가 없는 상황으로 추정되고 문화재 현황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나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련 기술자들간의 교류사업 필요

□ 한국건축사에 대한 공동편찬 작업

- 남북역사학자간의 다양한 교류는 기존에도 추진된바 있으며, 일부 고건축관련 학자들이 복원작업에 참여한바 있음
- 한국건축사에 대한 공동편찬 작업 등을 통하여 건축학자들간의 건축교류는 상호간의 건축문화 이해를 위한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음

□ 남북 유적관광지 개발사업

- 금강산관광사업은 자연유산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 남북한간의 문화관광교류의 상징이었음. 또한, 개성지역 역시 다양한 역사자산이 보존되고 있어서 관광교류가 진행되었던 곳으로 일반주민들의 관광차원에서 중요한 교류창구였음
- 현재에도 북한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북중접경 지역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관광교류사업과 동시에 새로운 유적관광지에 대한 개발이 필요

□ 남북한 건축자산 지도 발간

- 북한소재 건축문화재 중 사찰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4년부터 실측, 사진촬영 등의 조사를 진행하바 있으나, 일부사업에 한정되고 있어서 확대 필요
- 독일 DOM 출판사에서는 현대 평양의 주요건축물에 대한 책자를 발간한바도 있음

2) 근현대 및 미래 구상을 위한 과제

□ 남북한 건축도시분야 용어사전 발간

- 남북간 국토분야의 계획과 기술 등의 용어차이가 있어서 향후,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통일된 용어작업이 필요함
- 최근, 국토부 정책연구를 통하여 북한건설용어집이 1차적으로 발간되나 있으나, 북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것으로 이를 확대하여 남북한의 건축용어집을 발간
 - 건축분야와 관련하여서도 1,421개의 용어가 정리된바 있음

□ 북한건축 실태파악을 위한 북한건축동향 발간

-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한 1차적인 자료로서 북한매체, 언론동향을 기초로 건축분야의 주요이슈들을 정리하여 제공
- 기존에도 유사한 사업들은 추진되고 있으나, 건축분야의 시사점 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건축공모전 : 남북한 전통건축공모전, 북한주요 건축물

- 한옥은 남북한간의 주요한 건축자산 중 하나로 기존 한옥밀집지구, 한옥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및 학생참여 공모를 진행
- 남북간 여건개선 시 주요건축물을 한옥으로 계획하고 실제 공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남북한 건축문화 비교전시관 운영

-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시 남북한간의 건축도시공간의 차이를 소개하고 향후 통일준비과정에서 제시되는 성과들을 전시하고 교육하기 위한 기관 운영

□ 북한도시건축 이해를 위한 출판, 교육

- 최근 통일관련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시와 건축에 관한 사이버 강의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로 통일관련 이슈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분야 관련하여서도 ‘건축으로 북한 사회 이해하기’ 콘텐츠 제작되었음

5. 통일대비 건축분야 단계별 추진방향

한국의 통일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통일부에서 발간된 ‘2015 통일백서’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하에 ‘화해 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되 1994년 한차례 보완된 이래, 역대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계승되어 왔다.”

- 출처 : 통일부(2015), 2015 통일백서, 통일부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관련 연구는 단계에 따라 통일이전의 ‘남북교류기’,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준비시기’, 통일의 완성단계인 ‘통일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구분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건축분야의 실천목표 역시 단계별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1단계로 건축분야의 남북분야 협력을 위한 기초원칙을 마련하는 것이고, 2단계로는 남북한간 통일준비 법제도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 3단계는 통합적인 법제도 마련의 단계이다.

통일방안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오는 통일의 원칙이며 각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적 단계에서의 대북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우위한 전략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3대 목표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호혜적 교류·협력과 남북간 공동이익의 확대를 통한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추구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통하여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문화공동체를 건설해 ‘작은 통일’을 통하여 제도적·정치적 통합을 통한 ‘큰 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기반 구축은 통일에 대비한 사회역량을 확충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통일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축분야의 추진과제 준비와 관련하여서 통일 시나리오 대응한 과제에 대한 검토도 중요할 수 있다. 통일방안과 무관하게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변수 등에 대해서는 통일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건축분야 역시 급변사태 발생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이동 등 단계별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대응도 넓은 범위에서는 준비되어야 할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서 공식적인 통일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관점’에서 단계별 통일에 대응한 필요 과제를 검토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통일의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이며, 아직 건축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응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남북간의 교류가 우선되어야 하며, 추진 가능성에서는 문화 교류 차원이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건축분야 협력사업, 국제협력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표 5-4] 대북정책 방향과 건축분야 단계별 추진방향

		1단계	2단계	3단계
통일정책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단계별 구상)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발전 한반도평화정착 통일기반구축		
건축	단계	남북교류 시기	통일준비 시기	통일단계
	정책 목표와 방향	건축분야의 남북분야 협력을 위한 기초원칙 마련 - 호혜적 교류협력 - 경제문화공동체 - 국제사회와의 협력	남북한간 통일준비 법제도 통합을 위한 준비	통합적인 법제도 마련 실행
	분야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	

1) 1단계 남북교류시기 : 건축분야 남북한간 협력을 위한 기초마련

① 문화적관점에서의 건축과 관련한 남북한 건축동질성 회복 과제 추진

□ 건축문화 교류전 진행

- 통일 전의 독일이 주변의 국가와 문화적으로 교류했던 것은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정체성 회복이라는 국가차원의 논의와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기본 조건
- 남북한에서 매년 개최하는 주요건축 행사 개최시 남북한 건축섹션을 마련하여서 정기적인 교류행사를 추진
 - 남한은 매년 10월에 건축의 날 행사, 건축문화제, 지역건축행사, 건축영화제 등 건축관련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북한은 매년 5월에 건축미학토론회, 주요건축물에 대한 설계안, 논문, 패널, 건재품 등이 전시되는 건축축전 행사가 개최
 - 기존의 행사와 연계하여 상하반기 남북건축 교류전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건축분야의 정기적인 교류 진행

□ 2017 세계건축사대회 서울대회 전시 및 컨퍼런스 콘텐츠로 남북한 건축 주제 제안

- 2017년 개최되는 세계건축사대회 UIA참여 요청과 공동전시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남북공동으로 참여, 교류기회를 마련하여서 ‘남북건축의 주제’를 지속적인 이슈로 진행

□ 해외기관과 연계한 교류사업 추진

- 북한관련 관광 업체인 “KORYO TOUR” 및 인력양성 교류기관인 “Choson Exchange”와 연계한 사업 추진
 - KORYO TOUR는 중국 베이징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전문여행사로 매년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약 20년간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베이징에 북한전시관을 별도로 운영 중
 - Choson Exchange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싱가포르에 근거를 두고 중국, 미국 등에도 운영 중. 설립 이후 다양한 통로로 교류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영국의 AA(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의 학술교류작업으로 Visiting School 2014-2015 Global Workshops⁴⁶⁾의 일환으로 평양을 대상지로 직접 방문 및 프로그램 진행

□ 베니스비엔날레 기존 성과 정리 및 후속사업 발굴

- 남북한간 건축을 비교한 전시로 많은 관심과 평가를 받은 바 있는 ‘2014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Crow’ s Eye View’ 관련 자료 수집과 네트워크의 지속사업 모색
 - 비엔날레 전시 준비 과정에서는 전 세계에 남북한의 건축을 소재로 한 대다수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바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지속함으로서 남북한간의 콘텐츠를 중요한 테마로 활용하고자 한다.

* 베니스비엔날레 북한건축 참여 협조 과정

2012년 6월 오스트리아 건축박물관 관장인 Peter Noever관장을 통하여 북한 백두산건축연구소의 참여의사 타진

- 2010.5.19.-9.5 오스트리아 빈의 MAK미술건축센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미술과 건축〉 전시회가 평양조선미술박물관과 백두산건축연구소의 협조로 북한 미술과 건축이 외부 세계에 처음 공개되었음

2013년 8월 백두산건축연구소에서 베이징, 선양 등에서 미팅 제안하였으나 북한 측 승인받지 못함

2013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1회 독일영화제에서 소속원이 조민석의 메시지를 조선건축가동맹에 전달

2013년 10월 임동우를 통해 북한측 의원을 접촉하였으나 설득하지 못함

2013년 12월 연변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를 통해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학장을 소개받았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출처 : 배형민, 안창모, 조민석, Crow’ s Eye View : The korean Peninsula, ‘Open letters to Architects of North Korea’ , p224-226재구성)

- 베니스비엔날레 추진과정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1차적으로 발간하고 참여작가들을 북한 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네트워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2014년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서는 ‘북한의 도시사와 도시적 삶’에 임동우가 참여한바 있으며, ‘북한의 건축과 미술’에서는 Jelena Prokopljevic(역사학자), Alessandro Belgiojoso(사진작가)가 발제자로 초청되고 토론자로 큐레이터였던 안창모 교수가 참여한바 있는데 이러한 후속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남북한 건축미래상에 대한 공모전 개최

- 현실적인 건축적인 주제들과 더불어서 다양한 미래를 상상하여 볼 수 있는 건축적인 제안들을 통하여 교류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하게 제시되는 아이디어 들은 향후 건축도시 교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협력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남북한간의 실제 대지를 대상으로 자료제공 등을 통하여 다양한 미래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
- 국토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전통건축의 현대화와 관련한 남북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 검토
 - 전통건축 등과 관련하여서 남북한이 전통건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
- 통일 건축도시분야와 관련한 지속적인 공모전 시행방안 마련 필요
 - 정림문화재단 ‘정림건축학생상’에서는 북한의 개성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진행. 북한지역에 대한 현장답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글지도, 스케치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모참여자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상호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새로운 시도가 진행,
 - 공간사 ‘공간국제학생건축상’에서 DMZ 를 대상으로 한 ‘공간 정치학의 신기원: DMZ 평화의 플랫폼’이 진행되었음
 - 이러한 공모전은 매년 바뀌는 주제로 통일관련 이슈들로 1회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으므로 통일관련 주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별도의 공모전이 필요함

□ 도시건축박물관 내 통일한국관 등 마련

- 세종시에 건립이 추진 중인 ‘도시건축박물관’이 향후 건축문화교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간건축관련 주요 콘텐츠의 지속적인 수집 및 교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통일 이전에는 남북간의 건축문화의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통일과정에서 생산되는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및 교육진행

□ 남북한 건축문화유산 분야 교류 활성화

- 기 추진되었던 개성지역 세계유산등재, 금강산 사찰복원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건축문화유산 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협력
- UNESCO, UIA 등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교류 및 협력방안을 검토하여 남북한간의 건축에서 동아시아관점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모색
 - 2007년부터 '개성 만월대 및 평양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공동 진행
 -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서울 한양도성과 평양역사지구 도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북한과 학술교류 방안을 모색

□ 북한 건축분야 주요정보 구축

- 인구 및 주택관련 기본조사 자료 등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한 사항임
- 주요건축물 현황 파악을 위하여 북한지역 건축물 현황파악을 위한 주요 조사항목, 연구방법을 마련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건축물 정보를 지리기반으로 마련하기 위한 국토부-통일부간 협력사업으로 발굴
- 수집된 자료는 기존의 북한관련 홍보 매체인 북한정보포털, 북한연감, 북한통계 등에도 건축분야의 콘텐츠로 활용이 기대됨

□ 북한 건축동향 제작 배포

-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북한건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건축에 대한 동향을 정리함으로서 북한건축의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국내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점차 북한 내부보도 :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신보, 북한의 건축관련 분기별 정기간행물인 '조선건축' 내용 소개
- 건축분야의 북한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배포,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분석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임
- 기재부 북한경제리뷰(KDI), 통일부 월간북한동향(통일연구원) 등이 부처와 협력하여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와 협력하여 북한건축동향 발간을 추진

[표 5-5] 월간북한동향 및 북한경제리뷰 개요

	월간북한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목적	북한관련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	월간단위 북한관련 경제동향 및 이슈를 정리하여 제공
출처	북한매체 중앙통신, 노동신문, 중앙방송, 평양방송, 민주조선 등	월별 주요기획기사 수록과 주요기사의 경우, 국내외 주요언론매체 중국칭니엔보, Voice of America, Washington Post 등
정리방식	내부동향, 대남동향, 대외동향, 주요인물 동정, 월간보도 일지	부문별 주요기사는 대내경제, 대외경제, 남북경협, 북한언론 등으로 세분화

□ 남북한 건축관련 주요 법제도 비교 및 통합방안 연구

- 북한 건축관련 주요 법제도 통합 준비와 관련하여 남북한 건축비교 연구 진행
- 향후, 통합 시 주요쟁점사항 등을 도출

2) 2단계 통일준비시기 : 남북한간 통일준비를 위한 법제도 통합 : 기존 건축물 활용 및 신규 건축물 공급방안 마련

① 신규 건축물 공급방안 마련

□ 북한지역 공공서비스시설 공급 기본계획 수립

-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준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의료 등 각 서비스별 공급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하여 통일시 필요한 재원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예측을 통하여 단계별 공급방안 마련이 필요
- 소요자원, 남북한간의 격차 등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인구 등을 고려한 단계별 공급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

□ 신규 공급수량을 고려한 자재, 인력 수급 방안 마련

-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계획과 더불어 건축사, 전문건설인력에 대한 공급방안을 통일준비 단계에서 검토하여 기존 시설들에 대한 재배치 계획 등 필요

② 기존 건축물 현황파악 및 활용방안 마련

□ 북한 건축물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남한의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과 같은 북한건축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한 작업이 1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에서의 진행보다는 독일의 연방지원 정책에서와 같이 지역별, 생활권역별로 진행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

□ 기존 사회주의 건축물 활용방안 마련

- 통일 준비단계에서도 북한지역에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건축물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일제강점기의 건축물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되고 있음

□ 기존 접경지역, 군사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용도전환 계획 수립

- 통일 이후 수요가 급감할 기존 군부대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독일사례에서도 기존의 병영시설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확보 필요
- 비무장지대 기존 건축시설의 용도전환 필요
 - 통일 과정에서 접경지역은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남북 화해와 신뢰구축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③ 건축 법제도 및 기술기준 통합

□ 건축분야 법제도 정비 및 건축 기술기준 통합

- 남북 통합 건축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마련
 - 남북간의 공통된 설계기준의 설정, 초기단계에는 남북간의 기술격차를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적용하되 향후 공통기준으로 설정

문화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재, 건축자산으로서의 건축 -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 활용 과제	1	남북 건축문화 유네스코 등재사업
	2	건축문화재 유지보수 기술자 교류사업
	3	한국건축사에 대한 공동편찬 작업
	4	남북 유적관광지 개발사업
	5	남북한 건축자산 지도 발간
미래 공동의 문화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건축 - 근현대 및 미래 구상을 위한 과제	1	남북한 건축분야 용어사전 발간
	2	북한건축 실태파악을 위한 북한건축동향 발간
	3	통일시대 북한지역 건축공모전 개최
	4	남북한 한옥공모전 개최
	5	통일한국 건축문화 전시관 운영
	6	북한도시건축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사회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법제도적 관점에서 건축 - 기존건축물, 낙후지역 개선	1	노후건축물 감축 및 성능 개선사업
	2	농촌 및 산간지역 건축물 지원사업
	3	농촌지역 축사지원 사업
	4	시범영농단지 조성계획 공동수립
	5	기존 공동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방안
주민생활과 관련한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건축 - 신규건축물 유형별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1	의료시설 확충사업
	2	친환경 결핵요양시설 기술지원 사업
	3	북한 청소년 체육센터건립
	4	학교, 유치원, 보육원 확충사업
	5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적정주거기준 설정

경제·산업·기술적 관점에서의 건축분야 과제 목록

국토 및 도시분야와 연계한 건축 -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	1	도시 주거관련 합작 프로젝트
	2	기초생활권 정주환경 개선 정비사업
	3	경제개발구 사업과 연계한 건축사업
건축생산능력과 관련한 건축 - 건축자재, 인력, 기술 향상	1	건축자재 생산능력 진단 및 향상방안
	2	전문기술인력 공급방안 마련
	3	남북한간 기술격차를 고려한 적정기술 개발 방안 마련
	4	주요 도시별 산업훈련센터 운영

제6장 결 론

1. 연구의 성과
2. 향후 추진방향 제안

1. 연구의 성과

□ 통일관련 건축분야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남한에서 추진 중인 통일부, 국토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정책동향과 주요 추진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여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은 막연한 것이고 정보획득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제한적이거나 공개된 북한관련 매체, 탈북자, 국제기구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선행연구와 기관들이 연구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

□ 통일준비에 대한 부처 및 민간기관의 공감대 형성

국토부 건축담당 부서인 건축국에서도 통일대비 중장기 추진방안 검토되는 등의 여건변화가 있었다. 건축정책과에서는 국토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하여 대한건축학회 통일대비 건축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등이 발주되어 진행 중이며, 건축문화경관과 : 도시건축 박물관에 상설전시공간으로 '통일한국관' 등이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건축관련 단체 및 전문가 그룹에서의 통일대비 과제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1차적으로 형성되었다. 대한건축학회의 경우, 70주년 기념행사의 주제로 통일한국을 주제로 전시,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2. 향후 추진방향 제안

□ 건축분야 추진 로드맵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한 전략계획 마련 필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기초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통일대비 건축분야의 최근 동향과 정책방향을 통하여 향후 추진가능한 로드맵을 1차적인 초안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각 추진목표, 전략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전문가 그룹 및 타 부처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건축분야 추진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종합적인 전략계획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통일대비 건축분야 정책, 연구기관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통일분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담당부서와 건축관련 연구 및 주요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세미나, 정책과제 발굴 등이 필요하다. 각 기관 별로 통일관련 주제를 새로운 사업분야로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으나, 각 기관에서 구축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유사한 과제를 중복하여서 진행하는 등의 경쟁보다는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북한지역에 대한 정보는 정부부처 차원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부문의 경우, 협회 등을 중심으로 건설관련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한반도인프라 포럼’사례 등이 참고될 수 있다. 한국건설협회와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이 협력한 방식으로 건설분야, 물류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 북한과의 작은 단계에서의 건축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통일에 대한 대상인 북한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현황파악, 계획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행가능한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14년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가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남북한의 건축 전시를 위하여 북한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계자를 접촉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해외의 콘텐츠 및 전시관계자들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보고서)

국토교통부(2015), 「북한 건설·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 국토교통부

김동성, 신종호, 노진국(2014), 「2014 경기도 남북교류 기본구상」, 경기개발연구원

김원배, 이성수, 류재영, 박상우(2006),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 국토연구원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 도서출판 발언

박영정, 양현미, 김혜준, 송승섭, 안창모, 전영선(2002), 「북한 문화시설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박용석(2012), 「북한 경제 및 건설시장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배형민, 안창모, 조민석(2014), *Crow's Eye View : The korean Peninsula*, archilife

윤혜정, 장성수(1997), 「통일시대 국토개발의 방향-북한의 어제와 오늘, 통일한국의 내일」, 태림문화사

이석(2011),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 KDI

이석기(2015.9), 「북한 산업통계」, 산업연구원

이상준, 김원배, 김정석, 스테판 마렛츠케, 벤델린 스투르벨트, 칼-페터 쉐(2000), 「통일독일의 지역 개발 경험과 북한의 지역개발 과제」, 국토연구원

이상준, 김천규, 이백진(2012),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이상준, 김천규, 이백진, 이진민, 배은지, 김흠, 임강택, 장형수, 김경술, 나희승, 김의준(2013),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 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국토연구원

이상준, 박태선, 박세훈, 강호제, 이백진, 전성제, 배은지(2014),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비교와 정책 과제」, 국토연구원

통일부(2015), 「2015 통일백서」, 통일부

통일부(2015), 「15년도 북한주요기관단체인명록」, 통일부

통일부(2003.6.23.), 주간북한동향 제646호, 통일부

통일부(2002.4.29.), 주간북한동향 제589호, 통일부

통일부(2009.8.3), 주간북한동향 제955호, 통일부

통일원(1992), 「92북한개요」, 통일부

통일연구원(2010), 「북한정보관리체계 실태조사」,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201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한국정책금융공사(2010), 「북한의 산업」, 한국정책금융공사

현대경제연구원(2014), 「북한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제도화 방안 연구」, 통일부

BBSR(2011), “40 Jahre Städtebauförderung”, BMVBS

Berlin(2008), Die Sanierung der Spandauer Vorstadt 1993–2008 Prozess und Ergebnis, Bezirksamt Mitte von Berlin Abteilung Stadtentwicklung Amt für Planen und Genehmigen

Hoyerswerda(2008), NSEK für die Stadt Hoyerswerda Fortschreibu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2009),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DPR Korea

(발표자료)

국토교통부(2015),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자료’

조한범(2013), ‘동아시아 그린테랑드, DMZ 세계평화공원’, 희망의 DMZ세계평화공원 학술회의 자료집, 통일연구원

Petra Lütke(2013), *Gutachterverfahren Wittenberge – Jahnschulviertel*, Innenstadtforum

(보도자료 및 뉴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3.28.), ‘달려있던 북한지도, 일반에 모습 드러내 : 북한 지도(지형도, 위성지도, 수치지형도) 3.28부터 공개’

통계청 보도자료(2011.3.22.), ‘북한 인구조사와 인구센서스 분석’

통일부 보도자료(2015.6.25.), ‘정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등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마련을 위한 사업에 기금 지원을 결정’

통일부 보도자료(2014.7.1.) ‘개성 한옥 보존 사업 관련 방문 승인’

머니투데이뉴스(2015.5.6.) 캠프, ‘투트랙’통일연구 시동... 전담 연구센터 설립

(학술논문)

남효석, 이문보(2000), “남북한 건축 관계 법령 및 제도의 비교”,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v.20,n2, p235–238

문지훈, 김세훈(2015), “북한 나선시 도시개발과 남산 18호동 살림집을 통해 본 북 중 합작 개발의 특성”, 「국토계획」, 제 50권 제1호(통권211호), p115–134

서동훈(1991), “북한의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현황”, 「건설」 183호

이왕기(2015), “김정은 시대 건축의 계승과 변화”, land & housing INsight, vol21, 2015,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p18–31

홍성원(2014), “북한 주택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건설 및 매매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Jürgen G. ddecke-Stellmann Thorsten Wagener, "Die Städtebauförderung – ein wichtiger Begleiter des ostdeutschen Transformationsprozesses", 20 Jahre deutsche Einheit,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Heft 10/11,2010)

(홈페이지)

2015 대통령 업무보고(통일부) <http://2015plan.unikorea.go.kr/2015plan/index.html>(2015.7.10.)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http://www.molit.go.kr/2015plan>(2015.2.5.)

구글 이미지 검색 <https://image.google.co.kr/> (2015.11.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2015.2.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aia.re.kr/>(2015.10.5.)

독일환경부 <http://www.bmub.bund.de/>(2015.5.21.)

독일 도시개발지원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2015.5.21.)

독일 라이프즈거 <http://www.leipzig.de>(2015.5.21.)

독일 베를린시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2015.5.21.)

독일 오스나브뤼크 지자체 <http://www.osnabrueck.de/konversion/startseite.html>(2015.5.21.)

독일 saltmann건축사사무소 <http://www.saltmann-architekten.de/>(2015.5.21.)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http://www.korean-pavilion.or.kr>(2015.4.21.)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2015.6.20.)

월간SPACE <http://www.vmspace.com/>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 <http://www.prism.go.kr> (2015.2.10.)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2015.2.10.)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http://www.unilaw.go.kr/mainWeb.html> (2015.1.31.)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2015.4.5.)

통일준비위원회 <http://www.pcup.go.kr/main.do>(2015.6.30.)

한국토지주택연구원 <http://lhi.lh.or.kr/>(2015.3.3.)

한반도국토포럼 홈페이지 <https://naek.or.kr>(2015.9.1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http://www.unikorea.go.kr/trustprocess/> (2015.6.20.)

AA School visiting School-평양 <http://www.pyongyangschool.org/> (2015.10.1.)

DMZ통합정보시스템 내 대성동마을 <http://www.dmz.go.kr/korean/wantknow/step2>(2015.4.3.)

Basic research for the architecture based on the unification age

Um, Woon Jin
Yeo, Hae Jin
Lim, Hyun Sung

1. Introduction

Park Geun-hy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basic direction of unification, including through the 2014 Preparatory Commission established after the reunification Dresden Declaration ('14.8.7.), National Liberation Day ('14.08.15). Livelihood from a small town, with respect to the architecture sector leaving the two Koreas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with infrastructure cooperation with the Civil excavation of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was referring to recovery of homogeneity, from small busin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first, is to build a unified basis for a summary of the relevant existing discussions, and second is to set up a unified architectural contrast advocacy directions and step-by-step unification prepare goals and challeng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ssumes three kinds of architectural framework. First, the economy, industry and the architecture sector, including with respect to construction, building production systems and related land and the construction of urban areas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Second, building construction related to construction, residents living in the service of the institutional process in terms of the social point of view. Third, the construction of a cultural perspective, the building was divided into architectural forms, futuristic shared value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aims to restore homogeneity.

2. Trend of Unification Preparation

Promote unity against the architecture sector trends are examined separately in policy, business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case of policy areas, we looked at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and a unified organizing committee, united against the architecture sector in promoting business by central government. For businesses,

social economy, industry belongs to the business such as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projects and academic exchanges and cultural events in the cultural dimension driven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In the case of policy areas, there are ongoing reunification various policies, etc. Preparatory Committe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section. For the private sector, since the 1990s began to study various outcomes are introduced. Depending on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a wide range of North Korea-related information are also available on the private time began. This business also began to be economic cooperation and various Kumgang developmen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but been some projects, the situation does not is being promoted as a full-fledged exchange step.

3.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 Architecture

Percep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rth-South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is to be considered part of the key in the course of the next integration, unification. First, the architecture of the economic, industrial and technical point of view look at for building materials, etc., professionals into the North region. Except for the Pacific region and the architecture of the majority of urban areas and the areas identified in the 1980s, the level of South Korea and the lack of basic industries have been identified as poor based on the building materials-related businesses. Second, the architecture of the social perspective is looked at as the principal subject of construction, the building of socialist city in the last cultural perspective building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building standards and housing schemes.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the North and the South Building construction is a construction made according to the state-controlled use. Reportedly also it emerged that limited individual ownership structures, but include personnel and related materials are managed by the State through the total planning and construction.

4. Architecture Sector Case Study of German unification

In Germany, it did not establish a separate policy before the reunification of the city and the architecture sector. But the city was built and the architecture sector policies that were already running tantanhi in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even complementary, animals and reduce the gap between urban architectural development

between the West by applying it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Therefore, introducing promote progress, the application was being urban and architectural fields policy of 'urban development support' (Städtebauförderung) in the unified around West Germany and then united what are sub-programs of this policy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West German city of GDR cities and nine and balancing I looked at whether.

Which was presented as the main challenge is 6 kinds of as "system architecture urgent deal of change ',' underdeveloped urban reconstruction of the former East German", "residential improvement of the former East Germany ',' social convergence ',' City of the Moving Population decline, " such as a local revitalization. In order to solve each of these policies, including pilot urban projects, urban light, positive urba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with a focus on the history and culture policy area was conducted. Notably it can establish a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o meet the local conditions stadumbau for major urban areas by separat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promoting "social welfare city 'policies linked to the existing welfare and urban strategies.

5. Reunification era building architecture field-based projects

The goal of the architecture sector practices to examine in this study may also need to be addressed step by step. The first step is to prepar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sector, second step is to prepare for the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unify legislation ready, third steps is provided integrated legal system. Reunification Plan is the principle of unity is sustained in coming has been presented by the North Korea policy direction in the concrete practical steps in each government. Park Geun-hye, the government presented a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building 'as one of the four national trend, and it was presented as a predominant strategy Peninsula trust process" was set up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which the major national tasks.

3 The goal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is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Korean peninsula peace, unification-based deployment. North-South relations should pursue the common sense and the new international norm established through inter-Korean relations, economic · socio-cultural community

building through the reciprocal exchange · expansion of North-South cooperation and mutual benefi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o build a military confrontation and ease the economic · cultural communities through the sustainable peace through a "small reunification 'aims to gradually unify the" great unity "through · political 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Unification-based building society seeks to expand its competence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and build a unified base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itiatives in conjunction with the preparation of the architecture sector may be important also considering scenarios for reunification corresponding challenges. For such variables, regardless of the reunification plan for sudden changes and accentuated seriously addressed in a unified field. The correspondence also a wide range in the architecture sector could also be made step-by-step preparations for a large-scale population movement caused by the sudden change occur, such circumstances can one challenge to be ready. However, in this study, we propose to review the need to respond to challenges in a step-by-step 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unified Korean community plan "official uniform way in dealing with South Korea. This is because because it is the basic direction of unification, has gradually preparing the necessary geonchukgye yet because they have not been provided with various scenarios correspond to your environment. Therefore, at this time, and that of North-South exchanges should be first, and the like,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cultural exchange and the architecture sector dimensional cooperation in the humanitarian dimension, the way that promo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 and joint can be reviewed.

6. Conclusion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by reviewing th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existing in the dimension we obtain the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Through a unified basis, based on the discussions that were organized to discuss existing initiatives proposed in the futur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had limitations do not show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 Group. However, it should be started against a unified research at that point to future research. Future Roadmap possible through the recent trends and policy direction of unification against the

construction sector were presented in draft primary level. In the early stages presents a feasible project for unified policy against the construction sector, research institutions council and co-operation, based on a unified era building construction through cooperation and promote business opportunities in small steps with North Korea. Each has a future promotion goals, the need to refine the construction sector through initiatives such as the ongoing collaboration group of experts and other departments for such strategies an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trategic plan

Keywords: unification, architecture, culture exchange